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2025년 9월

대한민국 정부

목 차

I . 국가비전, 국정원칙, 국정목표 1

II . 123대 국정과제 7

I. 국가비전·국정원칙·국정목표

I. 국가비전, 국정원칙, 국정목표

1 국정과제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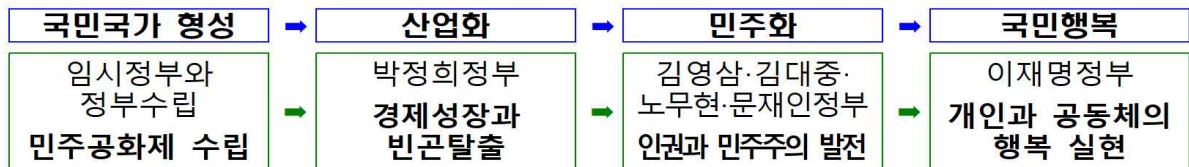
국가 비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국정 원칙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				
국정 목표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추진전략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확립 2. 정의로운 국민통합의 실현 3.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정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AI 3대 강국 도약 2. 기초가 탄탄한 과학기술 3. 혁신으로 도약하는 산업 르네상스 4.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5. 성장을 복돋는 금융혁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2. 활력이 넘치는 민생경제 3. 협력과 상생의 공정경제 4. 희망을 실현하는 농산어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 2. 내 삶을 돌보는 복지 3.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 4.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 5. 누구나 존중받는 일터 6. 내 삶에 기회를 여는 성평등 7. 각자의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 8. 함께 누리는 창의적 문화국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에게 신뢰받는 강군 2. 평화 공존과 번영의 한반도 3. 세계로 향하는 실용외교
123대 국정과제	19개 과제	29개 과제	23개 과제	37개 과제	15개 과제

2 국가비전, 국정원칙, 국정목표

□ 국가비전 :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 과거 정부의 업적을 계승, ‘먹사니즘과 잘사니즘의 물질적·정신적 행복’을 구현하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역사적 소명

< 시대정신의 역사적 변천 >



- “국민이 주인인 나라” : 국민과 상시 소통으로 국민의 주권 의지를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하여 ‘살아 있는 민주주의’ 실현 의지 표명
-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 ‘각자도생(各自圖生)’을 넘어, ‘공존동생(共存同生)’하며 삶의 질과 행복을 높여 나가겠다는 새로운 방향 제시

□ 3대 국정원칙 :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

- **(경청과 통합)** 민생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진영과 이념을 넘어 다양한 주체들과 통합하여 국정을 운영

- ✓ “‘대화 민주주의’야말로 현대 정치의 핵심 원리”(Anthony Giddens)
- ✓ “개인의 자율성과 다양성 속에서 상호의존적 관계에 기반하여 결속을 이루는 것이 통합”(Émile Durkheim)

- **(공정과 신뢰)** 기회균등과 특권 해소의 기초하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부 지향

- ✓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사회제도 제1의 덕목”(John Rawls)
- ✓ “신뢰는 경제와 민주주의 발전의 토대인 ‘사회 자본’의 핵심 요소”(Robert Putnam)

- **(실용과 성과)** 변화하는 현실에 맞게 신속하고 유연하게 혁신함으로써 국민 삶에 도움이 되는 성과 도출 추진

- ✓ “나라를 다스림에는 실상(實狀)을 살피고 실제(實際)에 따라야”(정약용, ‘實事求是’)
- ✓ 이재명 대통령은 평소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증명의 정치’를 역설

□ 5대 국정목표

5대 국정목표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①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 국민을 배제한 독단적 정치, 분열·갈등을 조장하는 권력에서 벗어나, 국민과 함께하는 국정운영 시스템 확립으로 **‘통합을 위한 정치’ 실현**

②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 인공지능(AI)·에너지·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육성으로 저성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이끄는 **‘성장의 시대’ 실현**

③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 지역간·계층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수도권과 지역,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와 경영자가 함께 성장하는 **‘균형성장 국가’ 실현**

④ 기본이 튼튼한 사회

- 기본적 삶을 위한 소득·주거·의료·돌봄이 보장되고, 안전하고 존중받는 사회환경 속에서 모두가 창의적 문화를 누리며 **각자의 가능성을 실현**

⑤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 급변하는 세계질서 속에 한반도 평화 정착과 국익 최우선의 실용외교를 통해 전지구적 의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로 도약**

II. 123대 국정과제

II. 123대 국정과제

국정목표 ①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국정목표	추진전략	국정과제	주관부처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19개)	■ 전략 1 :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확립		
	[국정01]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	국조실
	[국정02]	국민의 군대를 위한 민주적·제도적 통제 강화	국방부
	[국정03]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	법무부
	[국정04]	경찰의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 강화	행안부·경찰청
	[국정05]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강화	감사원
	[국정06]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사법체계 개혁	법무부
	[국정07]	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 주권 향상	방통위
	[국정08]	모두의 존엄과 권리가 보장되는 인권선진국	인권위
	■ 전략 2 : 정의로운 국민통합의 실현		
	[국정09]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	국조실
	[국정10]	국민통합을 지향하는 과거사 문제 해결	행안부
	[국정11]	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 실현	보훈부
	[국정12]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보훈 체계 구축	보훈부
	■ 전략 3 :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정부		
	[국정13]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	인사처
	[국정14]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혁신하는 정부	행안부
	[국정15]	국민이 체감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반 확립	국조실
	[국정16]	국민권익을 실현하는 반부패 개혁	권익위
[국정17]	재정운용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기재부	
[국정18]	성장과 민생에 기여하는 공공기관 경영 혁신	기재부	
[국정19]	민생·안전과 공정·상생을 위한 규제 합리화	국조실	

국정목표 ②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국정목표	추진전략	국정과제	주관부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29개)	■ 전략 1 : AI 3대 강국 도약		
	[국정20]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고속도로 구축	과기정통부
	[국정21]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 구현	과기정통부
	[국정22]	초격차 AI 선도기술·인재 확보	과기정통부
	[국정23]	국민의 안전과 보편적 삶의 질 제고를 위한 'AI 기본사회' 실현	과기정통부
	[국정24]	세계 최고 AI 민주정부 실현	행안부
	[국정25]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	개인정보위
	■ 전략 2 : 기초가 탄탄한 과학기술		
	[국정26]	과학기술 5대강국 실현을 위한 시스템 혁신	과기정통부
	[국정27]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 및 과학기술 인재강국 실현	과기정통부
	[국정28]	세계를 선도할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	과기정통부
	■ 전략 3 : 혁신으로 도약하는 산업 르네상스		
	[국정29]	신성장동력 발굴·육성으로 첨단 산업국가 도약	산업부
	[국정30]	주력산업 혁신으로 4대 제조강국 실현	산업부
	[국정31]	미래 모빌리티와 'K-AI 시티' 실현	국토부
	[국정32]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	복지부
	[국정33]	서비스업 경쟁력 제고로 내수·수출 활성화	기재부
	[국정34]	제3벤처붐으로 여는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중기부
	[국정35]	미래 신기술로 성장하고, 글로벌로 도약하는 중소기업	중기부
	[국정36]	경제·산업 도약을 위한 신산업 규제 재설계	국조실
	[국정37]	통상으로 지키는 국익, 흔들림 없는 경제안보	산업부
	■ 전략 4 :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국정38]	경제성장의 대동맥, 에너지고속도로의 구축	산업부
	[국정39]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산업부
	[국정40]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	환경부·국조실
	[국정41]	탄소중립을 위한 경제구조 개혁	산업부·국토부
	[국정42]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환경부
	[국정43]	국가 기후적응 역량 강화	환경부
	[국정44]	모두가 누리는 쾌적한 환경 구현	환경부
[국정45]	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	환경부	
■ 전략 5 : 성장을 복돋는 금융혁신			
[국정46]	진짜 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국민성장펀드 100조원+α 조성)	금융위	
[국정47]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	금융위	
[국정48]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금융위	

국정목표 ③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국정목표	추진전략	국정과제	주관부처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23개)	■ 전략 1 :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국정49]	'5극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	행안부·국토부
	[국정50]	행정수도 세종 완성	국토부·행복청
	[국정51]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균형성장 거점 육성	국토부·산업부
	[국정52]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치분권 역량 제고	행안부
	[국정53]	지방재정 확충으로 자치재정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행안부·기재부
	[국정54]	소멸위기지역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	행안부
	[국정55]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교육부
	[국정56]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	해수부
	[국정57]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	국토부
	■ 전략 2 : 활력이 넘치는 민생경제		
	[국정58]	금융안정과 생산적 금융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	금융위
	[국정59]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	금융위
	[국정60]	국민 생활비 부담 경감	기재부
	[국정61]	다시 일어서는 소상공인, 활기 도는 골목상권	중기부
	[국정62]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국토부
	[국정63]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	국토부
	■ 전략 3 : 협력과 상생의 공정경제		
	[국정64]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공정위
	[국정65]	소비자 주권 실현 및 불공정행위 근절	공정위
	[국정66]	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금융위
	[국정67]	기술탈취는 근절하고, 상생의 기업환경 조성	중기부
	■ 전략 4 : 희망을 실현하는 농산어촌		
[국정68]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농식품부	
[국정69]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농식품부	
[국정70]	균형성장파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	농식품부	
[국정71]	어촌·연안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산·해양산업 혁신	해수부	

국정목표 ④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정목표	추진전략	국정과제	주관부처
기본이 튼튼한 사회 (37개)	■ 전략 1 :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		
	[국정72]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	행안부
	[국정73]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대응 강화	행안부
	[국정74]	국민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및 민생치안 역량 강화	법무부경찰청
	[국정75]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	노동부
	[국정76]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 안전하고 청정한 우리바다	해수부
	■ 전략 2 : 내 삶을 돌보는 복지		
	[국정77]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복지부
	[국정78]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복지부
	[국정79]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 보장	복지부
	[국정80]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농식품부
	[국정81]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	기재부행안부
	[국정82]	생애주기별 금융 자산·소득 형성	금융위
	■ 전략 3 :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		
	[국정83]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복지부
	[국정84]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복지부
	[국정85]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 건강 증진	복지부
	[국정86]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복지부
	■ 전략 4 :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		
	[국정87]	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육아 환경 조성	복지부
	[국정88]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	여가부
	[국정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국조실 등
	[국정90]	튼튼한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	복지부
	[국정91]	인구가족구조변화 대응 및 은퇴세대 맞춤형 지원	복지부
	[국정92]	인구 변동, 디지털 변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노동대전환	노동부
	■ 전략 5 : 누구나 존중받는 일터		
	[국정93]	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	노동부
	[국정94]	노동존중 실현과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부
	[국정95]	일, 가정, 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	노동부
	[국정96]	통합과 성장의 혁신적 일자리정책	노동부
	■ 전략 6 : 내 삶에 기회를 여는 성평등		
	[국정97]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	여가부
	[국정98]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	여가부
	■ 전략 7 : 각자의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		
	[국정99]	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	교육부
	[국정100]	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	교육부
	[국정101]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교육부
[국정102]	학교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	교육부	
■ 전략 8 : 함께 누리는 창의적 문화국가			
[국정103]	K-컬처 시대를 위한 콘텐츠 국가전략산업화 추진	문체부	
[국정104]	전 국민이 누리고 세계인과 소통하는 K-컬처	문체부	
[국정105]	자유로운 예술 창작 환경 조성	문체부	
[국정106]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	문체부	
[국정107]	3천만 세계인이 찾는 관광산업 기반 구축	문체부	
[국정108]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방통위	

국정목표 ⑥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국정목표	추진전략	국정과제	주관부처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15개)	■ 전략 1 : 국민에게 신뢰받는 강군		
	[국정109]	국방 환경 변화에 대비한 정예 군사력 건설	국방부
	[국정110]	한미동맹 기반 전방위적 억제능력을 바탕으로 전사적전통제권 전환	국방부
	[국정111]	강력한 국방개혁으로 전투임무에 집중하는 군체계 확립	국방부
	[국정112]	군인 사기진작을 위한 장병 복무여건 개선	국방부
	[국정113]	K-방산육성 및 획득체계 혁신을 통한 방산 4대강국 진입	방사청
	■ 전략 2 : 평화 공존과 번영의 한반도		
	[국정114]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 및 평화공존 제도화	통일부
	[국정115]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교류협력 추진	통일부
	[국정116]	분단고통 해소와 인도적 문제 해결	통일부
	[국정117]	국민과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통일정책 추진	통일부
	[국정118]	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성장의 미래 준비	통일부
	■ 전략 3 : 세계로 향하는 실용외교		
	[국정119]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주변 4국 관계 증진	외교부
	[국정120]	국제사회 공헌과 참여로 G7+ 외교 강국 실현	외교부
[국정121]	경제 안보·통상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외교 역량 강화	외교부	
[국정122]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향한 실질적 진전 추구	외교부	
[국정123]	재외국민 안전과 편익 증진 및 재외동포 지원 강화	외교부·동포청	

[국정목표①]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전략-1.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확립**

1 '진짜 대한민국' 을 위한 헌법 개정 (국조실)

□ 과제목표

- 개헌의 절차적 기반을 마련하고 개헌 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체제 실현

□ 주요내용

- (국민투표법 개정)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현행 「국민투표법」의 위헌 상황 해소
 - * 국회 계류 **국민투표법 개정안 주요내용** : ▲재외국민 투표제도 마련 ▲투표 연령 18세 하향 ▲선상·사전 투표 도입 등 투표제도 개선 ▲투표운동 자유 확대
- (국회 개헌특위 구성 요청) 개헌 관련 주요 의제 논의 및 개헌안 발의

* 개헌 주요 의제

-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
 - 대통령 책임 강화 및 권한 분산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
 -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 국회 개헌안 마련 논의 지원 및 정부 의견 제출
- (국민투표 실시) 개헌 논의 진행 경과에 따라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개헌 찬반 투표 실시

□ 기대효과

- 비상계엄 이후 훼손된 헌법정신 복원으로 헌정체제에 대한 국민자긍심 고취
- 지방분권 강화와 다양한 기본권 보장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

2 국민의 군대를 위한 민주적·제도적 통제 강화 (국방부)

□ 과제목표

- 국방 문민화 및 군 사법체계 개혁 등을 통해 군의 정치적 개입 차단
- 군 정보기관은 부여된 임무와 정체성에 부합하는 조직으로 개편

□ 주요내용

- (민주적 통제 강화) 부당명령과 계엄에 대한 통제강화 및 장병의 인식 제고
 - 계엄 시 국회의 정치 활동을 보장하고, 계엄 발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절차 강화
 - 위법·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군인복무기본법」 등 법령 정비
 - 민주주의와 헌법수호에 대한 장병교육 강화
- (국방 문민화) 국방부 문민통제 강화 및 군 인사시스템 개선
 - 국방부·국방부직할기관 고위급 직위에 현역·예비역 최소화 및 문민 임용 확대
 - 각 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및 관행화된 군인사 시스템 혁신
- (군 정보기관 개편) 군 정보기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면적 조직 개편
 - 방첩사는 세부 기능별로 필수기능 분산 이관 후 폐지
- (군 사법개혁) 군 수사·검찰기능의 국방부 통합, 군 수사기관에 대한 지휘·감독의 투명성 강화 등을 통해 독립적이고 공정한 군 사법체계 구축
- (육·해·공군 합동성 강화) 군 교육기관의 단계적 통합 추진 및 장교 양성체계 혁신

□ 기대효과

- 국민주권을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도록 하여 국민 신뢰 회복

3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 (법무부)

□ 과제목표

- 수사·기소 분리 및 법무부 탈검찰화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
- 공수처의 역량 강화

□ 주요내용

-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수청 신설
 - 법무부에 공소제기·유지 업무를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고, 종전 검찰청의 중대범죄 수사는 행안부 소속으로 신설하는 중수청이 전담
 - 공소청과 중수청 등 관계 기관의 상호 파견·겸직 등을 법률로 금지하여 인적 교류를 통한 유착 가능성 원천 차단
- (법무부 불가역적 탈검찰화) 법무부 내 보직 검사 및 국내·외 기관 파견 검사 인원을 검사 정원에서 감축하고, 필요 인원만큼 특정직인 ‘법무부 법무관’을 임용하여 대체
 - 검사가 법무부 주요 실·국장 등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근거 법령 개정
- (공수처 역량 강화) 공수처가 권력기관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인력을 보강하고, 그 임기를 연장하여 역량 강화
 -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공수처 수사절차에 관한 기존 입법 흠결 보완

□ 기대효과

- 수사·기소 권한 남용 방지,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력 강화
- 법무부의 지휘·감독 권한 실질화, 전문적인 법무행정 역량 축적·발전
- 고위공직자 범죄에 엄정 대응, 공수처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4 경찰의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 강화 (행안부·경찰청)

□ 과제목표

-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회복하고,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실질화
-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경찰 수사의 책임성·전문성 강화

□ 주요내용

-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치안 정책 전반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위원회의 법적 지위 강화, 심의·의결 대상 확대 등 추진
 - 행정위원회로서 지위·역할 강화, 위원회 산하에 경찰 관련 법안·주요 정책 검토 등 지원을 위한 사무기구 운영
 -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경찰청의 조치 보고 의무화 및 불이행시 감찰·징계 요구권 부여
- (경찰국 폐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으로 즉시 폐지
- (수사 책임성·전문성 강화) 사건 지휘·관리 강화 및 수사 연계 법령 정비로 주체적인 수사기관으로서 책임성 제고, 교육·인프라 확대로 전문성 향상
-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국가 치안 역량의 총량을 유지하되 지역 주민의 안전 수요에 부합하도록 이원화 자치경찰제를 단계적으로 확대*
 - * 범죄예방·여성청소년·교통 등 자치경찰사무 기능을 시·도로 이관
 - 제도 변경에 따른 치안현장 혼선 등 초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 협의체 구성, 세부방안 협의 및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면 시행

□ 기대효과

- 경찰의 민주성과 분권성 강화로 경찰권 비대화 우려 해소
- 법령·제도·인프라 개선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 체계 확립

5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강화 (감사원)

□ 과제목표

-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감사위원회의의 실질적 권한 확대
- 감사 운영의 내부통제 강화와 정책감사 논란 방지를 위한 법제화

□ 주요내용

- (감사위원회의의 권한 강화) 모든 감사계획 및 주요 공익감사청구 사항의 감사위원회 의결 의무화, 범죄 혐의 사건 고발 원칙을 「감사원법」에 규정
 - 감사 결과 발표 및 공직감찰 사항도 감사위원회의의 사전 의결 등을 통해 결정하고, 감사위원회의의 의결 결과에 대한 공개 범위 및 절차를 명확화
- (인권 친화적 감사) 감사 과정에 변호사 참여권 보장과 디지털 저장매체 포렌식 선별추출 원칙 및 감찰관의 외부 인사 임용을 「감사원법」에 규정
 - 이의제기 신청제도 정비와 감사 절차 준수 특별감찰 정례화로 감사 절차의 정당성 확보, 인사위 외부 인사 참여 등 내부통제도 강화
- (감사체계 재정립) ‘정책 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를 직무감찰 제외 사항으로 「감사원법」에 명확히 규정
 - 공공감사기준 정립 및 자체감사기구와 역할 분담 확대, 국회 지원기능도 강화
-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감사) 사전컨설팅 신청 주체 확대 및 법제화, 적극 행정 면책기준 완화 등 제도 활성화*, AI 등 혁신지원형 감사 분야도 확대
 - * 각 기관에 설치된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추진한 경우 감사원감사도 면책 추정

□ 기대효과

- 합의제 기구로 설립한 헌법정신에 충실한 감사 운영으로 국민 신뢰 회복
- 공직사회가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국가경쟁력 제고

6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사법체계 개혁 (법무부)

□ 과제목표

- 국민참여 및 인권중심의 제도 개혁을 통해 신뢰받는 사법체계 실현
- 인력 증원 및 사법 AI 시스템 구축으로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재판 보장

□ 주요내용

- (국민 중심의 사법제도 개혁) 국민참여재판 대상 확대, 수사·공소심의위원회 구성 다양화 및 기속력 강화 등 일반 시민의 사법절차 참여 대폭 확대
 - 사법개혁 추진 기구를 설치하여 수사기간 법정화, 수사·재판결과 전자통지의무화 등 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수행
- (인력 증원·처우 개선) 대법관·판사 정원을 단계적으로 증원하고, 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제고하며, 수사인력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
- (범죄피해자 지원 확대)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진술조력인 등 전문인력 확충,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 등 권리 보장 강화
- (변호사 조력권 강화) 국제기준의 변호사 비밀유지권 법제화로 누구나 변호사에게 안심하고 조력을 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사법 AI 도입) 인공지능 기반 사법지원·법률구조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효율성 제고, 취약계층 법률지원 범위 확대 및 범죄예방 정책 고도화

□ 기대효과

- 공정하고 신속한 사법제도 구현을 통한 국민 신뢰 회복

7 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 주권 향상 (방통위)

□ 과제목표

- 방송미디어의 공공성과 공익성 제고를 위해 법·제도 정비
- 미디어의 지역성·다양성 강화를 위한 지역·중소방송 지원체계 구축
- 시청자·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환경 조성

□ 주요내용

- (방송 공공성·자율성 회복)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공적기능 강화, 방송 보도·편성 자유, 방심위 심의의 독립성·책임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 공영방송 이사·사장 선임절차 개선 등 사회적 합의를 반영하여 방송 관계법령 정비
- (온라인 미디어 신뢰성 확보) 확증편향 등 서비스 부작용 해소를 위한 알고리즘 투명성 제고 및 이용자 선택권 보장 관련 제도개선
 - 허위조작정보 생산·유통 예방을 위한 사업자 자율규제 방안 및 규율 체계 마련, SNS 과의존 예방 등 아동·청소년 보호 방안 마련
- (미디어 사회적 책임 강화) 미디어교육 인프라 확충 및 맞춤형 교육을 통한 국민 소통·참여 역량 제고, 시각·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는 방송 접근권 보장 지원
 - 전국민이 이용가능한 EBS 교육콘텐츠 제작 지원, 재난 시 국민행동 요령 콘텐츠 제작 지원 및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한 분쟁조정제도 개선
- (지역·중소방송사*·공동체라디오 방송 지원) 지역 밀착형 및 지역 주민 참여 콘텐츠 제작 지원, 방송사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
 - * 지역방송사(케이블TV 지역채널 포함), 중소방송사(종교방송 포함)

□ 기대효과

- 방송미디어의 공공성·자율성 회복과 다양성 강화로 누구나 격차 없이 고품질의 방송미디어 서비스를 활용·향유

8 모두의 존엄과 권리가 보장되는 인권선진국 (인권위)

□ 과제목표

-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와 책임성 확보
- 국제인권기준 국내 이행 강화, 혐오·차별 방지, 노인·이주민 인권보장 강화

□ 주요내용

-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 인권위원의 민주적 정당성과 책임성 및 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책임성 확보로 인권보장 기능 강화
 - 인권위원장 등 선출시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인권위원 다양성 확보 및 견제장치 도입
 - 의사의 비공개 대상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등 회의 운영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 (국제인권기준 국내 이행 강화) 국제인권기준 상시모니터링 및 확산, 유엔 인권권고 국내 이행 촉진 및 인권위 사회권 조사 기능 부여
- (혐오·차별 방지) 혐오표현 실태파악, 혐오방지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 혐오·차별 방지 법제화 검토 및 공론장 마련으로 인권존중문화 확산
- (노인·이주민 인권보장 강화) 노인·이주민 인권보장 강화를 위한 실태 조사·정책개선 및 권리구제 통합 대응체계 구축
 - 노인 건강권·돌봄·고독사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권고, 의견표명 및 이행점검 강화
 - 이주 아동·여성·노동자 등의 인권보장 관련 주요 의제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

□ 기대효과

- 인권위 정상화와 책임성 확보로 국민 신뢰 및 인권보장 기능 회복
- 주요 인권과제 선제 대응으로 국민 인권수준 향상 및 인권선진국 위상 강화

[국정목표①]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전략-2. 정의로운
국민통합의 실현**

9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 (국조실)

□ 과제목표

- 성숙한 민주주의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
- 여·야 협치, 시민참여, 숙의공론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통합 실현

□ 주요내용

- (정부·국회 및 여·야·정 협치) 상설협의체 설치 및 합의 절차에 관한 규정 마련으로 당·정 사전 협의와 여·야·정 협의체의 안정적 운영
 - 상설협의체 운영지원을 위한 정부 내 입법전략 관리체계 수립·운영
- (대화·소통의 국민통합) 다름의 인정과 존중을 기반으로, 사회갈등*의 구조적 원인과 해결책을 찾아가는 대화기구로서 국민통합위원회 실질화
 - * 5대 사회갈등 : 이념, 젠더, 양극화, 지역, 세대
 - 부처 협업체계 강화, 주기적 대국민 보고회 등으로 제안 실효성 확보
- (시민참여와 숙의공론 활성화) 시민참여와 숙의, 민주시민교육 및 시민사회 활성화를 담당하는 (가칭)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근거법령 마련
 - 국가 주요 의제별로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하고, 숙의공론 진행
- (사회개혁을 위한 소통 협력) 정치·사회 개혁정책에 관해 시민사회와 제 정당이 참여하여 논의하는 사회대개혁 소통 플랫폼 설치 추진
 - 주요 정책에 관한 논의 결과의 이행상황을 관리하여 책임성 확보

□ 기대효과

- 국민통합의 제도화로 국정운영의 안정성 및 지속성 담보
- 시민참여와 숙의공론화를 통해 정책결정의 정당성 제고 및 국민주권 체감

10 국민통합을 지향하는 과거사 문제 해결 (행안부)

□ 과제목표

- 신속한 사건조사, 희생자·유족 결정 등으로 미해결된 과거사의 진상규명
- 희생자 유해발굴·봉환, 추념식, 트라우마 치유사업 등으로 실질적 명예회복

□ 주요내용

- (여수·순천 사건 진상규명) 여수·순천 10·19사건 조사기한 내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 심사 완료 추진
 - 희생자 유해 발굴 및 유전자 감식, 합동 추념식 지원, 희생자·유족 트라우마 치유사업 등으로 명예회복 지원
- (노근리 사건 명예회복) 노근리 사건 추념식 개최, 유족회 지원, 노근리 평화공원 관리·운영 지원, 희생자·유족 트라우마 치유사업 추진 등 명예회복 조치 지속 이행
- (간토대지진 조선인희생 사건 진상규명) 간토대지진 조선인희생 사건 진상규명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기반 조성 노력
- (일제 강제동원 피해 지원)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의 체계적인 유해조사 및 최신 기술을 적용한 신원확인 확대 실시
 - 유해 봉환을 위한 국제인권단체, 종교단체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외 추모조형물 추가 건립 등 지원

□ 기대효과

- 과거사 진상규명과 실질적 명예회복으로 희생자와 유족 등의 아픔 치유
- 과거사에 대한 정의 실현과 사회적 연대 강화로 인권신장과 국민통합에 기여

11 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 실현 (보훈부)

□ 과제목표

-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보훈의 가치를 정립하고, 보훈의료 접근성 확대를 통해 국가유공자의 건강한 삶을 보장
- 병역의무 청년들의 군 복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인식을 불식

□ 주요내용

- (합리적 보훈보상체계 재정립) 참전유공자 사망 후 남겨진 고령·저소득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 부양가족수당 지급 대상 확대
 - * 생계지원금 및 부양가족수당 지급 대상 확대 시 2만여 명 보훈대상자 추가 수혜
 - 상대적으로 보상수준이 낮은 대상에 대한 보훈급여금 추가 인상, 지자체 간 참전수당 격차 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이행강화 방안 마련
- (보훈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 보훈병원 없는 지역에 준보훈병원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동네의원)을 중심으로 보훈의료 위탁기관 대폭 확대
 - * (현재) 900개소(시·군·구 평균 약 4개) → (개선) 2,000개소(시·군·구 평균 약 9개)
 - 전문인력 확충,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 구축, 의료환경 개선 등 보훈병원 진료역량 강화,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서비스 제공 및 복지시설 확충
- (조국 수호에 대한 정당한 보상) 공공부문에 군 경력 반영 의무화 등 제대군인 권익 보장 및 구제 방안 마련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예우 강화) 생존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및 간병비 추가 인상, 독립유공자 유족 위탁병원 이용 연령제한 단계적 완화 추진

□ 기대효과

-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헌신이 합당한 보상으로 돌아오는 나라 구현

12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보훈 체계 구축 (보훈부)

□ 과제목표

- 독립-호국-민주의 균형 잡힌 보훈정책 추진을 통해 국민통합을 견인
- 일상에서 보훈의 가치를 공유하는 보훈 환경 조성과 높아진 국민 눈높이 및 국격에 걸맞은 보훈의 역할 확대

□ 주요내용

- (국민통합 보훈 추진체계 정비) 국가보훈위원회의 대표성·투명성 강화, 보훈 공공기관장 등의 역량·책임성 확보* 등 보훈 거버넌스 체계 확립
 - * 기관장·임원 추천 절차 개선 및 대국민 공개검증 등 제도 정비
- 보훈문화 진흥 관련 법·제도 마련 및 대국민 보훈문화 의식 실태조사 등 추진
- (보훈문화 체감도 향상) '25년 광복 80주년 기념행사의 차질 없는 이행 등 국민 참여 보훈기념사업 추진, 국민 체감형 보훈콘텐츠 및 교육 지원
 - 현충시설 건립, 국립묘지 조성* 시 국민 접근성 강화 및 관리 체계 개선
 - * 독립의 전당 건립, 연천현충원·횡성호국원·장흥호국원 조성
- (보훈으로 국격 제고) 유엔참전국 및 해외 독립운동 관련 국가와의 교류·협력 확대 등을 통해 균형잡힌 보훈외교 기틀 확립
 -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관리 및 활성화*, 국외 독립운동가의 묘소 실태조사 및 유해봉환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 *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실태조사 및 개보수 지원, 주요 국가·도시 거점 역사관광 벨트 조성
- 유엔참전용사 유해봉환 및 재방한 사업 활성화, 참전국과의 교류협력 강화

□ 기대효과

-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을 함께 기억함으로써 공동체 정신 고양, 국가 유공자와 유가족의 자긍심 제고 및 대한민국의 위상 강화

[국정목표①]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전략-3.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정부**

13 총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 (인사처)

□ 과제목표

- 공무원의 책임성 제고와 능력 중심 인사로 국민께 충직하고 일 잘하는 정부 구현
- 공무원이 자부심을 가지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공직문화 개선

□ 주요내용

- (공직사회 책임성 강화) 공무원의 헌법 가치 함양, 적극행정 활성화* 등을 통해 국민에 대해 책임을 다하는 공직사회 정립
 - *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 확대, 적극행정 보호관 제도 도입 및 소송 지원 확대
- (능력 중심 인사시스템 구축) 국민추천제 활성화, 전문분야 장기채직 확대, 공직 내 AI 인재 육성 등 전문성과 직무 중심의 인사체계 마련
 - 유능한 공무원 발탁을 위한 역량 기반 특별승진 절차(6급→5급) 신설
- (공직윤리 확립) 주식 관련 이해충돌방지 강화 및 부동산 거래내역신고제 도입, 취업 제한 내실화, 중대 비위 엄벌 등 공직사회 투명성 제고
- (일할 맛 나는 근무환경 조성) 저연차 실무직·현상공무원 처우개선*, 신규공무원 보직 전 기본교육 강화 및 육아친화적 공직여건 조성
 - * 7~9급 및 군 초급간부 보수 인상, 재난·안전담당 공무원 인센티브 강화
 -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 보장 및 위법·부당한 지시 불복절차 마련, '간부 모시는 날' 근절 등 공직문화 개선

□ 기대효과

- 공무원의 사명감 및 청렴도 제고, 적극행정 구현으로 국민 기대 부응
- 전문성 강화 및 인사시스템 개선으로 공직 생산성 및 정부 경쟁력 제고
- 합리적 공직문화 조성 등으로 우수인재 유치 및 공직몰입도 제고

14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혁신하는 정부 (행안부)

□ 과제목표

- 국민소통 활성화, 국민중심 민원처리 등으로 국민 맞춤 공공서비스 제공
- 정부위원회 내실화, 정보공개 강화 등으로 정책 책임성 및 투명성 강화

□ 주요내용

- (국민중심 소통 및 민원처리) ‘모두의 광장’(국민소통플랫폼)을 범정부 국민 정책참여 플랫폼으로 확대하여 국민과의 소통 일상화 및 제도화 추진
 - 인·허가 등 복합민원 원스톱 처리, 현장 중심으로 신속 민원 해결, 실질적 민원 해결 중심으로 평가·보상체계 개선
- (선제적·통합적 공공서비스 제공) 공공서비스 이용자격, 신청방법 등을 개인 맞춤형 알림서비스를 통해 선제적·통합적으로 제공
 - 4대 보험료 상담·납부·환급 등 필요한 서비스를 한 곳에 모아 처리하는 플랫폼 구축·운영
- (주민주도 문제해결) 주민참여 리빙랩* 추진, 주민이 발굴한 문제를 자치단체, 공공기관, 지역대학 등이 함께 해결하는 협업체계 구축
 - * 지역 단위의 생활형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주민이 직접 실험하고 해결
- (위원회 구성·운영 내실화) 정부위원회 구성 시 전문성과 함께 지역·세대·직능·사회적 약자 등 대표성 확대
 - 회의록, 예산집행, 운영실적 등을 공개하고 운영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
- (정보공개·기록물관리 강화) 정보공개 기준과 절차의 합리적 개편으로 정보공개 확대, 공공기록물 등의 생산·지정·열람·공개 등 서비스 개선

□ 기대효과

- 국민소통플랫폼, 신속한 민원해결, 국민 알권리 보장으로 참여·소통 일상화
- 주민주도 문제해결,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 향상

15 국민이 체감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반 확립 (국조실)

□ 과제목표

-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 실현을 위해 국민이 체감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반’ 확립
- 국가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강화 및 국민 참여·실천 활성화

□ 주요내용

- (지속가능추진체계 회복)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전략 이행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국가위원회의 민간위원 참여 확대 및 중앙-지방 지속가능발전책임관 협의체 구성,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지정 추진
 - 중장기 행정계획*과 법령의 지속가능성 사전검토 강화
 - * 국가기본전략과 관련된 중앙행정계획 198개
 -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26-'45) 마련, 중앙 추진계획 수립 및 지방 전략 연계 확산
-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확산) 지역소멸 대응 등에 대응, 지방 지속가능발전 사업 발굴,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지원 방안 검토
- (정책과정에 국민 참여 활성화) 지속가능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에 대해 숙의에 기반한 공론화장 마련
- (글로벌 리더십 강화) 국가이행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과 주요성과를 국제사회와 공유

□ 기대효과

-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사회 실현으로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
- 국제사회가 합의한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충실한 이행으로 국가 품격 제고

16 국민권익을 실현하는 반부패 개혁 (권익위)

□ 과제목표

- 부패방지제도 운영을 내실화하고 부패·공익신고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
- 국민 생활과 직결된 갈등과 고충민원을 적극 발굴·조정해 신속히 해결

□ 주요내용

- (부정부패 엄정 대응) 부정청탁금지 및 이해충돌방지 강화, 부패행위 실태조사
 - 고위공직자 민간 업무활동 내역 공개, 비위면직자의 취업 제한 규정 위반 시 처벌 기준 상향, 행동강령 강화로 소극행정 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
-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공익신고대상 확대, 보호 신청 처리 공정성 제고
 - 신고대상에 횡령·배임·뇌물·내란 포함, 중요 보호사건 민관위원회 심의
- (글로벌 반부패 경쟁력 제고) 준법감시 제도 확산, 민간 부문 부패 개선
 - 기업·공공기관의 자율적 부패 예방을 위한 준법감시 인증 제도 도입,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정이익 적극 환수, 미래세대 청렴교육 의무화 추진
- (AI 국민권익플랫폼 구축) 민원·제안 신청 편의 증진, 민원 분석 고도화
 - 대화형 AI가 만드는 맞춤 신청서, 빈발민원 분석으로 정책개선 방안 도출
- (국민고충 적극 해소) 집단 민원 선제 대응 및 표류하는 갈등 사안과 부처간 떠넘기기 민원을 적극 발굴하여 범부처 협업으로 해결

□ 기대효과

-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여 글로벌 반부패 리더로 위상 강화
- 사회 갈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사회적 비용 저감

17 재정운용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기재부)

□ 과제목표

- Top-Down 예산제도는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확보되도록 운영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 제고 및 국회의 재정통제 기능 강화
- 정부 예산안 관련 국회에 충분한 정보 제공, 규정 명확화 등을 통해 국회 심의권 강화
- 성과평가의 예산 환류 강화 및 재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제고

□ 주요내용

- (재정운용 자율성·책임성 확보) 예산편성 과정에서 부처의 자율성 확대 및 지출한도 미준수 페널티 강화 등 Top-Down 예산제도 실질화
 -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국가재원배분회의로 전환해 재정투자방향을 결정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을 구체화하여 국회 보고
 - 계획과 실적 차이, 재정의 경기대응 및 성장 기여도 등에 대한 충실한 분석을 통해 평가·분석보고서 내실화
- (예산안 국회심의 강화) 정부 증액 동의가 필요한 헌법상 ‘각항’의 의미 명확화, 원활한 국회 심사와 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예비비 사용내역 국회보고 강화
 - 신규 대규모 조세특례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건 구체화
 - 세수오차가 일정규모 이상일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추경사유에 추가
- (재정집행 투명성 제고) 회계·기금간 자금 전·출입 요건 구체화 및 실적 국회 보고, 고액·대규모 국유재산 매각·교환시 정부심의 강화 및 국회 사전보고
- (성과평가 강화·재정이해도 증진) 다수 부처에서 운영중인 재정사업평가 체계를 정비하여 평가결과와 예산 연계 강화
 - 재정교육 강화, 온라인 재정박물관 구축 등을 통한 대국민 재정이해도 증진
- (지방 행정·재정 운용의 효율성 향상) 지방자치·교육자치의 행정·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

□ 기대효과

- 재정운용 전반을 혁신해 국민이 낸 세금으로 더 나은 공공 서비스 제공
- 국민의 눈높이에서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 알권리 보장

18 성장과 민생에 기여하는 공공기관 경영 혁신 (기재부)

□ 과제목표

- 국민생활에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율성·책임성을 동시에 강화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지배구조를 개편하여 민주성 및 독립성 확보
- 지방공공기관의 지역균형성장 역할을 강화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체계 개편

□ 주요내용

- (공공기관의 경제·사회적 역할 강화) 공공기관별 국가전략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보유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핵심과제를 수행하도록 지원
 - 자산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공개·활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공공기관 ESG경영 확산을 위한 ‘공통적용 가이드라인’ 마련
- (경영 자율성과 책임성 동시 강화) 핵심과제 소요를 위한 조직·인력을 재정비하고 기관장 경영성과평가 실시, 임기규정 개정 등도 병행 추진*
 - * 임기·임명권자·임금수준 등을 규정한 공공기관 임원현황 목록(한국판 플럼북) 발간·공개
 -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공공기관 확대 및 활성화 추진
- (맞춤형 경영평가로 성과·역량 제고) 유형별 지표·배점·평가주기 개선, 평가 전문성 강화 및 평가 결과를 사업·기능조정 등에 적극 활용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독립성·대표성 강화) 공공기관 정책이 민주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민간위원 확대(구성원의 2/3 이상), 민관 공동위원장 체제로 전환
 -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공공기관 보수 관련 심사 기능 강화 추진
- (지방공공기관 대응성 강화) 지방공공기관도 지역균형 성장과 국가 현안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정보공시 확대 등 자율적 구조개혁 추진
-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역량 강화) 경제인문사회·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 정부수탁 사업비 제도(PBS)를 폐지*하여 출연(연) 본연의 역할 강화
 - * 경인사연 출연(연)은 '26년 완전 폐지, 과기계 출연(연)은 '30년까지 단계적 전환·폐지

□ 기대효과

- 공공기관의 전면적 경영 혁신으로 국민 편의 제고, 국가경제 발전 및 지역균형 성장에 기여

19 **민생·안전과 공정·상생을 위한 규제 합리화** (국조실)

□ **과제목표**

-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대상 규제애로 해소, 국민생활·기업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점검·개선하여 체감 제고
-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하되, 생명·안전 보호와 공정·상생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수요자 중심의 성숙한 규제개혁

□ **주요내용**

- (민생 규제 합리화)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 규제 및 사회적 약자 대상 불합리한 규제 과감히 개선
 - 행정·복지·교통·재산권 등 생활 불편 해소, 부처 훈령·자치법규 원점 재검토 및 공공기관 인증·평가제도 등 유사 행정규제 심사체계 마련
- (주력산업 맞춤형 규제개선) 내수 활성화 효과가 큰 콘텐츠, 관광, 의료 등 3대 서비스산업 분야의 현장 규제 애로 중점 해소*
 - * (예) 게임 등급분류 민간 이양,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비자 시행, 의약품 허가심사절차 간소화 등
 - 조선·방산·반도체 등 경쟁우위 산업 고도화를 위한 규제혁신, 형벌 중심 제재에서 민사적 책임 중심으로의 전환 등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
- (규제개선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규제애로·건의 플랫폼 일원화, 현장 방문·소통 확대(규제합리화 현장캠프 운영), 지자체별 규제혁신 평가를 통해 경쟁 유도
 - 환경변화에 따른 규제 적정성 점검을 위한 사후규제영향 평가, 규제법령 일괄정비 통한 개선 성과 확산, 공무원 감사 부담 완화 등 적극행정 활성화
- (AI 활용 전국민 규제정보서비스 제공) 창업·영업활동 등 맞춤형 규제상담, 지리정보를 활용한 지역별 규제정보 제공, 유사·중복규제 발굴·정비 등

□ **기대효과**

- 국민 생명·안전 등 삶의 질 향상 및 민생경제·산업활동의 역동성 제고
- 규제혁신 전 과정에서 국민 참여 확대로 국민주권 실현

[국정목표②]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전략-1. AI 3대 강국
도약**

20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고속도로 구축 (과기정통부)

□ 과제목표

- AI인프라 데이터를 확충하고, 네트워크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AI고속도로' 구축
 - ※ '26년부터 국내 GPU 수요 대비 정부공급률 30% 이상 유지('24년 5% 比 6배↑)
 - 6G 글로벌 표준특허 30% 선점(現 5G 26%(글로벌 2위) 比 4%p 상향)

□ 주요내용

- (AI컴퓨팅인프라 확충) 세계적인 AI 역량 확보를 위해 학계·연구계 및 중소·벤처기업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GPU 5만장 조기 확보 등 안정적 공급*
 - * GPU 기종과 수요자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요에 대응한 탄력적 지원
 - ※ GPU(Graphic Processing Unit) : 대규모 데이터 동시 처리에 특화된 반도체로 AI 연산에 적합
- AI데이터센터(AIDC)에 대한 세제지원·특별법 제정, 비수도권 전력계통 영향평가 우대, 친환경장비 실증 등 민간AIDC 생태계 육성
- (초지능 네트워크 구축) AI에 최적화된 6세대 이동통신(6G) 상용화와 실시간·초정밀 AI 서비스를 위한 지능형 기지국 확산
- (데이터 구축·개방) 국가 전체 공공·민간 AI 학습용 데이터 통합 플랫폼(~'26) 및 분야별(의료·제조 등) 데이터 스페이스 구축, AI 가독성 확보를 위한 통계 메타데이터 구축 등
 -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 데이터 안심구역 간 연계 및 「데이터산업법」 정비
- (국가AI위원회 역할 강화) 민·관의 AI혁신역량을 총결집하고 범부처 AI전략·정책에 대한 조정력을 발휘하는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로 격상
 - 규제샌드박스(AI트랙), 국가AI위원회를 통해 AI규제 선제적 발굴·개선, 규제최소화 원칙 하 「AI기본법」 시행령 마련('25.下) 및 유관 법령 정비

□ 기대효과

- 컴퓨팅자원 확보를 통해 학계·연구계 및 중소·벤처기업에 충분히 제공
- 국가 전체 데이터 연계 및 구축으로 국민·기업이 쉽고 편리하게 활용

21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 구현 (과기정통부)

□ 과제목표

- AI가 국가 핵심 인프라이자 필수재가 되어 국민 모두의 삶에 풍요롭게 기여
-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공존에 기여하는 나라 구현
 - ※ 글로벌 수준의 AI 파운데이션 모델(최신 글로벌 AI모델의 95% 이상 성능) 개발
 - 국내 산업의 AI 활용률 : 30.3%('23) → 60.6%('30)
 - 취약계층 AI·디지털 수준 : 77.5%('24) → 82.5%('30)

□ 주요내용

- (독자 AI모델 개발 지원) 민·관 협력 기반으로 AI 정예팀(최대 5개팀)에 GPU·데이터·인재를 집중 지원, 글로벌 수준의 독자 AI모델 확보(개발→오픈소스화)
 - AI파운데이션 모델* 기반 국민 AI접근성 증진, 공공·경제·사회 AX** 도모
 - * 대규모 데이터로 광범위하게 학습되어 다양한 작업 등에 범용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며, 일반적인 지식과 패턴 인식 능력을 갖춘 AI 모델
 - ** AX : 'AI 전환(Transformation)'의 약자로 AI를 활용하여 업무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것
- ('모두의 AI' 기반 구축) 누구나 AI 서비스를 체험·개발할 수 있도록 통합환경을 제공하고, AI 혁신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전국민 AI 캠페인·공간 조성
 - AI·디지털 기술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역량 강화 교육 및 지역별 사회기반 시설을 활용한 (가칭) AI디지털배움터 조성 추진
- (산업AI 전환 촉진) 제조기업에 AI팩토리 전환, 중소기업 대상 AI바우처 등을 지원하고, 서비스업(법률·의료 등)의 AI 전환 지원
- (지역AI 전환 지원) 지역특화산업의 AI전환거점인 광역별 AI혁신거점을 구축하고, 첨단 산단을 AI로 전환하는 AX실증산단(지원프로그램 집적) 조성
- (혁신AI스타트업 육성) AI혁신펀드 운영 및 성장 사다리 지원(장기간, 대규모 지원), 예비·초기 창업가 AI창업패키지 등 AI벤처·스타트업 창업·스케일업 지원

□ 기대효과

- 독자 AI모델 개발·활용으로 AI·데이터 분야 주권 확보
- 모두의 AI 기반 구축으로 지역·기업·국민의 AI 리터러시 제고

22 초격차 AI 선도기술 · 인재 확보 (과기정통부)

□ 과제목표

- AI 시대 성장을 견인할 최고급 AI 인재 양성·확보
- 범용인공지능, 저전력·고성능 AI반도체 등 초격차 AI 선도기술 확보
 - ※ 글로벌 AI 인재 역량 5위 확보 및 AI반도체 상용화(양산) 기업 10개 육성(~'30)

□ 주요내용

- (핵심인재 양성·확보) SW 중심대학을 AI 중심대학으로 전환·확대(30개), 과기원 AI 단과대학 설립, 대학·대학원 간 패스트트랙 운영 및 국내외 우수인재 확보(신진연구자 200명 등)
- (융합인재 양성) 다양한 산업 수요 기반 AX 인재 양성을 위해 3無(교재·강사·학비) 기반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확대 및 AX대학원 설립 추진(15개)
- (차세대 AI원천기술 확보) 거대언어모델(LLM) 등 한계를 극복하는 초격차 기술, 미래 AI 판도를 흔들 차세대 원천기술(범용인공지능(AGI)) 확보 추진
 - 세계적 수준의 혁신적 AI연구에 도전할 수 있는 '국가AI연구소' 육성
- (AI반도체 산업생태계 확립) 다양한 국산 NPU + AI서비스 패키지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확대 및 사업화 적시 지원
 - NPU·PIM* 등 차세대 AI반도체 기술력 선점을 위한 R&D 추진
 - * NPU(Neural Processing Unit) : AI연산에 특화된 프로세서로 전력 소모를 최소화
PIM(Processing-In-Memory) : 메모리에 연산을 담당하는 프로세서 기능을 통합
- (피지컬 AI 적용 가속화) 사람처럼 행동하는 AI 구현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 및 공장·로봇·자율주행·자율운항선박 등 주요 산업 적용 가속화

□ 기대효과

- AI 인재 부국(富國) 실현으로 AI 3대 강국 도약 견인
- 우리나라 자체 기술 확보를 통한 글로벌 초격차 AI 기술 선점

23 국민의 안전과 보편적 삶의 질 제고를 위한 'AI 기본사회' 실현 (과기정통부)

□ 과제목표

- AI 기술로 모든 국민의 기본권이 적극적으로 보장받는 'AI 기본사회' 구현
- 국제협력을 통한 'AI 기본사회' 공동 실현을 위해 '글로벌 AI 이니셔티브' 추진
- AI 안전·신뢰 확보를 통해 국민이 AI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 민간정보보호 투자액 : 2.1조원('24) → 3조원 달성('28)
 - 삶의 질 향상 : UN HDI 20위('24)→17위('30)
 - AI 기본사회 국제 확산 : AI 기본사회 참여인구 10억 명 달성('30)

□ 주요내용

- (AI 기본사회 구현) AI 기술로 의료, 교육, 금융 등 사회 전반에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과 안전이 보장받는 'AI 기본사회' 실현 추진
 - 사회적 과급력,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 AI를 활용하여 사회시스템 전반의 개혁을 주도할 수 있는 프로젝트 과제 선정
- (글로벌 AI 이니셔티브) AI 기본사회 공동 실현을 위해 다수 국가가 참여하는 '글로벌 AI 컨소시엄' 구성
 - 다수 국가 참여 글로벌 AI공동기금 조성 및 아태지역 인재와 기업을 끌어들이는 허브(Hub)로서 AI특화 지구 조성 추진('27)
- (AI윤리·안전·신뢰 기반 조성) 딥페이크 탐지, AI 모델의 유해 콘텐츠 생성 사전차단 등 AI 오남용 대응 핵심기술 개발 및 상용화 지원
- (디지털 보안·안전 확보) AI로 지능화된 사이버위협에 효과적 대응을 위해 정보보호 제도 개편, AI기반 보안 시스템 구축 등 추진
 - 보안이 취약한 지역·중소기업 등 보안 사각지대 지원 강화, 피싱, 스미싱 등 민생을 위협하는 디지털 역기능 해소 및 정보보호 산업의 전략적 육성

□ 기대효과

- 'AI 기본사회' 구현을 통해 사회 전반에서 모든 국민의 기본권 적극 보장
- 국제협력을 통한 AI 기본사회 공동 실현을 통해 인류와 글로벌 사회 공공선 향상에 기여
- AI 오남용 및 사이버 침해 근절 등 AI 안전 사회 구축

24 세계 최고 AI 민주정부 실현 (행안부)

□ 과제목표

- 30대 핵심과제 추진 등 공공부문 AI 도입으로 대국민 서비스와 업무방식 혁신
- AI 공통기반 마련, AI 역량 강화,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AI 정부 모델 구축

□ 주요내용

- (30대 핵심과제 추진) 대국민서비스 혁신, 정부효율성 제고, 분야별 전문화 등 3대 분야에서 AI 정부 실현을 위한 30대 핵심과제 선정·추진
 - AI를 활용하여 국세·관세 등 민원처리, 탈세 적발, 공공조달 지원 등 서비스 혁신과 정부업무 효율화
- (공공 AI 기반 구축) 각 부처별 공공 AI를 빠르고, 안전하게 도입하는 핵심 인프라로 범정부 AI 공통기반 구현, 전 공무원 AI 역량 강화 및 인재양성
- (공공 AI 시장 창출) AI 혁신제품 공공조달 및 수요예보 등으로 공공 AI 시장 창출
 - 공공 AI 산업박람회, 공공 AI 성공사례 해외수출 등으로 AI 기업의 성장 기회 제공
- (공공데이터 개방) AI 서비스 개발수요나 기업요구가 많은 공공데이터를 중심으로 역점 개방 및 공유 확대
 - 기업 애로사항 파악 등을 위한 상시 접수 창구 운영 등 연구·개발 지원
- (공공 AI 신뢰기반) 공무원의 AI 윤리 내재화, AI 영향평가 도입, AI 활용 서비스 현황 공개 등 공공부문 AI 활용에 대한 안전성·신뢰성 확보

□ 기대효과

- AI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혁신으로 행정서비스 접근성·편의성 대폭 향상
- 유능하고 효율적인 공공 AI 기반 행정서비스로 세계 최고 AI 정부 도약

25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 (개인정보위)

□ 과제목표

- 개인정보 보호 책임성 강화 및 국민의 개인정보 권리 보장 확대
-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체계를 마련하여 AI 혁신을 지원

□ 주요내용

- (유출사고 신속·엄정 대응) 포렌식랩 등 기술 분석 인프라 확충, 피해 규모에 비례한 과징금 가중 및 중대피해 발생 즉시 유출공지 의무화
 - 다크웹 등 온라인 유·노출, 불법유통 개인정보의 탐지·삭제 시스템 고도화
- (정보주체 권리보장 강화)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잊힐권리 적용범위 확대, 딥페이크 등 합성·변조된 개인정보의 삭제 요구권 도입
 - 정당한 열람권 보장 및 안전한 CCTV 관리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법」 제정
- (사전예방 보호조치 확대) 기업 등의 개인정보보호 예산·인력 투자 준칙 마련('25.12), 개인정보 평가·인증 고도화 및 취약 분야 선제 점검
- (개인정보 법제기준 확립) 개인정보보호법을 기준으로 국민·기업의 고충·중복 규제를 정비하고 생활밀접 10대 분야로 마이데이터 제도 확산
 - 서울 국제 프라이버시 총회('25.9)를 계기로 개인정보 국제규범 형성을 주도
- (안전활용 증진) AI 학습용 원본정보 활용특례 도입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원스톱 가명·익명정보 활용 혁신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R&D 확대
 - 디지털 통상, 국제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국외이전 수단 다양화

□ 기대효과

- 공공과 민간 전 영역에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처리 환경을 조성하고 개인정보의 안전 활용을 증진하여 국가 AI 경쟁력 제고

[국정목표②]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전략-2. 기초가 탄탄한
과학기술**

26 과학기술 5대강국 실현을 위한 시스템 혁신 (과기정통부)

□ 과제목표

- 지속 가능한 R&D 혁신 생태계 조성으로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
 - * 삼극특허 수 4위(現 5위), 총연구개발인력 5위(現 6위), 피인용 10% 논문수 7위(現 12위), 하이테크산업 수출점유율 7위(現 12위), 딥테크 유니콘 50개 창출 등
- 국제협력 강화로 첨단기술 주권과 글로벌 과학기술 리더십 확보

□ 주요내용

- (R&D 투자시스템 혁신) 훼손된 연구생태계 복원을 위해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으로 R&D 예산 확대 노력, R&D 예산 심의의 전문성·전략성 제고
 - * 예산 배분 조정 기한을 충분히 확보하고, R&D 예산 심의 범위 확대
- 투자의 적시성·유연성 제고를 위한 R&D 예타 폐지, 개방성 강화를 위해 정책 수립 및 R&D 예산 배분·조정 전 과정에 민간 참여 확대 추진
- (연구전념·성과창출 환경 조성) 불필요한 연구행정 부담 대폭 완화하고, R&D 성과를 국가 성장으로 연계하는 (가칭)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 마련
- (출연연 PBS* 단계적 폐지) '30년까지 재정구조를 출연금 중심으로 단계적 개편, 단기·과편화된 연구시스템을 중장기·임무중심형으로 전환
 - * Project-Based System: 출연금 외 수탁 과제를 통해 연구비·인건비 등을 충당하는 제도
- 국가·기관 임무 중심으로 통합 성과평가 체계 구축
- (전략적 국제협력 강화) 연구자·기관 중심의 국제협력 전략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연구안보 체계 마련과 첨단기술 분야 전략적 협력 강화
- (지역 자율 R&D 강화) 부처별로 집행되던 지역 R&D 사업을 지역이 스스로 기획·집행하고, 부처가 함께 성과를 관리하는 '지역 주도 R&D' 체계로 전환
 - 5극3특 지역 수요에 맞춰 융합연구 및 대규모 실증을 지원하고, R&D+서비스가 집적하는 '연구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과학문화' 인프라 확대

□ 기대효과

- 연구개발 생태계 복원을 통해 예산 삭감 등으로 실추된 과학기술인의 자긍심 고취
- R&D 시스템 혁신으로 연구자 자율성 제고 및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

27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 과 과학기술 인재강국 실현 (과기정통부)

□ 과제목표

- 기본연구(소규모, 장기) 사업 복원 등 기초연구 생태계를 회복하고, 청년 연구자 등을 위한 전주기 지원체계 확립
-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인재양성 로드맵을 수립하고, 신진·석학급 해외 우수 인재를 전략적으로 유치·확보

□ 주요내용

- (기초연구생태계 확충) 과제 수 대폭 확대(現1.2만개 → '30년1.5만개) 및 장기·안정적 과제를 확대, 글로벌 TOP 수준의 국가연구소 선정·육성
 - 선도적 연구를 위한 대형 연구인프라 확충(가속기·핵융합·연구로 등) 및 첨단장비 국산화, 안전한 연구생활을 위한 '연구실 안전관리 지원체계' 확립
- (청년 과기인 전주기 성장 지원) 청년과기인 성장 3종 패키지* 및 거주·병역 지원
 - * 1종국가우수장학금(대학·대학원생), 2종연구생활장려금(STIPEND), 3종기본연구비(신진연구자)
- (지원체계 일원화) 국가 과학기술 인재양성 청사진 제시 및 범부처 과학기술 인재 정책·예산 조정* 기능 강화, 데이터 기반 통합관리 체계 구축
 - *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조정기구인 과학기술자문회의 기능 강화
- (우수 해외인재 유치) 전략기술 분야 위주로 포닥, 신진연구자, 석학 등을 유치하여,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국가 프로젝트인 'Brain to Korea*' 추진
 - * '30년까지 AI, 바이오, 방위·우주항공, 에너지, 양자 등 분야에 2,000명 유치
 - 범부처 협업을 통해 비자·주거·교육·취업 등 전주기 정착 지원 서비스 강화
- (처우개선) 기업연구인력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 확대, 출연(연) 연구자 외부강의료 상향, 기업연구자 육성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운영 등 전반적 처우 강화
 - 여성 과학기술인 경력 복귀 및 석학·고경력 은퇴 과학기술인 지원프로그램 신설

□ 기대효과

- 청년 등 연구자가 걱정 없이 연구에 전념하며 성장하고, 성과를 내는 기초연구 환경 조성
- 입학부터 은퇴까지 국가가 책임져 과학기술 우수인재의 성장 경로 안정화

28 세계를 선도할 빅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제목표

- 국가전략기술 세계 최초 5개 이상, 세계 1위 10개 이상 달성(~'30)
 - 우주기술 자립화를 위해 누리호 반복 발사(4차/'25~6차/'27) 및 성능개량 발사(7차/'28)
- 민관협업·국민참여 기반 'K-Tech 국민기업' 5개 창출, 정부 R&D 성과 기반 중대형 기술이전·사업화* 및 딥테크 창업** 촉진
 - * ('30) 연간 400건(기술이전 계약액 1억원 이상), ** (~'30) 누적 3,000건('23, 1,642건)

□ 주요내용

- (민관협업 전략기술 육성) 국가임무에 기반한 민관협업 방식의 초대형 'NEXT 프로젝트' 추진 및 혁신형 관리전문기관 운영
 - * ①주력기술(반도체, 이차전지) ②미래혁신기술(AI, 바이오, 퀀텀) ③기반기술(첨단미래소재, 미래에너지) 등
 - (단기) 5년 내 핵심기술 자립화를 목표로 핵심 공정기술개발, 기술사업화 등 지원 (중장기) 미래 성장산업의 씨앗이 될 초격차 원천기술 및 인프라·인력 확보
- (우리 기술로 K-Space 도전) 우주과학탐사 로드맵* 마련, 대전·전남·경남 우주산업 클러스터 완성**, 메탄엔진 기반 재사용 발사체 개발 추진
 - * '32년 달 착륙, '45년 화성 탐사 등 / **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체험시설 구축·운영 등
 - 민항기 국제공동개발, 드론 부품·기체 국산화, 미래형 항공기 개발
- (딥테크 기반 혁신성장) R&D 성과기반 실험실창업 지원 강화, 산학연 조인트 벤처 설립, 민간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육성, 혁신조달 시장 진출 확대
- (기술사업화로 성과창출 촉진) 기업 밀착 스케일업 지원을 위한 기술금융 확대, 국제표준 개발 및 기술판로 개척 지원, 민·관 협력 메가 프로젝트 등 추진
- (특허정보 연계 R&D)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미래 전략기술 R&D 전략 제시, 민간·공공 R&D를 위한 지식재산 데이터 개방·활용 확산

□ 기대효과

- 민관 협업을 통한 NEXT 전략기술을 확보하여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
- 첨단기술을 활용한 신산업·신시장 창출을 통해 경제성장과 고부가가치 일자리 확보에 기여

[국정목표②]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전략-3. 혁신으로
도약하는 산업
르네상스**

29 신성장동력 발굴·육성으로 첨단 산업국가 도약 (산업부)

□ 과제목표

- AI 팩토리·휴머노이드로 산업AI와 제조업 글로벌 리더십 확보
- 바이오, 문화, 방산·항공, 기후테크 등 신성장동력 발굴·육성
 - * '30년 목표: (A) 산업AI 활용율 70% (바이오헬스) 수출 35% 증가 (드론UAM) 핵심부품 국산화율 70% 달성

□ 주요내용

- (여건조성) 미래 먹거리 산업을 키우기 위한 전략 수립 및 기반 조성
 - 신성장동력 발굴·육성·지원 등을 위한 범부처 전략 수립 및 추진체계 가동
 - 신성장동력 분야 관련 규제 혁신 및 인력양성·인재유치 가속화
- (A: 산업AI) AI팩토리·휴머노이드 등 AI 확산으로 제조업을 혁신
 - 세계 최고 수준 제조 데이터를 활용하는 'AI 팩토리' 확대('30년, 500개)
 - 휴머노이드 양산 돌입과 산업용 AI로봇 확산으로 인력난 완화 및 공정혁신
 - 유통·디자인 등 제조서비스, 뿌리산업 등 제조업 전반으로 AI 적용 확산
- (B: 바이오) 생산 인프라·R&D·데이터 등 3종 세트로 바이오헬스 육성
 - 첨단 바이오 소재 후보물질 개발·생산이 가능한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25~'29)
 - 100세 시대 바이오 제품 개발과 AI 첨단 의료기기 상용화(범부처) 추진
- (C: 컬처) K-콘텐츠·컬처·푸드 등 문화산업이 이끄는 소프트파워 강국 구현
 - 게임·음악·영상·웹툰 등 K-콘텐츠 장르별 제작지원·해외진출 지원 강화
 - 10大 대표 K-푸드 품목 육성으로 K-푸드 수출 150억불 달성('30년)
- (D: 방산·항공·드론) 소부장 등 핵심기술 개발로 방산강국 도약
 - 전차용 파워트레인, 첨단 항공엔진 개발로 K-방산 위상 강화
 - '저고도 경제' 구현의 핵심인 미래형 비행체(AAV) 개발 등 드론 산업 육성
- (E: 기후테크) 기후 대응 에너지 산업 육성으로 그린 강국 도약 실현
 - 탄소감축 기술, 사용후 배터리, 전력기기, 청정수소 등 기후테크 육성

□ 기대효과

- 미래형 첨단산업 육성으로 잠재성장률 3%를 회복하고 일자리를 창출

□ 과제목표

- 반도체·이차전지·자동차·조선·기계 등 주력산업 세계적 위상 공고화
 - * '30년 목표: (반도체) 수출 1,700억불 (자동차) 글로벌 생산 5강 (이차전지) 글로벌 시장점유율 25% 달성
- 석유화학·철강산업 등의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기술 중심으로 고도화
- 소·부·장 핵심기술 개발 확대와 자립화로 흔들리지 않는 산업강국 실현

□ 주요내용

- (전략산업 혁신) 반도체·이차전지·자동차 등 우리 강점 산업 업그레이드
 - 제품 탑재형 AI반도체·초격차 HBM 등 세계 선도형 반도체 기술개발
 -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 및 충청·영남·호남을 잇는 배터리 삼각벨트 구축
 - 친환경차·소프트웨어차량(SDV)·AI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혁신 생태계 조성
- (공급망 강화) 산업의 허리이자 기반인 소부장 산업·뿌리산업의 경쟁력 확충
 - 200대 핵심 소부장 기술 R&D 투자 확대 및 으뜸기업 200개 육성('30)
 - 투자보조금·생산보조금·대체기술 개발로 고위험 핵심광물 국내 생산 확대
 - 자동차·기계·조선 등 15대 수요산업 적용 핵심기술개발 등 뿌리산업 혁신
- (기술혁신·생산기반 확대) 초격차 기술개발과 국내 생산 확대로 산업기반 강화
 - 북극항로 선박·초격차 디스플레이 등 경쟁국 추격을 따돌리는 미래기술 개발
 - 반도체 레거시 파운드리 구축, 바이오 위탁생산시설 장비구축 등 생산 인프라 보강
- (구조혁신 지원) 사업재편으로 균살을 덜어내고 혁신제품 개발로 미래 준비
 - 범부처 합동 사업재편 촉진방안 마련과 함께 인센티브 제공도 병행
 - 수소환원제철(철강), 스페셜티 소재(석유화학) 등 탄소감축·고부가가치화 추진
- (상생협력 확대) 대·중소기업이 함께 크는 동반성장으로 산업 생태계 혁신
 - 공동 기술개발, 대기업 기술이전, 공급망 협력 등 협력모델 확산·지원
 - 반도체 실증팩, 자동차 부품기업 미래차 전환 등 업종별 성공사례 창출

□ 기대효과

- 주력산업 혁신과 생태계 조성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4대 제조강국 실현

31 미래 모빌리티와 'K-AI 시티' 실현 (국토부)

□ 과제목표

- 자율주행차·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3대 강국, 드론 5대 강국 도약
- 도시공간 전역에 AI 기술 구현 및 K-AI 시티 선도모델 확립·확산

□ 주요내용

- (미래 모빌리티 실현) 자율주행·UAM·드론·차세대 고속열차 등 상용화
 - (자율주행 실현) 레벨 4 자율차 출시 및 대중교통 등 공공서비스 활용, 자율주행 AI 학습센터 등 인프라 구축, E2E 차세대 모델 기술 개발
 - (UAM 조기 상용화) 공공서비스 우선 상용화 이후 민간 상용화 추진, UAM 허브(김포공항 등) 구축 지원, AI 기반 교통관리 체계 고도화
 - (드론산업 육성) 5대 중점분야(소방·농업·물류 등) 핵심기술 국산화, 스마트 드론 팩토리 등 제조생태계 구축, 해안순찰 등 드론활용 공공서비스 확대
 - (차세대 고속열차 도입) 400km/h급 철도 단계적 구축, 하이퍼튜브 기술개발
- (AI 시티 조성) 거주하며 실증하는 AI 특화 시범도시 조성·확산
 - (기술개발·실증) 도시 각 분야의 AI 민간·공공서비스 발굴 및 실증 테스트
 - * 특화 콘셉트 도입, 공공(기반조성)·민간(앵커기업), 산학연 연계(거주·개발·실증), 규제프리존
 - (AI 인프라 구축) AI 도시지능센터·AI 빌딩 등 결합으로 인프라 고도화
 - (AI 전환 가속화) 디지털 트윈 국토, AI 물류·건축·에너지 등 도시서비스 제공

□ 기대효과

- 미래 모빌리티 조기 상용화로 교통서비스 혁신 및 글로벌 신시장 선점
- 국민 일상에 AI 서비스를 구현하여 삶의 질 향상 및 K-시티 신산업 육성

32 의료시·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 (복지부)

□ 과제목표

- 바이오헬스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로 수출 500억불 달성
- mRNA 백신 국내기술 개발 및 국가예방접종 백신의 국산화율 제고*
 - * '30년까지 백신 2종 개발을 통해 국산화율을 ('25년) 27.3% → ('30년) 36.4%로 제고

□ 주요내용

- (보건의료 R&D 강화) 고령화·필수의료 위기 등 난제 해결* 및 바이오헬스 유망 분야 성과 창출을 위한 R&D 확대
 - * 보건안보 확립, 미정복 질환 극복, 바이오헬스 초격차기술 확보, 복지돌봄 개선, 필수의료 혁신
- 의과학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학부부터 박사 취득, 연구까지 의사과학자 체계적 지원, 신기술·현장 수요 기반 바이오헬스 핵심 융복합 인재 양성
- (의료AI 혁신성장 지원) 한국 의료환경에 맞는 의료AI 기술 개발부터 의료현장 활용까지 전주기 투자 확대
 - 의료데이터 상호연계·공동활용 기반 마련 및 디지털 기반의 병원을 활용한 연구플랫폼·테스트베드 구축
- (혁신적 제약·바이오 육성) 신약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혁신형 제약 기업 인증·약가보상 개선, 과감한 규제혁신 및 인프라* 강화
 - * 도심집적형 바이오클러스터 육성, 클러스터 간 시설·장비를 공유하는 버추얼플랫폼 구축
- 바이오헬스 의료기기 수출 증대 및 K-의료·뷰티(화장품) 글로벌 진출 지원
-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 mRNA 백신 등 차세대 백신 플랫폼 기술 개발, 국가 필수의약품·의료기기 공급 안정화 및 지원, 국산 원료 의약품 인센티브 확대

□ 기대효과

-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및 글로벌 경쟁 우위 확보

33 서비스업 경쟁력 제고로 내수·수출 활성화 (기재부)

□ 과제목표

- 우리 경제의 핵심 축인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성장 기반 강화
 - * 서비스산업은 우리 경제 부가가치의 61%, 고용의 72%를 창출('24)
-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 및 국민체감형 생활밀착 서비스 질 제고

□ 주요내용

- (체계적 육성기반 구축) (가칭)「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 및 업종별 육성방안 마련·추진
 - * 서비스 산업의 정의 및 범위 규정, 서비스 R&D투자 확대,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 선정 등 포함
-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 AI를 활용한 교통·물류·안전 등 핵심 서비스 생산성 제고 및 新서비스 발굴과 함께 제조업 등과의 산업간 융합 지원
 - 공공, 의료, 법률, 미디어·문화, 재난·안전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AI 활용 新서비스 발굴 및 개발 추진
 - 콘텐츠+관련 상품 제조(K-팝+굿즈·화장품), 디지털 헬스케어(플랫폼, 진단기기, 치료제 등), 관광-뷰티 연계 등 산업간 융합 및 확장 지원
- (생활밀착형 서비스 질 제고) 표준화·규모화 등 업종별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돌봄 등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강화 및 공급기관 성장 지원
- (서비스 수출 활성화) K-뷰티, 콘텐츠, 헬스케어 등 유망 분야를 대상으로 사업모델 발굴부터 현지화까지 패키지*로 지원
 - * 컨설팅, V-카탈로그 제작, 상담회, 쇼케이스, 전시참관, 글로벌 파트너링 등
 - 서비스 수출 전문인력 양성 및 서비스 수출 전용 금융지원 확대 추진

□ 기대효과

- 서비스산업 발전으로 내수·수출 증가 및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만족도 향상

34 제3벤처붐으로 여는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중기부)

□ 과제목표

- 연간 40조원 규모 벤처투자시장을 조성하여 혁신 유니콘 50개 육성
- 지역균형성장을 위해 5극3특 체제를 고려하여 창업도시를 조성하는 등 지속가능한 지역 창업생태계 구현

□ 주요내용

- (벤처투자시장 확대)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 및 정부출자 확대, 퇴직연금의 벤처투자 허용, 법정기금의 벤처투자 확대·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 모험자본시장 유입을 위한 금융권의 벤처투자 위험가중치 합리화 등 투자규제 완화, 벤처투자자 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 인센티브 강화
 - 벤처투자 시장 확대에 따라 기술혁신형 M&A 촉진, 세컨더리 펀드 확대 등 회수시장 활성화 및 벤처·스타트업 친화적 코스닥 시장 조성
- (유니콘 50개 육성) AI 등 딥테크 스타트업을 성장단계별로 맞춤형으로 집중 육성·투자(13.5조원)하는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 개시
 - 모험자본 조달, 기술거래, M&A 등을 종합 지원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을 확대·개편하고, AI 등 빅테크기업 육성 전용 성장사다리 프로그램을 신설
- (창업국가 실현) 딥테크 창업패키지 신설 및 딥테크 특화 창업중심대학 지정, 벤처스튜디오 활성화 및 외국인의 국내창업을 지원하는 인프라 확산
 - 스타트업·벤처 해외캠퍼스 및 글로벌 모펀드 조성, 해외 빅테크 기업과 정부가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Around X) 확대
- (지역창업 활성화) 5극3특별 거점 창업도시 조성, 권역별 엔젤투자허브 등 투자 인프라 확충 및 지역성장펀드 조성
- (지속 가능한 창업생태계) 신산업 분야 창업가 세제특례 확대 검토 및 주식연계보상 확대, 신산업 분야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신설

□ 기대효과

-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벤처·스타트업이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구조로 전환하고, 지역특화산업 분야의 창업 확대로 지역균형성장 도모

35 미래 신기술로 성장하고, 글로벌로 도약하는 중소기업 (중기부)

□ 과제목표

- 스마트팩토리 1.2만개 추가 보급, 공공조달시장 170조원 확대, AI 등 전문·연구인력 2.5만명 채용지원 등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와 생산성 혁신

□ 주요내용

- (강소기업 육성) AI 등 혁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 AI 대전환’을 추진하고, 점프업 프로그램 500+, 기업승계 활성화 등 지속성장 기반 마련
 - ABCDEF 산업육성 전략을 반영해 지역주력산업을 재설계하고, 지역거점 도심형 연구타운 조성, 선제적 구조개선 등 지역 중소기업 지원체계 확충
- (성장중심 R&D) 한국형 STTR* 사업 추진, 중소기업 R&D 예산 회복·확대, 성장단계별 민간투자연계형(TIPS) R&D 지원체계 확립
 - * 美 Small Business Technology Transfer Program : 10억 달러 이상 R&D 예산을 지닌 미국 연방기관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연구기관간 R&D 협력·사업화 지원을 의무화
 - 시장수요기반 민관공동 R&D 및 기술협력 프로그램 신설, R&D 성과 후속 사업화 및 투·융자 자금 지원 도입, 전문·연구인력지원 확대(+2.5만명)
- (AX 대전환) 기초·AI 고도화 등 수요기반 스마트공장 지원 다양화·확대 (+1.2만개), 제조AI 전략 R&D 추진 등 뿌리부터 첨단기업까지 AX 대전환
- (공공조달 시장 확대) 중소기업 제품 공공조달시장 130→170조원까지 확대(~'30), 민수시장·해외조달시장 진출 촉진 등을 위한 「판로지원법」 전면 개정
 - 외산 짝퉁의 국산 둔갑 등 조달시장 교란행위 차단 및 ‘우선구매 기술 개발제품’ 지정기준을 강화하고, 혁신제품 공공구매는 2조원 이상으로 확대('30)
- (글로벌 시장 진출) 중소기업 수출 품목·국가 다변화 촉진 및 K-수출전략 품목(뷰티·패션·라이프·푸드 등) 육성을 통해 중소기업 수출역량 제고
 - 수출 10대 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 및 탄소중립 고효율 설비전환 지원 등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감축 역량 제고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 기대효과

- R&D 혁신(기술역량) → DX·AX(생산성) → 중견기업 성장(BM혁신) 및 글로벌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 구축으로 중소기업의 성장모멘텀 제고

36 경제·산업 도약을 위한 신산업 규제 재설계 (국조실)

□ 과제목표

- AI 융복합 시대에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 혁신을 촉진하고 3·3·5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 전환
- 지역특화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성장 공간을 조성하고, 갈등 조정 등을 통해 규제 합리화 성과 신속 창출

□ 주요내용

- (AI, 바이오헬스 규제 제로화) 국가 핵심 신산업에 대해 일정 기간(3년, 5년 등) 규제적용 배제*, 글로벌 미니멈 규제를 목표로 규제 설계
 - * 기술개발, 사업화, 인프라 등 관련 규제를 전면적으로 유예
- 법령 조사 등을 통해 네거티브 규제 전환 확대 추진, 사후 위험관리를 위한 민사적 책임(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디스커버리) 강화 병행
- (규제샌드박스 성과 제고) 부처별 분절화된 운영에 따른 기업 불편 해소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신청-심의-실증-법령정비-상용화 전 주기 통합 관리
 - 실증특례 종료시 원칙적으로 법령 정비, 상용화 중심 성과관리, 기업의 재심의 요청 과제 등은 규제개혁위원회가 특례 부여*(전략기획형 샌드박스)
- * (가칭)「규제샌드박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 (메가특구 신설) 지자체의 규제특례 설계와 중앙정부의 정책패키지(정책 금융, 인프라 등) 제공을 통해 대규모(초광역 포함) 특화산업 성장 공간 조성
- (컨트롤타워 강화) 대통령 중심으로 규제 합리화 추진체계를 단일화하여 성과 조기 창출, 전문연구기관 및 지자체 역량 확충, 정부·국회간 협력체계 구축

□ 기대효과

- 단편적·분절적 접근에서 벗어나 글로벌 최소 수준을 목표로 신산업 분야 규제를 선제적으로 정비·설계하여 신기술·신산업 기업 성장 토대 구축
- 지역의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하여 국가 균형성장 견인

37 통상으로 지키는 국익, 흔들림 없는 경제안보 (산업부)

□ 과제목표

- 보호무역주의 등 통상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국익 우선 통상정책 추진
- 무역안보·투자안보·경제안보 강화로 국가 핵심 산업기반 보호
- 밀착 지원, 과감한 지원, 수출 다변화(제품·국가·기업)로 수출 1조불 시대 준비

□ 주요내용

- (경제안보 대응) 무역안보·기술안보·투자안보·공급망 등 경제안보 강화
 - 수출통제 협력, 핵심기술 보호, 전략적 투자유치, 투자안보심의 등 철저 대응
 - '경제안보 점검회의' 정례화로 통상·경제안보 컨트롤타워 가동
- (무역구조 혁신) 수출 7천억불에서 1조불 시대로 가기 위한 기반 구축
 - 품목 다변화, 시장 다변화, 주체 다변화(수출스타 500개) 등 수출저변 확대
 - 무역금융 확대, 지역 전시회 육성, 기술장벽·탄소규제 대응 등 수출 인프라 확충
- (주요국 협력) 미국·중국·일본·EU 등 주요 교역국과 통상·산업 협력 심화
 - * (미국) 반도체·이차전지 등 투자협력과 함께 조선·에너지 등으로 협력 영역 확대
 - * (중국) 서비스 신시장 개척, 핵심광물 협력, 섬유·가전 제3국 공동진출 등 추진
 - * (EU) 탄소규제·공급망 규제 등 무역장벽에 대응하고 신통상 협력 강화
 - * (한미일) 한미일 3국간 첨단 산업 및 에너지 분야 기술·산업협력 강화
- (글로벌 사우스 진출) 신남방·신북방 정책의 계승·발전과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으로 경제영토 확대
 - 미래 성장산업 분야 협력 확대 및 유상원조·개발금융 등 개도국 진출 지원
 - 맞춤형 통상협정 체결 및 공급망·디지털·기후 등 신통상협정 확대
- (보호무역 피해 지원) 수출기업·투자기업·중소기업 등 보호무역 애로기업 적극 지원
 - 상담·정보제공·무역보험·대체시장 발굴, 물류비용 절감 등 다각도 지원
 - 관세 부담 등 국내 복귀를 희망하는 유턴기업 지원을 대폭 확대*
 - * (지원요건)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 면제 (지원규모) 지원보조율 10% 상향 (~26년 限)
- (무역안보 단속 체계 확립) 국산 둔갑 우회수출, 전략물자 불법수출 등 무역안보 침해행위 대응역량 강화
- (공공비축 강화) 핵심물자 비축물량 확대와 비축기지 확충으로 공급망 관리
 - * (비축목표) 희소금속 100일 → 180일, (인프라) 새만금 전용 비축기지 착공('26)

□ 기대효과

- 경제안보 강화, 무역구조 혁신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수출 1조불 기반 마련

[국정목표②]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전략-4.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38 경제성장 대동맥, 에너지고속도로의 구축 (산업부)

□ 과제목표

- 전국 주요 산업거점과 재생에너지를 잇는 **한반도 첨단 전력망** 신속 확충
- 재생에너지 등과 연계한 **기후테크 산업** 성장동력화
- AI기반 **첨단 에너지시스템** 구현 및 **전력망 거버넌스·제도 혁신**

□ 주요내용

- (에너지고속도로 신속 구축) 서해안 HVDC(고압직류송전)를 조기 구축, 한반도 U자형 전력망* 완성을 위해 전력망 건설역량 혁신
 - * 서해안-남해안-동해안을 잇는 HVDC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 ESS 등 계통안정화 장치 확대 등을 통해 **호남권 접속제한 단계적 철회**
 - ‘**전력망 위원회**’를 통한 전력망 건설 갈등 관리·소통 추진
- (기후테크 육성) 에너지저장장치(ESS) 산업 활성화, 수요반응자원*을 수급관리에 적극 활용, 청정수소 생태계 구축, 히트펌프 산업 육성
 - * 전력수요가 높고 공급이 부족할 때 전력수요자가 소비를 줄여서 보상받는 제도
- (AI 에너지시스템 구축) AI를 활용하여 전력시장과 전력망을 효율화하고, AI기반 수요관리를 통한 **에너지효율 향상** 및 **에너지데이터 공개 확대**
 - AI데이터센터 지방분산으로 전력 수요분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전력망 거버넌스 혁신) 전력망 조기 건설을 위해 **민간 건설역량을 활용** 하고, 계통의 안정성·효율성을 위한 **전력망 운영·관리 체계 개선** 검토
- (전력시장 혁신) 전력수급에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시장 도입**,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차등하는 **지역별 요금제** 신설
 - 공정한 전력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전기위원회 독립성 강화**

□ 기대효과

- 산업과 지역의 성장지도를 재설계하고 에너지 산업의 **수출산업화** 및 **재생에너지 인근에 첨단산업을 유치**하여 지역 균형성장과 경제성장 기여

39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산업부)

□ 과제목표

- 재생에너지 확대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 햇빛·바람연금 확대, RE100산단 구축 등 지역 균형성장 기반 마련

□ 주요내용

- (재생e 확대) 재생e 목표('30. 78GW)를 상향하는 로드맵 수립·이행
 - 계획입지 발굴, 집적화단지 신속 조성, 인허가 의제 처리 등을 통한 서남해·제주 해상풍력 단지 구축
 - 산단·영농형·수상·주차장·지자체 소유 공공부지 등 태양광 입지 다각화
 - 조력·수열 등으로 재생에너지 다각화, '40년 석탄발전 폐지 추진
- (재생에너지 제도 개선) 재생에너지 보급 체도를 계약시장으로 단계적 개편, 인허가 절차 간소화*, 지자체의 이격거리 완화·폐지 추진 등 규제 혁신
 - * 정부주도 계획입지 도입, 전파영향평가 기준 완화, 풍향계측기 설치허가 개선 등
- (산업 경쟁력 강화) 차세대 태양전지 조기상용화, 해상풍력 터빈·부품·기자재 기술개발, 설치선 건조 및 전용항만 설치
- (지역 상생) 햇빛·바람연금 확대, 마을단위 에너지자립 등으로 지역소득 증대
 -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재생에너지 모집·인허가·설치·유지보수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육성·활용을 통해 주민 수용성 제고
- (RE100산단)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지산지소'형 RE100산단 조성
 - 파격적 인센티브 등을 포함하는 특별법 제정
 - 기업유치를 위한 분산형 모델(재생e 직접 거래) 및 재생e 요금 강구
 - 기업투자과 인재유치를 위한 정주·교육 여건조성 및 신도시 기반 마련

□ 기대효과

- 에너지 대전환으로 에너지 안보 강화 및 재생에너지 수출산업화
- RE100산단을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첨단기업의 경쟁력 강화

40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 (환경부·국조실)

□ 과제목표

-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책임 달성('18년 대비 40% 감축)을 위한 이행기반 조성
- 2035년 감축목표 수립 및 2050년까지 장기 감축 로드맵 마련
-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탈탄소 전환 지원, 탄소중립산업 및 기후 신산업 육성

□ 주요내용

- (2030 감축목표 달성) 산업·건물·수송·전환 분야 감축목표를 책임지고 달성할 이행전략 수립, 기업의 실질적 탈탄소 전환을 위한 향후 5년의 배출권거래제 시행
- (2035 이후 로드맵 수립) 2030 목표 대비 진전된 2035 감축목표 수립('25.下), 미래세대를 고려한 탄소중립 장기 감축 로드맵 마련
- (이행기반 강화) 기후대응기금 수입원 확충, 예비타당성 효과 분석 시 탄소저감효과 반영, 대중교통 건설사업 등에 대한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
- (산업 탄소경쟁력 강화) 기후 신산업 육성을 위한 「탄소중립산업법」 제정, 신속한 탈탄소 전환을 위한 전환금융 가이드라인 마련
 - 녹색 공공조달 확대, 지역 기후테크 기업 집중 지원(환경펀드 활용),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교체 시 전환지원금 지원, 전기차 충전소 확대
- (국민참여 확대) 기후 공론장 마련(기후시민회의), 탄소중립 국민 실천에 대한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강화, 정부-시민사회 협력 탄소중립 실천단 운영
- (국제사회 논의 주도) 감축·적응·그린ODA 분야 국제논의 주도 및 지원 확대, 한·중·일 기후위기 대응 공조 강화, 남북 기후·환경협력 과제 발굴·추진

□ 기대효과

- 국가 탄소중립 이행 및 온실가스 감축 가속화, 산업의 탈탄소 전환 확대
- 탄소중립 및 기후 신산업 신성장 동력 확보, 글로벌 기후·환경 리더십 강화

41 탄소중립을 위한 경제구조 개혁 (산업부·국토부)

□ 과제목표

-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을 함께 이끄는 탄소중립 선도국 도약
- 건축물 에너지 효율 제고 및 순환경제 활성화 등으로 탄소중립 촉진

□ 주요내용

- (주력산업 탄소중립) 산업부문 2035 NDC 달성을 위한 전략·수단 전면 개편
 - 수소환원제철(철강), 바이오 원료전환(석화) 등 대규모 R&D 예타 추진
 - 탄소감축을 위한 혁신적 제도* 도입, 탄소감축 설비투자 용자 등 지원
 - * 감축효율이 높은 프로젝트에 대규모 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제도 등
 - 녹색인증제 등 저탄소 제품의 국내외 수요 촉진 지원 기반 확충
- (해외 탄소규제 대응) 탄소국경세 등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지원 및 기반구축
 - 기업의 탄소배출량 산정·감축을 원스톱 서비스로 밀착 지원
 - 공급망 내 기업들과 탄소배출 정보를 주고받는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디지털제품여권 등에도 대응
- (건물의 에너지효율화) 제로에너지 건축물·그린리모델링을 확대*하고, 국산목재 활용 시범사업 추진 및 녹색건축인증 개편 등 제도개선
 - * 공공 에너지 다소비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그린리모델링 우수사례 보급확산
- (산업부문 순환경제 활성화) 재제조(자동차 부품), 재사용(폐배터리), 재자원화(재생원료) 등 순환경제 비즈니스 모델 활성화 및 기술개발·인증 지원
 - 글로벌 규제 대응을 위한 자원효율등급제 및 재생원료인증제 마련

□ 기대효과

- 해외 탄소규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 및 국내 신시장·신산업 창출에 기여
- 산업부문 순환경제를 통한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구현

42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환경부)

□ 과제목표

- 플라스틱 감량부터 생산·회수·재활용까지 전주기 탈플라스틱 로드맵 수립
-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국제수준으로 강화, CE(순환경제)100 확산

□ 주요내용

- (탈플라스틱 추진) 국민 참여 숙의과정을 거쳐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로드맵’ 수립(’25),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의무율 ’30년까지 30%로 상향
-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 한국형 에코디자인 도입 추진, 제품의 수리 용이성 평가 제도화(’25), 포장재의 손쉬운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재질·구조 개선 촉진
- (회수체계 고도화) 분리배출 체계 개선, 완구류·일회용컵을 생산자책임 재활용 대상으로 추가, 무인회수기·회수보상제·역회수 등 회수 촉진방안 검토
- (순환이용 활성화)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 품목별 순환이용 체계 구축
 - (폐배터리) 배터리 재생원료 생산인증제, 사용목표제 도입·시행, 핵심 원료(리튬)·소재(음극재, 분리막) 회수기술 고도화 추진
 - (태양광 폐패널) 고속·저에너지 재활용 처리공정 및 자원화 기술개발
 - (폐의류) 폐의류 자동 분류·선별 및 물질재활용 기술개발
- (순환경제 경쟁력 강화) CE(순환경제)100 참여 촉진 및 특화산단 지정, 순환경제 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운영, 유해성 적고 자원가치 높은 품목의 순환자원 인정 추진
- (순환경제 확산) 폐기물 소각열을 산업단지 등에 공급하는 히트링크 사업, 제로웨이스트 매장(알맹상점 등) 활성화 등 순환경제 선도 사업 추진·확산

□ 기대효과

- 손쉬운 수리와 순환이용을 통해 자원을 절약하고, 새로운 순환경제 일자리 창출

43 국가 기후적응 역량 강화 (환경부)

□ 과제목표

- 기후 감시·예측부터 기후위험 영향 평가까지 적응 정책의 과학적 기반 강화
- 기후위험에 대비한 국가 인프라 대전환 및 경제·사회 전반의 적응력 강화

□ 주요내용

- (과학적 기후변화 감시·예측) 고해상도 한반도 기상·기후 감시 위성(천리안 5호) 개발·발사, 1개월~10년까지 예측하는 국가 기후예측시스템 개발
- (기후위험 영향 평가)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사회·경제의 기후위험 영향을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기후위험 통합평가모델 구축
- (국가 인프라 대전환) 예측 범위를 벗어난 기후재난에 대비하여 철도, 항만, 댐, 하천 등 국가 인프라에 대한 안전성 진단 및 설계기준 강화·보강
- (도시 기후 탄력성 제고) 도시열섬 완화 숲, 생활정원 확충 등 녹색공간 조성, ESG 경영 등과 연계한 민간 참여 자연환경 복원사업 추진
- (경제 적응력 강화) 산업계 업종별 기후변화 대응 매뉴얼 보급·시행, 기후위기 시대 식량 안보 대응체계 구축, 안정적인 반도체 초순수 공급체계 구축
- (사회 적응력 강화) 온열·한랭질환 감시 및 건강영향평가, AI 기반 감염병 매개체 스마트 감시 확대,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및 맞춤형 인프라 지원
- (기후적응 컨트롤타워 정립) 기후 감시·예측부터 기후위험 영향까지 적응 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관계부처 합동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추진

□ 기대효과

- 국민이 기후재난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기후위험 영향 정보 제공
-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 지역, 산업 보호 및 기후적응 역량 강화

44 모두가 누리는 쾌적한 환경 구현 (환경부)

□ 과제목표

- 전국 초미세먼지 농도 $13\mu\text{g}/\text{m}^3$ 수준 달성, 안전한 물 공급 및 먹거리 안전망 강화
- 유해화학물질 및 환경사고에 대한 촘촘한 사전예방·사후구제 체계 구축

□ 주요내용

- (미세먼지 저감) 사업장, 수송, 생활 등 전 분야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 강화
 - (사업장) 대기배출허용총량 단계적으로 축소,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전환(~'40), 소규모 사업장(4·5종) 저감시설 교체
 - (수송) 차종별 및 수요자별 여건을 고려한 내연기관차(화석연료 기반) 퇴출 전략 수립, 노후 자동차 조기 폐차 지원, 국내 전 차종 전동화 모델 출시 유도
 - (생활) 오존유발물질·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인벤토리 구축 및 중점 관리
- (녹조피해 예방) 녹조 독소 기준 신설('25) 및 기준과 연계한 대응체계 개선(조류 경보 강화, 예측지점 확대 등), 하수·가축분뇨 방류수 수질기준 상향
- (안전한 물 공급) 낙동강 상·하류 취수원 다변화 사업 추진, 반도체·RE100 산단 등 대상으로 안정적인 물 공급 추진
- (화학물질 안전관리) 발암성·생식독성물질 등 고독성 화학물질의 제한물질 지정 확대, 환경오염취약지역 역학조사·사후관리·피해구제·도시재생 확대
- (화학제품 사고 예방·대응) 불법유통 화학물질·제품에 대한 온라인 감시 강화, 사고 조기감지 - 피해 긴급조사 - 신속 구제까지 전주기 대응체계 구축
- (안전한 먹거리 제공) AI 자동예측시스템 도입 등 식중독 사고 예방시스템 혁신, 어린이·노인·장애인 급식지원체계 확충 및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 단계적 확대

□ 기대효과

- 일상 속 환경오염 및 고독성 화학물질 등에 대한 불안감 해소, 안전한 먹거리 제공

45 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 (환경부)

□ 과제목표

- 4대강 보 개방 확대,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로 물이 흐르는 하천 환경 조성
- 2030년까지 보호지역 30% 달성, 국제 수준의 생태계·생물다양성 보전정책 추진

□ 주요내용

- (4대강 재자연화) 시설별 여건에 맞춰 4대강 보 개방 및 취·양수장 개선 사업 신속 추진, 4대강 보 처리·운영에 대한 논란 종결
- (자연 친화적 하천관리) 하천 연속성 조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하천 횡단 구조물 개선·철거
 - 낙동강 하굿둑 개방·확대, 금강·영산강 하구 생태계 복원방안 검토
- (보호지역 확대) 보호지역·자연공존지역 확대로 보호지역 국제목표 30% 달성, 훼손된 생태계 복원사업 추진, 국가 생태계 평가 보고서 발간
- (생물다양성 회복) 유입주의 생물 지정 확대 및 외래생물 세관검사 강화 등 생물안보 강화, 멸종위기종 종 보전에 더해 서식지까지 보전하도록 체계 강화
- (생태관광 활성화) 국립공원 지역 명소화를 위한 테마시설 확충, 국가 휴양공원 등 지역 특화 관광자원 개발, 민간 참여 생태계보전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공탁제 도입 추진, AI·빅데이터 활용으로 평가시스템 사용자 편의성 제고, 평가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 등 제도 신뢰성 제고

□ 기대효과

- 강과 자연 건강성 회복에 따른 공간 향유와 여가활동 증대로 삶의 질 향상
-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 투명성 향상을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의 기반 마련

[국정목표②]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전략-5. 성장을 복돋는
금융혁신**

46 진짜 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국민성장펀드 100조원+ α 조성) (금융위)

□ 과제목표

- 전폭적인 투자로 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 혁신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회수가 선순환하는 벤처금융생태계 조성
- 기후금융 공급 확대 및 ESG 공시 관련 인프라 제고

□ 주요내용

- (100조원+ α 규모 국민성장펀드 신설) AI 등 미래전략산업과 에너지 인프라 등에 투자하는 민·관 합동의 대규모 펀드 조성
 - 벤처·중소기업은 장기 지분투자 중심으로 지원하고, 설비투자를 위한 대규모 자금은 초저리 대출 등 맞춤형 지원
 - 국민공모 및 연기금·민간금융사 자금이 함께 참여하여 기업성공의 과실을 국민들과 공유
- (벤처·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 딥테크(바이오·반도체 등) 맞춤형 보증 신설, 혁신벤처기업 특화 기술특례상장제도 마련 등 원활한 자금조달 환경 조성
 - 지역 벤처·중소기업의 성장(Scale-up) 지원을 위한 정책펀드 조성 및 벤처·혁신기업 집중 투자기구(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BDC*) 신설

* 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 : 주로 성장성 있는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공모펀드
- (ESG금융 강화) 재생에너지, 기후기술 등에 대한 투자 확대 및 고탄소 제조기업의 탄소감축 활동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 ESG 공시기준 및 로드맵(대상·시기)을 마련하고, ESG 우수기업에 대한 정책금융기관 등의 금융지원 확대

□ 기대효과

- AI 등 미래 첨단전략산업과 벤처·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로 경제활력 제고
- 산업구조의 녹색전환 등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조성

47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 (금융위)

□ 과제목표

- 자본시장 혁신을 통한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

□ 주요내용

- (주주가치 제고)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을 위한 개정 「상법」의 시장 안착 및 추가입법 단계적 추진(법무부)
 - 주주이익 환원을 위한 자사주 원칙적 소각 제도화 검토
 - 합병·분할 등 과정에서 일반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 * 합병분할시 공정가액 적용, 쪼개기 상장시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배정 및 의무공개매수 도입 등
 -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확대 및 이행여부 점검·공시 등 내실화 추진
 - *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주주가치 제고 등을 위해 주주권한을 행사토록 유도하는 지침
-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불공정거래(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를 엄단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불법이익은 철저히 박탈
 - 불공정거래 탐지·적발 역량 제고를 위해 AI기술 도입·활용 및 한국거래소 시장감시 담당 조직·인력 확충
- (주식시장 수요기반 확충)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MSCI 및 글로벌 투자자 등과 대외소통 강화
 - 공모주 우선배정 확대 등 코스닥벤처펀드 활성화
 - 기업의 성장단계별 특성을 감안하여 주식시장을 재구조화*하고,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확대 등으로 건전한 IPO 환경 조성
 - * (예) 코넥스(벤처·중소 위주) - 코스닥(성장·중견 위주) - 코스피(우량·대기업 위주)

□ 기대효과

- 성장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 활성화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창출
- 국민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을 조성하고, 기업 성장의 과실을 국민들과 공유

48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금융위)

□ 과제목표

- 디지털자산 규율체계 마련 및 디지털자산 현물 ETF·토큰 증권 관련 제도 정비
- 블록체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로드맵과 「블록체인기본법」 마련

□ 주요내용

- (디지털자산 규율체계 마련) 디지털자산 상장·공시, 사업자 유형별 영업 행위 규제 마련 등을 통한 건전한 시장기반 조성
 -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유통 관련 이용자 보호, 글로벌 정합성, 통화·외환정책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신속 마련
- (디지털자산 관련 상품 제도화) 금융·디지털자산 시장간 연계에 따른 리스크, 실물경제 영향, 투자자 편익 등을 감안하여 현물 ETF 도입 추진
 - 이에 더해 분산 원장 기반의 효율적 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이 가능한 토큰증권의 발행·유통 제도 도입
- (블록체인산업 지원 강화) 블록체인 생태계의 안정적 성장 지원을 위해 「블록체인산업 경쟁력 강화방안」(혁신로드맵), 「블록체인기본법」 마련
 - 디지털자산 혁신 서비스를 자유롭게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 성장을 위한 지역 인프라를 확충하여 블록체인 특구 실효성 제고 추진

□ 기대효과

- 건전한 디지털자산·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을 통해 디지털자산 산업 성장 및 투자자 편익 제고
- 통화 자산의 디지털화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송금 등 지급결제 편의 향상

[국정목표③]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전략-1.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 과제목표

- 5극 초광역권 출범 지원, 3개 특별자치도에 대한 맞춤형 특례 부여
- 사람·기업이 모이는 혁신거점 조성, 마을 및 중소도시 집약거점 육성

□ 주요내용

- (특별지자체 출범 지원)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 5극 초광역권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별 특별지자체 설치·운영
- (행정체제 개편 추진) 공공서비스 광역화를 위한 공공협약제도 도입, 지역 주도 행정체제 개편 추진을 통해 주민 삶의 질과 지역 경쟁력 제고
- (특별자치도 성장 지원) 5극 수준의 3특(제주·전북·강원) 육성을 위해 특별법 개정 및 특화성장지역 조성·지원*,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
 - * 지역특성에 맞는 전략산업 육성, SOC 인프라 구축 등
-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전략산업 선정·지원 등 혁신거점 제도기반 마련
 - 권역별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국가산단 조성 및 기존산단 개선
 - 도심융합특구·기업형혁신도시·캠퍼스혁신파크 등 기업·대학·연구기능 융복합
 - 외투 유치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연구개발특구를 창업거점으로 활용
- (광역교통망 연계) 5극3특 광역권 연계를 위한 광역철도·도로 적극 추진
 - 중심도시와 인접 생활권 등 권역내부 연계를 위한 광역교통수단 확충
- (중소도시 육성) 투자선도지구·기업혁신파크·新도시재생 등 경제거점 조성
 - 주거·생활SOC 복합공간 조성, 빈 건축물 정비, 삶의 질 지수 도입
 -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랜드마크 등), 관광거점 육성 등 지역 매력 확보

□ 기대효과

- 자치분권 기반 국가균형성장으로 고르게 잘 사는 대한민국 구현

50 행정수도 세종 완성 (국토부·행복청)

□ 과제목표

-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 등 건립 후 사회적 합의 거쳐 **완전이전** 추진
- 행정기능 강화, 교통망 확충,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지역발전** 견인

□ 주요내용

- (국가중추시설 이전) 대통령 세종집무실 임기 내 건립(설계공모, '25.下)
 -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지원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 및 통합협의체 운영
 - ※ 국가중추시설 일대를 국가 위상·정체성 상징하는 국가적 랜드마크 공간으로 조성
- (전국 접근성 개선) 서울^{1시간}, 전국(주요도시)^{2시간} 접근 가능한 교통망 구축
 -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건설, 광역 BRT 개통*, 충청권 광역도로망 구축
 - * 반석-구암 BRT, 공주 BRT, 조치원 BRT
 - 청주공항 민간활주로 신설 등 검토, BRT·CTX 등 세종-청주공항 연결 강화
- (자족기능 확충) AI·모빌리티·바이오 등 미래산업 기업혁신허브 조성
 -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 행정효율성 제고
- (행정수도 제도기반 마련) 국회의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제정 추진
 -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거쳐 행정수도 완성 제도적 기반 마련 추진

□ 기대효과

- 행정수도 완성을 통한 국정운영 효율화 및 균형성장 선도

51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균형성장 거점 육성 (국토부·산업부)

□ 과제목표

- 공론화 과정 거쳐 임기 내 2차 공공기관 이전 신속 추진
- 새만금 재생에너지 허브, 남부산업벨트 등 균형성장 거점 육성

□ 주요내용

- (2차 공공기관 이전) 이전 절차에 신속 착수하고, 지역 정주여건도 개선
 - 이전 대상 공공기관 전수조사 즉시 실시('25.下), 추진체계 신속 구축
 - 연구·공론화 거쳐 공공기관 이전 원칙·일정 등 로드맵 수립('26)
 - 청사 임차·공동청사 건설 등을 통해 신속하게 공공기관 지방 이전('27~)
 - 이전기관 종사자 조기 정착을 위해 교통·교육·의료·정주 패키지 지원, 연구개발 캠퍼스·기업 유치 등을 통해 지역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
- (새만금 도약) RE100산단 조성 등 재생 에너지 허브로 육성
 - 수상 태양광 1·2단계 등(2.7GW)은 에너지고속도로 가동시점과 연계 가동, 신규 3.3GW 확보를 위한 풍력 발전 등도 신속 추진
 - 남북3축 도로, 새만금공항·신항, 상수도 관로 등 기반시설 적기 조성
 -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설정,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으로 기업투자 촉진
- (남부산업벨트 육성) 남부권 산업위기 극복을 위한 신성장거점으로 육성
 - 3대 위기업종(석유화학·철강·이차전지) 특단대책 강구, 산업위기지역 패키지 지원
 - 항공·이차전지(동남권), 미래차·우주산업(서남권) 국가산단 조성

□ 기대효과

- 국토공간 균형성장을 선도하는 국가균형거점 육성

52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치분권 역량 제고 (행안부)

□ 과제목표

- 국가-지방 및 광역-기초간 협력 체계 구축, 지방자치권 강화 및 주민 자치 활성화, 국가사무 지방이양 등으로 분권 역량 확대

□ 주요내용

- (중앙-지방 협력체계 구축) 지역 관련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중앙지방협력 회의를 국가자치분권회의로 개편하고 개헌을 계기로 헌법상 기구로 격상
- (자치입법권 강화) 조례로 위임한 내용을 행정규칙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개헌을 계기로 폭넓은 자치입법권 보장
-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 조직·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의회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등을 확대하여 지방의회의 역량·책임성 강화
- (주민자치권 확대) 주민자치회 법적 근거 마련, 주민 선택 읍·면·동장 임용제 시범 실시, 주민소환제 개선,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 마련 등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 (권한이양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는 (가칭)「제3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및 지역별 맞춤형 권한이양 등 추진

□ 기대효과

- 자치권의 실질적 보장을 통한 지역의 특색에 맞는 자율적 정책 시행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
- 주민·지역 주도의 분권정책 추진으로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창의성과 다양성을 실현

53 지방재정 확충으로 자치재정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행안부기재부)

□ 과제목표

-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및 예산편성·집행과정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로 지방재정 자율성·투명성 강화
-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정적 발행 기반 조성 및 이용 활성화 지원

□ 주요내용

- (지방 자주재원 확충) 5극3특 지원을 위한 교부세율 상향, 중앙-지방 기능조정, 지방 세입확충 강화 등을 연계하여 국세-지방세 비율 7:3 수준 상향 추진
-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지원을 의무화하여 안정적인 발행기반 조성 및 발행규모 확대 지원
- (국고보조사업 혁신) 국고보조사업 포괄보조 확대 및 보조사업별 특성 등을 반영해 국가-지방 간 역할의 합리적 조정
- (지방재정 책임성·투명성 강화) 재정정보 공개 확대로 투명성 증진, 재정운용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 예산안에 대한 지방의회 심의 내실화
- (이·통장 재난특별활동비 지원) 재난 현장에서 헌신하는 이·통장의 노고에 국가가 보답하기 위해 이·통장 재난특별활동비 지원

□ 기대효과

- 실질적 재정분권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 지역사랑상품권의 안정적 발행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54 소멸위기지역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 (행안부)

□ 과제목표

- 인구감소지역 등 소멸위기지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재도약 기반 마련
- 실제 체류자 기반의 정책 추진 등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인구유입 촉진

□ 주요내용

-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업성과 및 집행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편, 재정분권 등과 연계하여 기금 규모 확대
- (차등 지원체계 정립) 수도권과의 거리 및 지역소멸도 등에 따른 차등 지원 원칙과 기준을 정립
-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법인 기부 도입 및 법인 기부금 활용방안 마련, 기금 사용목적 다양화 등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개선
- (복수주소제 단계적 도입) 실생활권 기반 정책 설계를 위해 ‘생활인구 등록제’ 도입, 특별자치도·인구감소지역 등 대상 복수주소제 시범 실시 및 전국 확대
- (생활권 중심 집약형 도시 도입) 인구감소지역에 주거·교통·생활 SOC 등이 집약된 도시를 시범 조성, 성과 평가를 통해 점진적 확대

□ 기대효과

- 인구감소지역의 인구유입 선순환 체계 마련을 통해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지속가능성 제고

55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교육부)

□ 과제목표

- 지역대학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지역 내 관련 기관 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의 교육력 제고 및 성장을 도모하고, 국가균형성장 달성

□ 주요내용

- (서울대 10개 만들기 실현) 거점국립대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체계적 육성
 -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으로 단계적·전략적으로 상향하고, 집중 육성분야 중심으로 교육·연구 경쟁력을 제고
 - 학문 분야 탐티어 교수를 선정하는 ‘국가석좌교수’ 제도를 신설하여 국·공·사립대에서 정년 제한(65세) 예외 인정 및 최고 수준의 연구 지원 추진
- (RISE 재구조화 추진) 지역산업과 국립대-사립대 간의 동반성장 지원
 - 5극3특 행정체계 개편과 연계하여 초광역 거버넌스 구축 및 협업 강화, 지역대학 간 교육과정·교원·연구장비·시설 등의 공유·협력을 고도화
 - ※ 지자체-대학 간 협력 강화로 한계 사립대학의 적정규모화 등 구조개선 및 역할기능 전환 지원
- (열린 평생·직업교육 지원) 누구나 일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평생·직업교육체계 구축
 - 직업교육기관 간 연계 강화*를 통해 지역 산업에 종사할 실무 인력을 육성하고, 전문대를 중심으로 성인학습자의 직무역량 강화 기회 확대
 - * 직업계고와 전문대 간 교육과정 및 학점 연계, 산업체 경력의 학점 인정 등
- (대학생 취창업·진로 지원) 입학부터 취업까지 연결되는 지원 시스템 확립
 - 산학연협력을 통해 대학 교육 - 실습 - 취·창업 지원을 연계하고, 대학생의 진로 설계 역량 및 취·창업 준비 지원 강화
- (유연한 학교 체제 마련)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미래형 학교 조성
 - 지역 교육혁신 플랫폼인 ‘교육특구’ 운영, 통합학교 운영 기반 마련 및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지원 등 지역 교육력 제고

□ 기대효과

- 지역의 교육, 취·창업, 정주지원으로 인구 유입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 다양한 연계·협력으로 기술개발, 창업, 일자리 창출 등 지역 성장 기반 마련

56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 (해수부)

□ 과제목표

- 북극항로 시범운항 및 상업항로화, 부산항 글로벌 거점항만 도약
- 국가 해상수송력 20% 확충(1.2억톤), 외항선박(5천톤 이상) 친환경 전환율 14% 달성, 쇄빙 컨테이너선 등 신기술 확보

□ 주요내용

- (해양수도 완성)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25년 내 완료, 정부·지자체 등 해운선사 이전협의회를 출범하여 HMM 등을 부산에 유치
 - * 건물 임차를 통한 '25년 내 이전 및 신청사 건립을 병행하고, 이주 직원 지원방안 마련
- (북극항로 개척) 국적선사에 쇄빙선 건조 지원 및 상업항로화를 추진하고, 유엔 해양총회 개최('28) 등을 통해 국제협력 강화
- (거점항만 조성) 컨테이너·LNG·원유 등 북극 화물별 거점항만을 육성하고, 부산항 등을 친환경·스마트항만으로 조성 및 글로벌 물류허브화 추진
- (해운 경쟁력 제고) 친환경 선박 중심으로 국가수송력을 확충*하고, 국적선사 경영안정, 이용률 제고 등을 지원하며, 선원 육성 및 매력도 제고
 - * 친환경선박 전환 보조금 지원 확대, 한국해양진흥공사 자본금 확충 추진
- (K-조선업 도약) '완전'자율운항선박, 무탄소 선박, 스마트·자동화 등 기술을 개발하고, 중소조선사 지원* 및 美 선박·함정 유지·보수·운영 등 신시장 개척
 - * 중소조선사 친환경선박 설계 지원, 선박 수주를 위한 선수금 환급보증(RG) 지원 확대

□ 기대효과

- 북극항로 개척 기회를 선점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신(新) 해양수도권 조성
- 국가 해상수송력 확충과 글로벌 허브항만 완성으로 우리 수출입 물류를 뒷받침하고, 글로벌 해양강국 지위 공고화

57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 (국토부)

□ 과제목표

- 철도·도로·항공 등 전국에 균형 잡힌 교통 인프라 확충
- 대도시권 교통혼잡 완화 및 교통소외지역 해소

□ 주요내용

- (전국 광역철도 확충) 메가시티 지원을 위해 지방권 광역(급행)철도 확충
 - 수도권 외곽지역 교통편의 향상을 위한 GTX 건설사업 차질 없이 추진
- (철도·고속도로망 구축) 전국 거점 연결 '4×4 고속철도망' 구축 가속화*
 - * 고속철도 수혜면적을 임기 내 53%(현재 39%)로 확대
 - 주요 간선도로망 11개 사업 적기 개통으로 '10×10 고속도로망' 구축
 -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확대, 지하고속도로 선도사업 착공
- (지방 항공관문 확대) 신공항 사업 추진, 국제선 LCC 운항 등 네트워크 확대
- (대도시권 혼잡 완화) 대도시 내 도시철도 및 BRT·광역버스 확대
 - 신도시 등 준공영제 광역버스 노선 추가, 주요거점 환승센터 확충
- (농·어촌 등 교통 소외지역 해소) 원하는 시간·장소 이용 가능한 수요 응답형 교통(DRT) 확대, 시외버스 등 필수노선 도입 및 물류취약지역 지원 강화

□ 기대효과

- 수도권은 더 빠르게^{1시간}, 전국은 더 가깝게^{2시간} 연결
- 농·어촌 등 교통물류 사각지대 해소로 전 국민 교통복지 실현

[국정목표③]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전략-2. 활력이 넘치는
민생경제**

58 금융안정과 생산적 금융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 (금융위)

□ 과제목표

-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하향 안정화·관리
- 부동산 부문에서 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공급 유도

□ 주요내용

- (가계부채 총량의 안정적 관리)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향 안정화되도록 중장기 로드맵 마련
 - 명목 성장률을 감안한 연도별 가계부채 관리목표 설정, 대출공급의 쏠림·중단이 없도록 월별·분기별 계획 마련 등 세심하게 관리
-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관행 정착)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중심의 대출관리 로드맵 마련 및 DSR 적용 예외 범위의 단계적 축소
 - DSR 예외대출 취급시에도 개인별 소득정보를 요구·확인하여 금융회사 대출심사에 적극 활용토록 유도
- (차주 금융부담 완화) 유한책임대출 활성화,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확대 등 대출이용자의 금융부담 경감 노력 지속
- (부동산대출 쏠림 완화) 부동산 관련 대출 취급시 금융회사에 추가적인 자본적립 의무*를 부과하여 가계부문에서 기업부문으로 자금운용 전환
 - * 은행이 주담대 취급시 보다 많은 자본을 적립토록 의무화(위험가중치 상향), 부동산 관련 대출 부실위험에 대비한 추가 자본적립의무 도입 등
 - 설비투자 등 기업금융 관련 자본적립 의무는 국제기준 범위 내 완화

□ 기대효과

- 가계 부문 채무부담 감소를 통한 소비 여력 확충으로 내수시장 활성화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
- 기업의 대출 접근성 향상으로 설비투자,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 조달할 수 있어 경영 안정성 제고

59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 (금융위)

□ 과제목표

- 소상공인·취약계층의 금융비용 및 과도한 채무부담 완화
- 금융 소외계층의 금융지원 확대 등 금융 접근성 제고

□ 주요내용

- (금융비용 절감)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권 가산금리 산정방식 개선* 및 개인사업자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
 - * 신·기보, 지신보 등 보증기관 출연금을 은행 가산금리에 과도하게 포함하지 않도록 변경
 - ** 현재 가계대출에 대해 운영중인 '대출 갈아타기'(이용중인 대출보다 금리가 낮은 다른 금융회사 대출로 변경) 서비스를 개인사업자대출까지 확대
- (금융문턱 완화) 중금리대출 확대,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 및 정교한 신용평가를 통해 서민·소상공인 자금공급 확대
 - * 금융권과 정부가 함께 출연하는 기금을 신설하여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
 - 소외지역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역특성을 고려한 은행점포 운영* 유도
 - * 은행영업점이 없는 지역은 은행대리업을 통해 우체국, 상호금융기관 등에서 은행업무 이용 등
- (채무부담 경감) 소상공인·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장기연체채권 소각* 및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강화**
 - *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 소각
 - ** 대상확대(現 '20.4월~'24.11월 사업영위자 → '25.6월까지 확대) 및 총 채무액 1억 이하인 저소득차주 감면을 확대(現 60~80% → 90%)
 - 정책대출을 성실상환 중이나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금리감면, 분할상환을 통한 자금부담 완화

□ 기대효과

-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보다 낮은 비용으로, 보다 원활하게 자금이용 가능
- 상환능력 상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취약계층이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위한 발판 마련

60 국민 생활비 부담 경감 (기재부)

□ 과제목표

- 매일 체감하는 통신·교통·주거비 등 필수생활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
- 품목별 수급·가격 동향 모니터링, 대응 강화 등을 통해 서민 물가 안정적 관리

□ 주요내용

- (통신비 경감) 전국민이 기본적인 통신·디지털 서비스를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요금제에 데이터안심옵션*(QoS) 전면 도입, 최적요금 고지제도 시행
 - * 데이터 제공량 소진 후에도 검색·메시지 전송 등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 가능
- 중저가폰 출시 확대 유도, 중고폰 거래 활성화 등 단말기 비용 부담 완화
- (대중교통비 절감) 전국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탑승·환승할 수 있는 신규 정액패스 추진(일정한도내)
 - 기본형(지하철·시내버스 등)과 통합형(광역버스·GTX 등) 정액패스 2종 출시
- (주거비 부담 경감)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와 대상주택 범위를 확대하고, '25년 모집 종료된 청년 월세 특별지원(월 20만원)을 '26년 이후에도 지속
- (양육비 부담 완화) 자녀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 (먹거리물가 안정) 기후변화 대응 등 농수산물 생산·유통 전반의 수급체계를 개선하고, 적정 물량 비축 등을 통해 안정적 공급기반 마련
- (물가관리체계 강화) 석유류 등 서민체감도가 높은 필수 생활비 품목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응 체계 구축

□ 기대효과

- 생활비 경감과 서민 물가 안정을 통해 청년 등이 애로를 겪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 가처분소득 증대로 가계의 살림살이 개선

61 다시 일어서는 소상공인, 활기 도는 골목상권 (중기부)

□ 과제목표

- 당면한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50만명의 금융·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선제적인 원스톱 재기지원체계 구축
- 지역대표상권 50곳 조성 및 글로벌 진출 역량을 갖춘 K-소상공인 1천개사를 육성하고, 스마트공방 보급 확대 등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

□ 주요내용

- (폐업·재도전 지원) 부실 예방을 위해 경영컨설팅부터 채무조정, 폐업, 재기까지 원스톱 지원하는 「통합 소상공인 회복전담지원체계」 구축
- (금융비용 절감) 성실상환자 대상으로 분할상환·금리감면을 확대하고,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 등 채무조정 지원 확대
- (경영부담 완화) 영세 소상공인 공과금 등 비용경감, 화재공제 가입대상을 골목형상점가로 확대하고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강화 등 사회안전망 확충
 - 경영악화로 인한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해약환급금에 대한 세부담 완화 검토
 - 부담금 분할납부 등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 정비
- (상권활력 제고) K-관광·산업·문화와 접목한 상권르네상스 2.0을 통해 민관 협업으로 글로벌 상권(대형), 지역 대표상권(중형), 소규모 골목상권(소형) 육성
 -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및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산
- (유망 소상공인 육성) 소상공인 AI·디지털 지원, 맞춤형 교육 제공, 민간 투자 연계 등 혁신적인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스케일업까지 체계적 지원
 - 소상공인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기관 운영, 광역형 소공인 도제교육 센터 운영, 중소·소상공인 전용 T-커머스 채널 신설 추진
 - 소상공인 공공구매 활성화, 소비재 중심으로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진출 등 수출 유망 소상공인 1천개사 육성

□ 기대효과

-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 및 자생력 강화와 함께 소상공인 역량 강화를 통한 유망 소상공인 육성 및 지역상권 활성화

62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국토부)

□ 과제목표

- 서민·실수요자 등을 위한 공적주택 110만호 안정적 공급
- 민간주택 신속공급 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

□ 주요내용

- (공적주택 공급 확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적주택 5년간 110만호 공급
 - 신혼부부·청년도 부담 가능한 다양한 유형의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
 - 적은 비용으로 안정적 거주가 가능한 공적임대 주택을 적극 확대
- (민간주택 공급 지원) 민간 주택사업에 대한 신속 인허가 적극 지원
 - 우량 사업장은 앵커리츠, PF 특별보증 등을 통해 원활한 추진 유도
- (정비사업 활성화) 도심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용적률 상향·절차 간소화 등) 제고
 - 이주자금 지원 확대 등 주민 내몰림 최소화로 정비사업 공공성도 강화
- (유휴부지 활용 공급) 입지가 좋은 노후청사·국공유지 활용 주택공급, 민간 정비 어려운 곳은 공공이 적극적으로 복합사업 추진
- (신도시 주택 조기공급) 3기 신도시 등 조성 중 택지 주택공급 조기화, 노후계획도시를 자족기능 갖춘 미래도시로 신속 정비
 - * LH 택지 민간매각 문제진단 및 근본적 개선방안 마련
- (주거환경 개선)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성능검사 강화, 관리비 투명화

□ 기대효과

- 주택공급 확대 등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 및 내 집 마련 부담 완화

63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 (국토부)

□ **과제목표**

- 신혼부부·고령자·1인 가구 등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
- 주거 취약계층·전세사기 피해자 등을 위한 **두터운 주거안전망 구축**

□ **주요내용**

- (신혼부부 주거 지원)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 초기자금 부담이 적은 **맞춤형 공공분양 주택 비중 확대**
 - 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 세대통합형 주택 시범사업 추진
- (고령친화주택 공급) 의료·복지 서비스 등 제공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실버스테이** 공급,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위한 **고령친화마을 조성**
- (1인가구 맞춤형 주거지원) 1인 생활패턴 특화 임대주택 공급 확대, 맞춤형 정보제공을 위한 **주거복지센터 확충**
- (취약계층 주거수준 향상) 노후 임대주택, 쪽방촌 재정비 등 주거환경 개선
 - 취약계층 임대주택 이주 촉진 및 최저·유도주거기준 설정, 주거급여 확대
-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피해 지원*, 가해자 처벌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 * 최우선변제금 보장대상 확대, 공공임대 지원, 피해주택 신속 매입 등
 - 안전계약 컨설팅, 정보제공 강화, 예방교육 확대 등 전세사기 사전 예방
-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집값 담합 등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해 감독체계 강화

□ **기대효과**

- 두텁고 촘촘한 주거안전망 구축으로 **주거안정 실현**

[국정목표③]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전략-3. 협력과 상생의
공정경제**

64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공정위)

□ **과제목표**

- 플랫폼의 불공정행위 및 대기업집단 부당 내부거래 근절
-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마련

□ **주요내용**

-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 소비자·입점업체 보호 및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규율체계 마련
 - 계약 체결·변경·이행 등 거래 전 과정의 정보제공 확대
 -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은 경감하고, 단체구성권 등을 통해 협상력 강화
 - 대금 정산기한 준수, 대금 별도관리 의무 부과로 거래대금 유용 방지
- (경제적 약자 보호 기반 강화) 가맹본부·원사업자 등 우월적 지위 사업자에 대항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창·폐업여건 개선
 - 가맹점주 단체협상권, 대리점주·수급사업자·입점사업자 단체구성권 도입
 - 가맹 창업 정보가 신속 제공되도록 공시제를 도입하고, 상권 급변에 따른 적자 누적 등 불가피한 경우 과도한 위약금 없이 폐업 가능하도록 계약해지권 부여
- (부당 내부거래 감시 강화) ▲지주회사 체제 내 중복상장 유인 축소 ▲사익편취 규제회피 방지 ▲부당이득 비례 엄정제재를 위한 과징금 합리화
- (공정한 조달시장 구현) ▲직권조사 도입 ▲조사 거부·불응 등에 대한 과태료 도입 ▲조달구매기관의 부당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기대효과**

-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구축 및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경쟁 기회 보장
- 계열사 지원이 없는 독립·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 기반 회복

65 소비자 주권 실현 및 불공정행위 근절 (공정위)

□ 과제목표

- 일상생활 밀접분야에서의 소비자 권익 침해 예방
- 불공정·위법행위 신속 차단 및 실효적 피해구제 확대

□ 주요내용

- (생애주기별 소비자 권익 강화) ▲결혼서비스 가격표시 의무화(청년) ▲헬스장 등 보증보험 가입여부 표시 의무화(중년) ▲상조업체 자산건전성 제고(노년)
- (민사적 구제·집행 확충) 민사적 불공정행위 억제수단 강화 및 피해구제 체계의 실효성 제고
 - 민간이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불공정행위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확대*
 - * (기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 → (확대)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법상의 불공정행위도 포함
 - 불공정거래로 인한 소비자·중소기업의 피해회복 및 권익증진을 위한 기금 조성
 - 소비자 단체소송 활성화를 위한 소송 허가제 폐지 및 예방적 금지청구권 도입
 - 법원이 상대방 및 공정위에게 손해 증명 자료제출을 명령하는 제도 확대·도입
- (분쟁조정 및 집행체계 강화) 공정거래·소비자 분쟁 조정제도 선진화 등을 위한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 및 「소비자기본법」 개정
 - 공정거래 분쟁조정제도 일괄 정비(6개 법률조항 통합) 및 조정제도 신설·보강*
 - * 간이조정절차 및 감정·자문제도 도입, 집단조정 확대 등
 - 조정 불성립 분쟁에 대한 소송지원 근거 마련 등 소비자 분쟁조정 내실화
 - 피해구제 중 확인된 위반사실을 한국소비자원이 통보할 경우 지자체의 조치·회신 의무 신설
 -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일괄구제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신설

□ 기대효과

-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환경 조성
- 불공정행위에 대한 민사적 구제 확충을 통해 소비자·중소기업의 권익 신장

66 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금융위)

□ 과제목표

- 투자자·소비자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금융환경 조성

□ 주요내용

- (소비자권익 우선 제도 개선) 금융소비자 정책·감독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민·관 합동 회의체) 신설
 - 소액분쟁 사건에 대해 금융회사가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제도(편면적 구속력) 도입
 - 단기 영업실적보다 고객이익을 우선토록 금융회사 성과보상체계(KPI) 재설계
- (금융소비자 편익 증진) 국민 편의와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실손보험 제도를 개선
 - 은행 영업점에서도 대면으로 쉐 금융회사에 흠어진 본인 금융정보를 조회(마이데이터)하고, 다른 은행계좌에 대한 조회·이체 등이 가능(오픈뱅킹)토록 개선
- (금융사고 발생 방지) 금융 보안사고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신설
 - 최대주주의 법령위반 등으로 금융회사 건전성 악화 시 최대주주에 대한 주식처분명령 도입
- (금융범죄 단속 강화)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금융당국·과세당국·수사기관(검찰, 경찰) 등과 강력한 합동 대응체계 구축
 - 통신사·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의심정보(계좌정보, 통화기록 등)에 대한 상호공유체계를 구축하고, 범죄 발생을 사전 차단
 - 불법추심에 이용된 대포통장·대포폰 및 SNS계정 등 불법수단 차단체계* 구축

* 불법추심 이용 대포통장은 거래관계를 종료하고, 대포폰은 전화회선 차단 조치

□ 기대효과

- 수요자 중심의 금융소비자 제도·정책을 마련하여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
- 보이스피싱, 불법리딩방 등 악성범죄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

67 기술탈취는 근절하고, 상생의 기업환경 조성 (중기부)

□ 과제목표

- 기술탈취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 및 분쟁 해소를 통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대·중소기업간 임금복지 격차 해소

□ 주요내용

- (기술보호제도 강화)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소송과정에서 피해사실 입증부담 완화 및 온전한 피해보상을 위한 제도 개선
 -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및 법원의 자료제출명령권 신설, 징벌적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는 손해액 산정의 현실화 추진 등 기술탈취 처벌 강화
- (피해구제 제도화) 공정위·중기부 공동 피해구제기금 조성, 중소기업의 분쟁조정 및 피해구제 통합 전담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사전 예방시스템 구축
- (상생환경 조성)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을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 및 사각지대 차단, 하도급대금 지급의 안정성 제고, 상생금융지수 도입
 - 중소기업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단체협상권 부여
- (플랫폼 공정거래 환경 구축) 온라인플랫폼 상생협력 제도화*를 통해 상생문화를 확산하고, 소비자와 상생을 위한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
 - * 플랫폼 동반성장평가 및 실태조사 실시, 플랫폼-입점사업자 간 상생협의체 운영
-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 청년의 '참 괜찮은 강소기업*' 유입 촉진,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자산형성 지원프로그램** 확충, 복지플랫폼·바우처 신설
 - * 일자리, R&D, 해외진출 등 분야에서 우수성·성장가능성을 인정받은 중소기업
 - ** 중소기업 재직 청년(19~34세) 대상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형 청년미래적금' 신설
 - 대기업 등 퇴직 전문인력과 지역 중소기업 구인 수요를 매칭하고, 석·박사급 외국인 유학생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

□ 기대효과

- 공정한 시장 질서 하에서 중소기업이 더 이상 불공정행위로 인해 좌절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중소기업 근로여건을 개선하여 청년, 퇴직전문인력, 외국인 등 우수인력의 중소기업 유입 및 장기 재직 유도

[국정목표③]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전략-4. 희망을
실현하는 농산어촌**

68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농식품부)

□ 과제목표

- 식량안보 체계 확립, 선제적 수급 안정으로 쌀·식량작물 적정가격 유지
- 스마트농업, K-푸드 수출, 친환경유기농업 확대 및 농축산물 유통개혁 추진

□ 주요내용

- (식량안보 강화) 식량 자급률 목표를 상향하고, 목표달성에 필요한 관련 예산 확보 및 농지 면적 보전을 위한 법적 제도화 추진
 - 강력한 타 작물 인센티브로 쌀 생산과잉 사전 방지, 불가피한 과잉시 정부 매입
 - 농림위성을 활용한 수급예측 고도화, 자조금의 수급관리기능 제고
- (식생활 돌봄 대상 확대) 농식품 바우처는 차상위계층 임산부·영유아·아동·청년 가구까지, 아침밥은 대학생에서 산단 근로자까지 확대
 - 초등학생 과일간식 및 임산부 대상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 재개
- (스마트농업 고도화) 중소농을 위한 맞춤형 스마트팜 모델 개발, 스마트 농기자재 공유센터 도입 및 농산업 AI·로봇 등 신산업분야 R&D 투자 확대
- (K-푸드 수출 확산) K-푸드 거점 재외공관 지정 확대, ODA·문화 마케팅 연계, 한식·전통주 등 수출 주력 품목 육성으로 수출액 150억불 달성
- (유통구조 혁신) 농산물 도매유통의 50% 이상을 온라인 도매로 전환하여 도매시장 등의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경매제 중심의 가격결정 시스템 다양화
 - 출하자 지원기금 조성, 위탁수수료 체계 개편, 매수가격 공개 등 도매시장 공공성·투명성을 강화하고 생산자·소비자의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참여 확대
 - 생산·유통 일관출하 체계를 위해 스마트 APC(산지유통센터) 확대(300개소) 등 추진
- (친환경농업 확산) 경축순환(가축분뇨 퇴비화)·탄소중립직불제 신규 도입, 생산과정 위험요소 평가 방식으로 인증제 전환 및 친환경유기농업 면적 2배 확대

□ 기대효과

- 식량자급률 제고 및 유통구조 혁신으로 생산자·소비자의 이익 상생 도모

69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농식품부)

□ 과제목표

- 농가 소득 기본안전망 보장, 농산물 생산·가격 변동에도 농가의 안정적 소득 보장
- 농업재해 국가 책임성 강화, 농가 경영비 부담 최소화, 농업 세대전환 촉진

□ 주요내용

- (소득안전망 강화) 다양한 선택직불 도입 등 공익직불을 확대하고 가격안정제 도입
 - 기본형 공익직불·전략작물직불·친환경직불 단가 인상, 기후변화적응 및 동물복지축산 등 신규 선택직불제 도입
 - 농산물 수급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정수준 이상 가격 하락 시에 대비하여,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 (재해 국가책임제 도입)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손해는 재해보험료 할증 시 제외
 - 재해 복구 지원은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되 보험 가입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원수준 차등화
 - 비보험작물에 대해 보험 방식으로 개별농가 피해를 측정·보상하는 지원제도 마련
 - AI 등 활용한 재해위험지도 구축, 재해 조기경보시스템 전국으로 확대
- (경영비 부담 완화) 필수농자재 가격 상승정도에 따른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기관 확대(200개소) 등 농업경영 지원 강화
 - 농지 임차 등으로 농지 집적화·경영 규모화를 추진하는 공동영농법인 육성(100개소)
- (농업 세대전환) 예비농업인 제도 도입 등으로 청년농업인재를 양성하고 퇴직연금형 저축 도입, 농지이양은퇴직불금 단가 인상 등 노후소득 보장
 - 공공비축농지를 2배 확대하고 청년농에 우선 임대 및 임대 상한 조정

□ 기대효과

- 70세 미만 농가소득을 도시 근로자가구의 평균 근로소득 수준으로 제고

70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 (농식품부)

□ 과제목표

- 주거, 일자리, 생활서비스, 기본소득으로 농촌 정주여건 개선 및 생활인구 확대
- 농어촌 에너지 자립, 햇빛소득마을 도입 등 농어촌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확산

□ 주요내용

- (농촌 재생 지원) 농촌공간계획에 따른 농촌특화지구 육성(시군별 1개소)으로 농촌공간을 기능별(정주·산업·경관 등)로 재배치하고 빈집 재생 및 인프라 확대
 - 농어촌 빈집 7.8만호를 창업·관광 공간 등으로 정비 및 재생
 - 재생거점마을(시군별 1개소) 조성, 산촌체류형 쉼터 도입,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18개소) 확대 등 생활인프라 조성 및 귀농·귀촌 지원 예산 복원
- (재생에너지 확산) 농촌 RE100 실현을 위한 농업시설 재생에너지 공급 기반을 구축하고 주민공동체 주도의 햇빛소득마을 500개소 조성
 - 계획입지 기반의 농지·농업법인 규제완화로 영농형 태양광을 확대하고, 농촌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및 전기 등 친환경 농기계 개발·보급 활성화
- (혁신 일자리 창출) 농산업 혁신벨트를 조성하여 기회발전특구와 연계, K-헤리티지 관광벨트 구축, 국가정원 확충 등 지역 특화산업 육성
- (필수서비스 공급) 농촌 중심지는 생활 SOC 인프라 확충, 취약지역은 의료, 돌봄, 식품 등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100개 읍면)
 - 주민 수요를 실시간 반영하는 AI 기반 수요맞춤형 교통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콜버스 등)하고, 왕진버스 서비스를 보건소와 연계하여 개편
- (기본소득 도입) 소멸 위험이 높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부터 햇빛·바람 연금 등과 연계한 농어촌 기본소득 단계적 확산

□ 기대효과

- 생활인구 증가, 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 농산어촌 경제 활성화 및 주민소득 증대

71 어촌·연안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산·해양산업 혁신 (해수부)

□ 과제목표

- 수산물 생산량 연 400만톤, 어가소득 7천만원, 해양관광 1,700만명 달성 목표
- K-씨푸드 수출 천만불 기업 100개사, 해양수산 유망기업 2,000개사 육성, 풍력에너지 18.3GW 달성 지원

□ 주요내용

- (기후위기 대응 수산 혁신) 어획량을 관리하는 총허용어획량(TAC) 중심 체계로 재편하고, 노후어선 감척 및 대체건조 지원, 청년 어선임대 확대
 -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5개소), 상습 재해 발생 양식장 이전 및 품종 전환 등을 지원하고, 재해보험 대상 확대 등 복구지원
- (유통 혁신) 직거래·온라인(60→146개 품목) 거래 확대, 노후위판장 현대화 및 산지거점유통센터·소비지분산물류센터 확충으로 전국단위 콜드체인 구축
 - 비축품목 확대 등을 통해 수산물 수급·가격 안정
- (어촌 활력) 청년 어업인 육성(주거·일자리·금융 등 지원) 및 섬 지역 주민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한 어촌복지버스 사업 전면 시행('26~)
 - 지역거점(생산·유통·가공·관광) 국가어항, 어촌뉴딜 3.0 사업으로 경제·생활 거점을 육성하고, 공공형 계절근로제 본격 도입
- (연안경제 활성화)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국가해양생태공원 등을 조성하고, 해양에너지·바이오·블루푸드 등 신산업을 육성*
 - * 해양에너지 상용화, 해양에너지 연계 그린수소 생산기술, 바다생활권 특화펀드 조성 등 추진
- (해상풍력 등 추진) 「해상풍력특별법」 시행에 따른 계획입지 지정, 어업인 이익공유 모델 도입 등을 지원하고, 염습지·바다숲 등 블루카본 확대

□ 기대효과

- 양질의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어촌주민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
- 해양관광 활성화, 해양 신산업 육성 등으로 연안 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 소멸을 방지하고, 어촌을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회복

[국정목표④]
기본이 튼튼한 사회

**전략-1.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

72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 (행안부)

□ 과제목표

- 재난안전에 대한 국가 책무확립 및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
- 항공·교통 사고, 싱크홀, 건축물 화재 등 분야별 안전사고 대책 강화

□ 주요내용

- (국가 재난안전책무 강화) 대통령실로 재난관리 컨트롤타워 복원, 「생명안전 기본법」 및 「사회재난관리법」 등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위한 법령 제정
- (재난안전관리 역량강화) 재난안전산업 펀드조성, 전문육성기관 설치 등 재난안전·소방 산업육성, 재난안전부서 우수인력 배치 및 조직 강화
- (교통안전 대책강화) 방위각 시설개선, 조류탐지 레이더 도입 등 항공안전 강화, 차축발열 감지시스템 확충, 첨단 선로 보수장비 도입 등 철도안전 강화
 - 전기차·이륜차·개인이동수단(PM) 안전대책 마련, 고령운전자 안전운행 강화,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 자율주행 법령제정·주차방해처벌 등 질서 확립
- (건설안전 대책강화) 지반탐사·노후 상하수도관 정비 확대 등 싱크홀 방지, 화재안전 성능기반 설계 등 건축물 화재 예방, 건설공사 쏠 과정 안전대책 마련 등
- (생활안전 거버넌스 강화)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확산, 주민참여형 취약지역 개선사업, 주민점검 신청제 확대, AI 안전신문고 도입 등

□ 기대효과

-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 사회 실현
- 생활 속 안전 강화 및 안전사고 최소화

73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대응 강화 (행안부)

□ 과제목표

- 홍수·가뭄·산불 등 자연재난과 대형 사회재난 예방대책 및 대응체계 강화
- 피해자 지원 확대, 접경지역 지원, 사회적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 등 국가 책임 강화

□ 주요내용

- (재난 대응체계 강화) 실시간 상황 공유, 현장 작동성 강화, 주민 대피체계 고도화, 취약계층 대피 지원, 사회재난시 관계기관 협업기반 구축 등
- (재난 모니터링 강화) AI기반 지능형 관제(CCTV) 고도화, 인파·침수·산불 등 특정재난 예측모델 선도개발, 재난 드론 활성화, 예·경보 통합플랫폼 구축
- (긴급구조 역량강화) 재난현장 지휘권 강화, 첨단 소방장비 및 AI기반 119시스템 등 인프라 확충, 전기차 화재진압장비 보강, 화재취약계층 지원
- (재난피해 지원확대) 재난 피해 지원 항목확대·요건완화·기준상향, 접경 지역 피해지원, 사회적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 등
- (홍수·가뭄 예방대책 마련) AI기반 홍수예보 확대, 수해 감시 전용 통신 위성 개발, 도시침수 예보지역 및 침수대응 인프라 확충, 수자원 연결망을 활용한 가뭄 위협 대비 등
- (산림재난 총력대응) 산불진화자원·특수진화대 확대, 생활권 산불안전 공간 조성, 산사태 취약지 사방사업 확대, 소나무재선충 예찰 방제 확대 및 수종전환 활성화 등

□ 기대효과

- 재난 발생에 따른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
- 조속한 일상 회복과 사회적 갈등 최소화

74 국민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및 민생치안 역량 강화 (법무부·경찰청)

□ 과제목표

- 통합적인 범죄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고도화
- 악성사기·금융범죄 및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고 철저히 범죄수익을 환수

□ 주요내용

- (범죄예방 통합체계 구축) 「범죄예방특별법」 등 제정, 고위험군 출소자 정보 관계기관 공유 및 보호수용 시설 확대,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개편, 소년원 과밀해소
- (범죄피해자 지원 강화) 교제폭력 사건 판결확정 전 잠정조치 및 피해자 보호명령 도입,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고도화 및 통합지원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원스톱 지원 추진
- (민생·금융범죄 근절) 보이스피싱·투자리딩 등 다중피해 사기방지를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민·관 협업체계 강화를 위해 신고보상금 확대
 - 독립몰수제 도입 및 기소 전 몰수 보전 활성화, 특정 불공정거래행위 사용 의심 계좌 지급 정지, 범죄수익환수 국제공조 강화 등 불법이익 은닉 방지
- (마약류 중독 대응체계 확립) 마약류 중독자 재범 방지, 불법 마약류 해외 유입 차단,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 잠입수사·위장수사 등 도입
- (예방중심 치안활동 강화) 이상동기범죄 전조증후 분석 고도화 및 재범 우려자 관리·순찰 강화, 여성 1인 가구 등 범죄취약계층 대상 안전망 구축
- (신종범죄 대응역량 강화) 치안AI 도입, 딥페이크 등 기술적 위협에 선제 대처

□ 기대효과

-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고 소년범의 조속한 사회복귀 조력
-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체계 고도화를 통해 평온한 일상 회복 지원
- 민생침해 및 금융 범죄 등 다중피해 사기 대응체계를 구축, 민생경제 보호

75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 (노동부)

□ 과제목표

- '30년까지 사고사망 비율 1만 명당 0.29명(OECD 평균)으로 감축
-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안전보건체계 구축과 산재보상 국가책임 실현

□ 주요내용

- (일하는 모두의 안전보건체계 구축) 대규모 사업장부터 안전보건공시제 단계적 도입, 업종·규모·종사자(특고, 플랫폼, 프리랜서)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 등
 -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도입, 건설 발주·설계·감리자 책임 강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확대(원청, 타 업종) 등
- (실효적 산재예방으로 안전권 강화) 위험성평가 개선(차별조항 신설, 근로자대표 참여 의무화 등), 재해조사의견서 공개, 중대재해 수사체계 확충 및 신속처리
 - 노동자 안전을 위한 작업중지권한 강화(작업중지권 요건 완화, 작업중지·시정 조치 요구권 신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및 특별감독 참여 의무화
- (산재보상 국가책임 실현) 법정 재해조사기간 경과 시 선지급, 산재 신청 시 국선대리인 지원 신설, 전국민 산재보험 단계적 추진(업종, 직종 확대)
 - 업무상 재해 규범적 판단 명문화, 업무상 질병 추정 대상 확대 및 기준 완화, 산재 판정 자료 공시, 산재판정기구 공정성·독립성 강화
- (새로운 위험 예방) 신산업 안전기준 법제화, 감정노동 보호 대상 확대·조치 강화, 과로사·과로자살 방지, 야간노동 규율* 신설
 - * (논의 예시) 야간노동 관련 최소 휴식시간, 최장 노동시간 및 연속 근무일수 제한 등

□ 기대효과

- 취약 사업장 재해 감축, 신속한 산재 처리,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76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 안전하고 청정한 우리바다 (해수부)

□ 과제목표

- 해양과학조사·해양시설물 확충 등을 통한 해양권익 수호
- 해양사고 인명피해 50% 저감, 인명구조율 99% 이상을 달성하고, 관할 해역 30% 해양보호구역 등 지정

□ 주요내용

- (해양주권 수호) 서해 무단 시설물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책을 신속히 마련하고, 외국어선 불법조업으로 부과되는 담보금액·기준 상향 추진
 - 어업지도선 건조 및 불법어업 단속인력 등을 확충하고, 저궤도위성·해양조사선·무인항공기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감시 강화
- (해양안전 확립) 5톤 미만 소형선박(전체 선박의 약 70%)에 대한 운항자격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어선 구명조끼 상시착용 의무화 등 어선안전관리 강화
 - 어선원안전감독관 확충, 안전장비 등 지원
 - 지상파 항법시스템 구축, 해양교통 전문 라디오 확대 운영, 해양 IoT 통신 체계 개발 및 정보서비스센터 구축, 여객선 화재 대응장비 지원
- (스마트 해양관리) AI 기반 안전·재난 관리시스템 구축, 전 해역 해양감시 범위를 확대하고, 1,500톤급 화학방제함 등 친환경 방제선 도입
 - 함정·항공기 정보 및 첨단기술(위성 등) 기반 광역 감시·정보체계(MDA) 구축
- (해양보호구역 확대) 대형(1천km² 이상) 해양보호구역 매년 1개소 이상 지정하고, 해양폐기물 처리 인프라 확충

□ 기대효과

- 해양안보 위협에 대한 실효적 대응으로 대국민 신뢰를 확보하고, 해양 재난·재해 예방 및 대응 강화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 독도 등 관할해역 감시체계 역량 강화로 빈틈없는 해양안보 태세를 구비하고, 해양보호구역 확대 등으로 청정한 바다, 건강한 해양생태계 보전

[국정목표④]
기본이 튼튼한 사회

**전략-2. 내 삶을
돌보는 복지**

77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복지부)

□ 과제목표

-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선정 기준 개선을 통한 **생활안전망 강화**
- AI 기반 복지 혁신으로 위기가구 발굴·지원 확대 및 사각지대 **최소화**

□ 주요내용

-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및 대상자 선정기준을 '3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35%로 단계적 상향
 -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및 부양의무자 기준 간소화로 대상자 확대, 사회적 입원 관리 방안과 퇴원 후 통합돌봄 연계 방안 수립 추진
 - * 부양의무자가 소득 중 일부를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금액
 -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마련, 자활기업 창업지원 확대 등 탈수급 지원 강화
- (AI 기반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AI 복지·돌봄 혁신 로드맵*에 기반하여 AI 기술 활용 위기가구 발굴·지원 확대 및 선별의 정확도 제고
 - * AI 활용 예측 복지, 복지·돌봄 기술 개발 등 핵심 과제·액션플랜 제시
 - 복지멤버십에 기반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추천으로 신청주의에 따른 사각지대 최소화 및 복지·돌봄·고용·금융 등 복합지원 강화
 - 위기가구가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긴급복지 지원 선정대상 확대 및 지원금 인상
- (상병수당 확대) 시범사업 정책효과 분석·평가, 사회적 논의, 법령 개정 등을 거쳐 상병수당 제도화 방안 마련 및 시행
- (기본사회 추진체계 마련) 헌법상 행복추구권 실현을 위해 국민의 기본적 삶 보장을 지향하는 **기본사회**의 법적·제도적 기반 및 추진체계 마련
 - 종합계획 수립 및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지원하는 (가칭)기본사회위원회 운영

□ 기대효과

-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현실화로 저소득층의 최저 생활 보장
- AI 기반 복지시스템으로 신청주의에 따른 사각지대 최소화

78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복지부)

□ 과제목표

- 노인·장애인 등이 시설(병원)에 입소(입원)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통해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 보장

□ 주요내용

- (본 제도 시행) 「돌봄통합지원법」 시행('26.3)에 맞춰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본사업 전국 확대 시행
 - (대상자 확대) 입원·입소 경계선상에 있는 노인*을 시작으로 장애인·정신질환자 등 대상자 단계적 확대
 - *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등급외자, 의료기관 퇴원환자,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중점군 등
- (서비스 확대) 재가서비스의 종류와 제공규모 대폭 확대
 - (장기요양) 중증 재가서비스 월 이용한도액 확대, 단기보호 활성화 및 방문재활, 방문영양 등 신규서비스 도입
 - (재가의료) 재택의료센터 전국확대, 재택간호센터·생애말기케어 도입
 - (일상생활돌봄) 가사·식사·이동지원 등 일상생활 서비스 확대
 - (노쇠예방) 보건소 중심 적극적 건강관리·노쇠예방으로 건강수명 연장
- (서비스기관 확충) 통합재가기관·재택의료센터 대폭 확대 및 보건소·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재택의료 제공 기능 강화
- (지원주택 확대) 퇴원환자 대상 단기간 돌봄·주거서비스가 지원되는 지원주택(중간집) 도입 및 단계적 확대로 요양병원(시설) 입소 방지
- (지자체 중심) 지자체 전담조직·인력 확충 지원 등으로 역량 및 책임강화

□ 기대효과

-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의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 In Place) 실현
- 요양병원 입원율·요양시설 입소율 감소 등 건강성과지표 개선

79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 보장 (복지부)

□ 과제목표

- 장애인 돌봄, 자립, 건강 등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및 자립지원
- 소득, 근로, 이동 등 장애인 권리 기반 강화

□ 주요내용

- (“권리”로서의 장애인복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장애인지역사회 자립법」 시행 등 장애인 권리에 대한 법적 기반 구축
 - 지역사회 자립지원 본사업 실시로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주택·일자리·활동지원 등 서비스 연계 지원
-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실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을 1.2만명에서 3만명까지 확대
 - 최중증 대상 통합돌봄 지원 확대, 서비스 단가를 주간활동서비스 단가의 200%까지 단계적 인상 등 최중증 지원 내실화
- (개별맞춤형 지원 확대) 장애 특성을 고려한 지원체계 대대적 확충
 - (건강권) 장애인주치의, 장애친화 의료인프라 등 건강관리 지원 강화
 - (소득보장)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을 ‘장애가 심한 장애인’ 전체로 확대*
 - * (기존)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장애 → (개선) 3급 단일장애까지 확대(연금액 차등)
 - (일자리)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29년 기준, 민간 3.5%, 공공 4.0%), 기업 대상 고용개선장려금 신설 및 근로지원인 단계적 확대 추진
 - (이동권 등)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 무장애 인증 의무 확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확대 등 접근성 강화

□ 기대효과

- 발달장애인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 및 장애인 권리기반 강화
- 장애인연금 확대로 소득보장강화, 이동권·건강권 확보, 일자리 지원 등 권리기반 강화를 통한 장애인의 삶의 질 제고

80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농식품부)

□ 과제목표

- 동물 ‘보호’에서 ‘복지’로 관점을 전환,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 조성
-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지역의 동물진료 공백 최소화

□ 주요내용

- (동물복지 정책기반 강화) (가칭)「동물복지기본법」 제정('27) 및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추진,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등 인프라 확충
 - 농장동물, 동물원·실험·봉사·레저 동물 등 복지 개선 및 관리체계 마련
 - * ▲동물복지 축산직불금 도입 ▲동물원·수족관 허가제 전면 적용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 제정(관계부처 합동) ▲은퇴견 지원센터 설립 ▲학대 말 긴급 구호시스템 구축 등 추진
-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경감) 취약계층 등 지원을 위한 공공동물병원 조성, 공익형 표준수가제 도입 및 민간 확산(상생동물병원) 추진
 -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항목을 확대하고, 보험 활성화를 위해 동물등록 지원 및 동물의료 정보시스템 구축
- (건강한 반려문화 확산) 동물학대자에 대한 사육금지제를 도입('27)하고, 생산업 허가 갱신제 도입('27) 및 유사 동물보호시설 규제 등 영업관리 강화
 - 시설·인력 기준의 단계적 향상, 광고 표시기준 강화 및 위반시 처분 근거 마련 등 공장식 생산·판매체계 개편 기반 조성
- (연관산업 육성) 펫푸드 등 수출·창업 지원을 위한 (가칭)「반려동물연관산업육성법」 제정('26)
 - 영양표준 등 펫푸드 분류체계, 특수목적 영양사료 기준 등 마련

□ 기대효과

- 동물복지 중심의 사회 원칙을 확립하고 동물학대 없는 건강한 반려문화 확산
- 동물의료 접근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고 진료비 부담 경감

81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 (기재부·행안부)

□ 과제목표

-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기반 및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
- 사회연대경제조직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 성장 지원 강화

□ 주요내용

-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사회연대경제 통합적 생태계를 구축하고, 포용성장과 지역경제 순환 촉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본법을 조속히 제정*
 - *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통일된 정의·범위 규정, 행정·재정지원 근거 마련 등
- (민관협력 지원체계 구축) 기본·시행계획 수립을 통한 체계적 관리·지원과 개별 조직이 업종·분야별로 중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 강화
 - 지역 특성에 부합한 성공모델 확산을 위해 지원기관(사회적기업진흥원 등) 기능 및 시·도별 지원센터 확대, 기초지자체 단위 민관협의체 구축
-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를 위해 신탁 등 상호금융기관의 금융지원* 독려 및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정비
 - * 지원자금 마련 위해 상호금융중앙회 내 기금 조성, 신탁의 출자 허용 등
 - ** 금융회사의 지역 자금공급, 서민대출 지원실적 등을 평가
 - 금융권 자금이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사회연대 금융 중개기관 육성
 - 미소금융 등 도매자금(사회연대경제조직에 임차·운전·시설자금 등을 제공)의 대출·투자규모와 정책금융기관의 보증공급 확대
- (사회연대조직 성장 지원)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자활기업 등 개별 조직간 협력·연대사업 지원, 스케일업, 컨설팅·교육 등 종합적 지원 추진
 - 사회연대조직이 생산한 제품·용역에 대한 공공부문 우선구매 촉진 의무 신설, 국·공유재산 임차료 인하 등 경영부담 경감

□ 기대효과

- 사회연대경제 성장을 촉진하여 고용 창출 및 양극화 완화, 지역소멸 대응, 공동체 신뢰회복 등 다양한 경제·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

82 생애주기별 금융 자산·소득 형성 (금융위)

□ 과제목표

- 영·유아기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지원을 보다 강화
- 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교육, 재무상담 확대 등 전 국민의 금융역량 제고

□ 주요내용

- (청년미래적금 신설)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청년층 자산형성 상품인 ‘청년미래적금’ 신설
 - 일정소득 이하 청년층이 적금을 납입할 경우, 정부가 일정비율 금액을 매칭형태로 지원
 - 중소기업 신규 재직 청년 등에 대해서는 추가 인센티브 제공
- (주택연금 제도개선) 주택연금 수령액 산정방식 개선* 등을 통해 노후연금소득을 확대
 - * 초저가주택에 대한 지원금액 확대, 가입자 납입 보증료 대비 수령액 합리화 등
 - 주택연금 가입률 제고를 위해 가입요건(주택가격 및 실거주 요건 등) 정비
- (전국민 경제·금융교육 강화) 어린이, 청소년, 청년·군인·중고령층 등 생애전주기를 대상으로 수요자 맞춤형 온·오프라인 경제·금융교육 집중 실시
 - 기존 은행권·서민금융진흥원 등에서 운영중인 금융·재무상담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으로 확대·개편
- (우리아이자립펀드 신설) 아동이 성인이 되기 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장기 검토

□ 기대효과

- 아동, 청년, 어르신 등 생애주기별 자산 확충으로 생활이 안정되고, 자산불균형도 해소

[국정목표④]
기본이 튼튼한 사회

**전략-3.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

83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복지부)

□ 과제목표

- GDP 대비 국민 총 의료비 지출을 OECD 평균* 수준으로 관리
 - * ('15년) OECD 평균 8.7%, 우리나라 6.5% → ('23년) OECD 평균 9.1%, 우리나라 8.5%
- 국민 중심 의료개혁 추진으로 사회적 갈등 해소 및 환자권리·안전 보장

□ 주요내용

-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지속 개편하여 공정한 부과기준 확립
 -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 약가 산정체계 개선 및 주기적인 약가 조정체계 마련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지출 요인 억제
- (협력적 의료전달체계 구축) 대형병원 수도권 쏠림을 막기 위해 지역 내 역량 갖춘 병원 육성* 및 1·2·3차 병원 간 유기적인 연계·협력**체계 구축
 - * 필수의료 분야 24시간 진료 유지 종합병원·병원 육성 등
 - ** 환자 협력진료 패스트트랙 구축
- (의료보상체계 합리적 개편) 수술·처치 등 저평가된 건강보험 수가 인상 및 영상진단·검사 등 고평가된 수가 현실화를 위한 상시 조정체계 구축
 -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획일적으로 책정된 건강보험 수가 가산체계를 환자의 건강 성과, 효율·효과적 진료 등 바탕의 성과보상제로 전환
- (국민 중심 의료개혁 추진) 의료현장의 정상화 및 의료체계 왜곡 해소를 위해 국민·의료계 모두 지지하는 의료개혁 추진체계 및 로드맵 마련
 - 환자권리 및 안전 보장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강화

□ 기대효과

- 미래 세대의 부담이 없도록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 확보
- 환자의 건강 성과 등을 고려한 의료보상체계 합리화

84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복지부)

□ 과제목표

- 필수의료 자체 충족률 제고 통해 지역 간 치료 가능 사망률 격차* 완화

* ('23년) 인구 10만명 당 (1위 시도)49.9명, (17위 시도)36.9명

□ 주요내용

- (공공의료체계 강화) (중앙)국립중앙의료원-(권역)국립대병원-(지역)지방의료원·보건소 간 공공의료 협력체계 구축 및 진료권별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 공공병원 없는 곳에 지방의료원 신설 추진, 공공병원 및 공공의료 수행 병원 대상 공공성 평가·보상 등

- 국립대병원 소관을 복지부로 이관하고, 권역 거점병원으로 체계적 육성

- (지역·필수의료 보상 강화) 필수의료 집중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 공공 정책수가 신설·확대 ▲지역필수의료기금 신설 및 법령 제정 추진

- 지역의료 자원분석을 토대로 의료 취약지역을 집중 보상하는 지역수가 제도 신설,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

-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 지역 의사제 신설, (가칭)공공의료 사관학교 설립 및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 추진

- 전공의 등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수련환경 혁신 등 국가지원 확대

- (소아·응급의료체계 강화) 환자 중증도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종별 기능 명확화 및 역할에 따른 차등 보상, 응급환자 신속 이송·수용·전원체계 확립

- 진료권 중심의 중증·응급질환 24시간 전문의 대응체계 및 야간·휴일 소아환자 진료협력체계* 구축

* 달빛어린이병원 등 확충을 통해 (경증)달빛어린이병원-(중등증)소아긴급센터-(중증)소아응급센터 협력

- (감염병 대응체계 개선) 감염병 예측·감시·역학조사 강화, 방역·의료 통합대응 체계 강화, 코호트 격리 등 방역 조치의 인권 보호 강화

□ 기대효과

- 지역·계층 간 의료 격차 완화 및 환자에게 꼭 필요한 의료의 적시 제공

85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 건강 증진 (복지부)

□ 과제목표

- 만성질환 관리율* 향상 등을 통해 국민의 건강수명** 연장

* ('23) 고혈압 조절률 60.9%, 당뇨병 조절률 41.2%

** ('15) 70.6세 → ('21) 70.5세로 정체

□ 주요내용

- (사는 곳 중심의 일차의료체계 구축) 다학제팀 기반의 포괄적 건강관리 제공과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지역사회 주치의 모델* 단계적 확대
 - * 공공의료체계(보건의료원 등) 중심 모형, 지자체 중심 의료-돌봄 연계 특화 모형, 포괄 2차병원 중심 협력지원 특화 모형 등 지역·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사업모형 설계
- 한의계 강점 질환을 중심으로 어르신 한의주치의 시범사업 신설, 거동 불편 환자 등을 위한 방문진료 시범사업 확대
- (지역기반 건강증진 강화)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등록·관리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소아비만 등에 대한 국가적 관리체계 구축
 - 지역주민 건강에 대한 지자체 역할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지역보건 의료기관 기능·인력 개편을 통한 건강관리서비스 적극 활성화
- (비대면진료 확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고, 농·어촌 의료 취약지 대상 보건소 비대면진료·원격협진 체계 신설
 - 의약계 등 의견수렴을 통해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 구축·운영
- (지역사회 정신건강 관리체계 확립) 자살예방서비스* 대폭 확대, 급성기 집중치료병원 도입 등 정신질환 치료 인프라 확충
 - * 자살유족 원스톱 지원사업 확대(12개 시도→전국), 지역 맞춤형 자살예방사업 확대(9개 시도→전국) 등
- 마약·알코올 등 중독성 정신질환에 대한 지역사회 치료·회복체계 강화

□ 기대효과

- 국민들의 일상 생활 구석구석에서 건강관리 체계 확립

86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복지부)

□ 과제목표

- 간병이 필요한 중증환자의 간병비 본인부담 70% 경감
- 희귀·난치질환자, 어르신, 청소년 등 대상별·생애주기별 의료비 부담 완화

□ 주요내용

- (간병 부담 완화) 의료 역량이 높은 요양병원* 중심으로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간병비 본인부담 경감(본인부담률 100%→30% 내외)
 - * '30년까지 (가칭)의료 중심 요양병원을 500개소까지 단계적 지정·확대
- 급성기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통한 간병 부담 완화, 간병 인력 전문성 제고 및 근무여건 개선 등을 통해 간병서비스 질 제고
- (비급여 부담 완화)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급여로 전환하여 적정 진료·가격 전환 유도 및 사전 환자 동의서 의무화
 - 의료적 필요성이 크고 비용효과성이 입증된 비급여는 건강보험 적용 확대
- (희귀·난치 부담 완화) 건강보험 산정특례 질환을 확대하여 본인부담률 인하, 의료비 지원사업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 단계적 폐지
 - 희귀질환의약품 및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신속 추진, 정부 직접 공급(긴급도입) 확대
- (보장성 강화)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하고, 계절독감 국가 예방접종 지원을 13세 이하에서 14~18세 학령기 청소년까지 순차적 확대

□ 기대효과

- 국민 간병 부담의 확실한 경감 및 일부 과잉의료비 부담 축소
- 대상별·생애주기별 의료보장의 사각지대 축소

[국정목표④]
기본이 튼튼한 사회

**전략-4.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

87 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육아 환경 조성 (복지부)

□ 과제목표

- 난임부부·임산부·아동에 대한 지원 확대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 취약·위기 아동과 청년에 대한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자립기반 마련

□ 주요내용

- (양육지원 강화) 아동수당(현재: 8세 미만) 지급대상을 매년 1세씩 점진적 확대하여 13세 미만까지 지급, 부모교육과 연계 강화 및 인식개선 추진
- (난임·임산부·영유아 지원)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및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지원, 가임력 검사비 연중 지원
 -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단계적 확대, 미숙아 지속 관리 단계적 확대
- (아동보호 강화) 국가가 책임지고 태어난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민간 입양기관이 아닌 국가·지자체가 입양절차를 수행·관리하는 국가 책임 입양체계 안착 및 공공후견제* 도입
 - * 보호대상아동 대상, 양육자 고령, 상속·채무 등 전문적 후견 필요시 공공후견인 선임·지원 가능
 - 아동학대 사망사건 심층분석 체계구축 및 예방적 지원 확대, 아동보호 전문기관 확충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 내실화
 - 가정위탁을 국가사업 체계로 개편하여 가정형 보호 확대, 보호대상아동 전주기 원가정 복귀 지원 강화, 아동보호전담인력 역량강화 및 처우개선
- (취약·위기 아동·청년 지원) 자립준비청년 지원수당·맞춤형 사례관리·자립 초기 재무설계 등을 통해 자립 준비 지원
 - 청년미래센터 단계적 전국 확대로 위기청년 조기발굴·사례관리 체계 내실화
 - 가족돌봄아동 사례관리 강화 및 수용자 자녀 경제적지원 확대

□ 기대효과

- 아동 양육부담 완화 및 아동의 권리와 복지 증진
- 위기 아동·청년에 대한 국가 보호체계 강화

□ 과제목표

- 아동·청소년의 주도적 성장과 디지털 시민성 함양 도모 및 위기·취약 청소년 빈틈없는 지원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가구 확대로 자녀양육 부담 경감 및 한부모·이주배경 가족,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 지원 확대

□ 주요내용

- (청소년 활동·참여 활성화) 인문활동·국제교류 등 활동·참여프로그램 개발·보급 확대 및 방과후아카데미 내 체험·학습 지원 강화
 -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균형성장 지원사업의 단계적 확대
- (건강권·마음건강 증진) 정서·행동 위기(초기상담-치료), 고립·은둔(원스톱 패키지) 등 고위험 청소년 건강 증진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건강체험 지원 및 우수 건강체험 프로그램 지원
- (아동·청소년 온라인 안전 강화) 아동·청소년 디지털 시민교육 지원,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 치유프로그램 및 전문상담인력 확대
- (아이돌봄 지원 확대) 정부지원 소득기준 단계적 완화 및 지원비율 상향, 취학 전·후 차등지원 폐지 등 아이돌봄 지원 강화, 돌보미의 안정적 일자리 환경 개선*
 - * 돌봄수당 인상, 야간긴급돌봄수당 신설 등
 -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운영 등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관리체계 구축
- (한부모·이주배경 가족 등 지원 강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소득기준 및 지원금 상향, 미혼모·부·조손 등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 가족센터 통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기초 학습 및 진로설계 등 교육 지원 강화, 1인가구 역량강화 지원 등

□ 기대효과

- 청소년 다양한 활동·참여, 위기 청소년 안전망 구축으로 청소년 삶의 만족도 향상
- 안심 육아환경 조성 및 한부모·이주배경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생활 안정

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국조실 등)

□ 과제목표

- 일자리, 주거, 자산, 교육, 복지 등 청년 삶 전반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
- 국가 정책과정에서 청년 당사자성 강화 및 지속가능한 청년정책 지원체계 구축

□ 주요내용

- (청년의 일할 기회 확대) 청년 맞춤형 취업*·창업** 지원 강화
 - * 국민취업제도 구직활동지원금 확대 및 자발적 이직자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 추진, AI 분야 등 채용연계형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확산 등
 - ** 지역, AI·딥테크 창업 중점 지원 및 AI 등 기술분야 청년창업기업 소득세·법인세 감면 검토 등
- (청년 주거 안정 강화) 청년 선호 지역에 특화공공임대, 기숙사형 청년주택, 기숙사 등 공급 확대 및 청년 월세 지원 등 청년 주거비 지원 강화
- (자산형성 지원 강화) 청년 목돈마련 지원상품 및 청년 맞춤형 재무상담 신설로 청년의 경제적 자립 뒷받침, 중소기업 근속 청년 등에게는 추가 인센티브 지원
- (청년 교육 등 생활 지원) 맞춤형 국가장학금(인문100년, 희망사다리II장학금)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확대, 식사·문화·교통 등 청년 생활 밀착 지원*
 - * 천원의 아침밥, 청년문화예술패스,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등
- 취약청년(고립·은둔, 가족돌봄, 자립준비청년 등) 선제발굴 및 맞춤형 지원 강화
- (청년 당사자성 강화) 청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참여 시스템 강화, 청년 신문고·공모전 등 참여채널 다각화, 청년보좌역 제도 개선 등 청년 목소리 확대
- (청년정책 기반 강화) 사회적 논의를 통한 청년연령 현실화 추진, 통합적 청년정책 지원체계·인프라 강화* 및 지역의 청년 참여 기반 확산**
 - * 온라인 청년정책 통합 플랫폼('온통청년') 고도화, 전담지원 및 연구체계 구축 등
 - ** 지역청년지원센터의 지역허브 역할 강화, 청년친화도시 및 지역특화 청년사업 확산 등

□ 기대효과

- 사회진출·자산형성 및 생활 밀착 지원 등으로 청년들의 자립·도약 기반 마련
- 중요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년들의 당사자성 확대 및 정책 공감·사회통합 기여

90 든든한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 (복지부)

□ 과제목표

- 개선된 다층 연금체계 구축으로 모든 세대에게 노후소득 보장
-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로 국민 신뢰 제고

□ 주요내용

- (청년·저소득층 지원 확대) 국민연금 최초 가입 시 첫 보험료 지원, 특수형태 근로노동자 등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확대
 - **군 크레딧**(연금가입기간 추가 인정)은 **12개월** →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고, **출산 크레딧** 수급자는 연금수급 시가 아닌 출산 시에 인정
- (불합리한 제도개선)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상향
 - 국회 연금특위 논의를 통해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20%씩** 감액하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 저소득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보장 강화
-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국민·기초·퇴직·주택연금 등 다층 연금 체계 확립*, 국회 연금특위 추가 개혁과제 논의 지원
 - * (퇴직연금) 퇴직연금 의무화 단계적 추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대상 사업장종사자 확대 (주택연금) 연금수령액 산정방식 개선, 가입률 제고 등 제도개선방안 검토
- (국가책임 강화·기금운용 개선)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재정 역할 강화, 수익률 제고 및 기금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추진

□ 기대효과

- 청년의 국민연금 실질 가입기간 확대 및 사각지대 축소
- 국민연금기금 수익률 제고(4.5 → 5.5%) 등을 통해 지속가능성 개선
- 저소득 노인의 국민·기초연금 수령액을 합리적으로 인상

91 인구가족구조변화 대응 및 은퇴세대 맞춤형 지원 (복지부)

□ 과제목표

- 분야별 어르신 지원 강화 및 고령인구 증가로 창출되는 신시장 활성화
- ▲인구정책 거버넌스 강화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대응 정책 ▲양질의 돌봄일자리 확대 등을 통해 인구가족구조 변화에 대응

□ 주요내용

- (어르신 지원 강화) 일자리, 식사·건강, 재무관리 등 맞춤형 종합 지원 확대
 - (일자리) 노인일자리 지속 확대 제공, 적정 단가 인상 등 질적 개선 추진
 - (식사·건강) ▲경로당 식사 주 3.5회→5회 확대 및 양곡비·부식비 지원
▲노쇠예방 건강프로그램 보급
 - (재산관리) 치매 어르신 등 대상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도입
-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돌봄인력 부족 대응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AI·IoT 기술 활용 스마트돌봄서비스 확충* 및 리빙랩 등 R&D·사업화 기반 마련
 - * 돌봄로봇, 인공지능 등 혁신기술 결합 사회서비스, 웨어러블 기기 활용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 (인구정책 거버넌스 혁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정책 범위 확대, ▲기획·조정권한 강화 등 통해 대통령 중심 인구구조변화 대응체계 강화
- (사회적 고립 대응)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및 일상회복 패키지 지원 등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외로움) 대응 정책 발굴·추진
 - 사회적고립(외로움) 담당 차관 지정 등 정책 수행체계 마련
- (양질의 돌봄일자리 확대 및 종사자 처우개선)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기준’ 100% 달성, 인력 단계적 추가 배치 등 거주시설 3교대제 도입 지원

□ 기대효과

- 노인 수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 통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보장
- 사회적 고립 대응체계 강화로 일상회복지원 및 고독사 예방
- 고령친화산업 활성화로 부양부담·돌봄 인력난 해소 및 신시장 부가가치 창출

92 인구 변동, 디지털 변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노동대전환 (노동부)

□ 과제목표

- 법정 정년 단계적 연장과 퇴직연금 의무화로 노후소득 보장
- AI 전환·기후위기에 따른 역량 개발과 정의로운 노동전환 추진

□ 주요내용

- (정년연장 추진) 사회적 논의 통한 법정 정년 단계적 연장 입법 추진과 함께 세대상생방안 마련, 중장년 일자리 지원 패키지 강화
 - (퇴직연금 강화)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 의무화 단계적 추진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대상 사업장·종사자(특고, 플랫폼 등) 확대, 노사 의견수렴과 수급권 보장 전제로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 검토
 - (AI 역량강화) 구직자 및 재직자 AI 교육 지원, AI·빅데이터 활용 고용 서비스 혁신, ^(가칭)노동분야 AI 윤리 가이드라인 개발
 - (정의로운 노동대전환 지원)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재취업 등 공정한 전환지원 로드맵 마련, 내연차·철강 등 전환업종 지속 발굴·지원확대 등
 - 석탄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협력사 고용안정 방안 마련, 전환산업 사회적 대화 지원, AI 전환산업 고용영향평가 및 고용안정 지원
 - (이주노동자 통합 취업지원) 외국인력 수급 설계, 인권과 안전을 위한 이주노동자 법·제도 정비, 사업장 이동 규제 완화 등 고용허가제 개선
 - 이주노동자 맞춤형지원*, 민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사업 복원 및 확대
- * 근무환경, 산업안전, 주거, 한국어 교육, 직업훈련 및 고용서비스 강화

□ 기대효과

-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하는 적극적 숙련 인력 지원으로 성장동력 확보

[국정목표④]
기본이 튼튼한 사회

**전략-5. 누구나
존중받는 일터**

93 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 (노동부)

□ 과제목표

- 일터 기본권 보장, 임금체불 50%(1조 미만) 감축, 공정임금으로 격차 해소

□ 주요내용

-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 일터 기본법 제정 및 5인 미만·초단시간·근속 1년 미만 노동자 노동관계법 단계적 적용 확대, 사전 예방형 선제적 근로감독 전환*

* ILO 수준 감독물량 확대, 근로감독관 증원, 중앙·지방 협력체계 구축 등

- (비정규직 권리보장 확대)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 ‘노동자 추정’ 제도 도입, 파견수수료 상한 설정, 공무원위원회법 제정

- 용역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의무화, 공공부문 상시지속·생명안전업무 정규직 고용 원칙 확립 및 민간 확산

- (임금체불 근절) 하도급 임금 구분지급제 도입, 임금체불 법정형 상향, 퇴직연금 의무화 단계적 확대, 대지급금 지급범위 확대

- (공정한 임금 체계 확립)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처우 금지 법제화, 최저임금위 운영 및 최저임금 결정기준 개선

* 도급제 최저임금 심의·지원, 특고·플랫폼·프리랜서 최저보수제 마련 및 시행

- (건설·물류·수송 노동자 보호 강화) (택배)계약갱신권 실질적 보장과 과로사 방지, (배달)유상운송보험 가입 및 안전교육 의무화, (화물)안전운임제 재도입

- 대리운전·택시·건설 등 종사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대리운전) 법제정·고율수수료 개선, (택시) 적정임금 보장, (건설) 적정임금제 제도화, 적정공사비·공사기간 보장, 기능등급제 활성화, 임금직불제 민간공사 적용 의무화 등

□ 기대효과

- 취약 노동자의 임금 등 노동조건 개선과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완화

94 노동존중 실현과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부)

□ 과제목표

- 노동이 존중받는 일터 문화 정착, 취약노동자 권리구제 강화
- 초기업 수준 노·사 교섭 확산과 사회적 대화 활성화

□ 주요내용

- (노동존중문화 확산) '근로자의날'을 '노동절'로 명칭 변경, 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 실질화, 노동교육 교과과정 확대 지원
- (취약노동자 권리구제 강화) 노동법원 설립(법무부), 노동위원회에 특고·플랫폼 등 분쟁조정기능 부여, 민간 노동센터 활성화 근거 마련
- (산업별·지역별 등 교섭 촉진) 초(超)기업별 교섭단위 결정·촉진제 도입, 창구단일화 예외 검토 등 초기업 교섭 활성화로 노동시장 격차 해소
 - 공공부문 초기업 단위 자율교섭 체계구축 및 집단교섭 모델 개발·확산, 초기업 교섭 참여 공공조달 민간기업 지원 등
 - 업종·산업별 단체협약 효력확장 및 행정명령 효력확장 도입, 지역적 구속력 요건 완화, 국가·지자체의 초기업 교섭 지원방안 노조법상 구체화
- (대화과 참여의 노사관계 구축) 경사노위 활동 개선, 산업별·지역별·업종별 중층적 사회적 대화 활성화
 - 각종 정부 위원회에 노·사 참여 실질화, 노동자대표위원회 상설화 입법 추진

□ 기대효과

- 초기업 교섭 활성화, 노동자 참여 확대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 사회적 대화와 근로자 참여 확대로 권리보장 및 직장 내 민주주의 강화

95 일, 가정, 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 (노동부)

□ 과제목표

- 연간 실노동시간 OECD 평균 수준으로 단축
- 일·생활 균형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갑질 없는 행복 일터 조성

□ 주요내용

- (노동시간 단축) 일·생활 균형 촉진을 위해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마련·시행 ▲포괄임금제 원칙적 금지 ▲노동시간 적용제외 및 특례업종 개선
 - 중앙·지방정부 주 4.5일 지원 시범사업 실시, 실노동시간 단축법 제정·시행, 노·사 자율 확산 촉진·지원,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4.5일제 추진
- (쉽이 있는 일터 구현) 쉼 권리 보장을 위한 연차휴가 개선*, 퇴근·공휴일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 * 시간단위 연차 도입, 연차일수 확대, 취득요건 완화(예시: 6개월 이상 근로), 사용시 불이익 금지, 연차저축제 도입
-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배우자 유·사산휴가 신설 ▲배우자 임신 중 출산휴가·육아휴직 신설 ▲난임 유급휴가 확대
 - 소상공인·자영업자 육아수당 신설, 저소득층 출산전후휴가 급여 추가 지급, 직장어린이집 지원 강화
 - 자동육아휴직 제도 도입,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급여 인상, 중소기업 특성에 맞는 지원금 인상·지급방식 및 대체인력제 개선
- (갑질 없는 행복한 일터 조성) ILO 괴롭힘 방지협약 비준 추진과 일·생활 균형, 가족친화 자격을 갖춘 ‘행복한 일터’ 인증제 도입

□ 기대효과

- 노동시간 단축과 일·생활 양립 지원으로 행복한 일터 조성

□ 과제목표

- 고용정책의 혁신으로 지역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사회통합적 고용서비스 제공으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 주요내용

- (고용서비스 혁신) 전국민 역량강화를 위한 채용연계형 직업훈련 강화, 직업계고·폴리텍(전문대) 현장 연계교육 강화
 - 고용서비스 정책의 혁신과 이를 위한 조직기반 마련 적극 검토 및 고용서비스 분야 역량 강화를 통한 고용서비스 질 제고로 일자리 미스매치 최소화 및 재취업 지원
- (지역주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가칭)「지역고용활성화법」 제정*, 중앙지원-지역 주도 일자리 정책 전환, 초광역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 주거·복지·돌봄·교통 지원 등 사회임금으로 지역 정주여건 개선
 - * 지역 일자리 성과공시제 도입 및 지원예산 차등화, 지역 일자리 거버넌스 혁신 등
- (고용안전망 확대) 구직촉진수당 단계적 인상, 노동취약계층 노동복지카드 시범사업 도입
 - 노무제공자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개선, 고용보험 경험요율제 도입, 취약노동자 노동공제회 지원, 급증하는 모·부성보호급여 재원확충 방안 마련
- (사회통합적 고용·취업 지원 강화) 사회적 기업 지원 예산 복원 및 지원사업 혁신, 청년부터 생애 1회 자발적 이직 구직급여 신설 추진, 청년미래적금 도입(금융위)
 - 경력보유여성 취업지원 확대,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을 통한 권리구제 지원

□ 기대효과

- 일하는 사람에게 고른 고용안전망 제공, 지역 주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취약계층 취업지원과 일할 기회 확대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국정목표④]
기본이 튼튼한 사회

**전략-6. 내 삶에
기회를 여는 성평등**

97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 (여가부)

□ 과제목표

- 성평등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 성평등 체감도를 높이고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 강화
-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강화하여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여성경제 활동 참가율 제고

□ 주요내용

- (성평등 거버넌스 강화)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강화하여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
 - * 성평등정책 총괄·조정, 균형고용, 교제폭력·스토킹 등 폭력 대응, 가족지원 등 기능 강화
 - 중앙과 지자체의 성평등정책 전담부서를 확대하고, 중앙 성평등센터 신설 및 지역 성평등센터 확대 등 전달체계 개선
 -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등 성주류화 조치 및 폭력예방교육을 실효성 제고 방향으로 전면 개편 추진
- (성평등한 일터 조성) 고용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하고, 공시시스템을 구축하여 성별 임금 실태를 체계적·종합적으로 공개
 - 공공부문·민간부문의 성평등 및 일·가정양립 등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진단·교육 등 지원
- (여성 경제활동 지원 강화) 새일센터 등을 통한 여성의 고용유지 및 취·창업 지원 서비스 확대, 여성벤처펀드 조성 등 여성기업의 성장기반 확충
 - * IT·바이오 등 고부가가치 직업훈련 확대, 새일센터에 창업전담인력 배치, 새일여성인턴 확대
- ‘경력단절여성’을 국민 공감용어로 정비 추진, 정부포상 근거 마련 및 지역 여성 창업보육센터 확대 등 여성경제활동 참여 촉진

□ 기대효과

- 모두의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한 사회 구현
- 기업 등 성평등한 일자리 환경 조성 및 여성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 **과제목표**

- 디지털성범죄·교제폭력 등 새로운 유형의 폭력 대응 및 피해자 지원 확대
- 임신중지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한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역사 인식 제고

□ **주요내용**

- (디지털성범죄 강력대응)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력 확충 등 기능 강화 및 여가부, 경찰청, 방통위, 방심위 등 **원스톱 대응협력체계 구축**
 - AI기반 딥페이크 성범죄물 탐지·추적 시스템 고도화 및 아동·청소년 온라인성착취 선제대응 시스템 구축, AI전문 수사인력 양성,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등 추진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확대) 교제폭력·스토킹 등 피해자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 온라인 스토킹 피해 개인정보 삭제 지원 및 교제폭력 법제화
 - * (기존) 긴급주거, 치료회복 등 분절적 지원 → (변경) 상담-주거-치료회복 등 통합지원
 -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발굴-자립 지원 등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 * 성매매·성착취물·그루밍 피해아동·청소년을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으로 포괄
-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 임신중지 법·제도 개선 및 임신중지 약물 도입,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변경 추진, HPV 무료 접종 대상 단계적 확대(남성 청소년)
- (‘위안부’ 피해자 존엄 회복)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금지·처벌 근거 마련, 민간 차원의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 등재 지원,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

□ **기대효과**

- 디지털성범죄, 교제폭력, 스토킹 등 여성폭력 피해자의 신속·안전한 일상 복귀
- 생애과정별 성·재생산 건강 증진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존엄 회복 및 여성 인권과 평화의 가치 확산

[국정목표④]
기본이 튼튼한 사회

**전략-7. 각자의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

99 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 (교육부)

□ 과제목표

- 모든 학교에서 AI를 내실있게 교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전 국민의 AI 이해·활용 역량 향상을 위한 생애주기 맞춤형 AI 교육 지원 확대
- AI 기반 고등교육 혁신을 가속화하고, 기초학문 및 인문학의 교육·연구 강화를 통해 국제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AI 인재를 양성

□ 주요내용

- (초·중·고 AI 역량 강화) STEAM 교육 내실화 등을 통해 학교 AI 교육을 강화하고, 과학고·영재학교·직업계고를 중심으로 AI 인재를 조기발굴·육성
 - AI 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화에 따른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학습데이터 분석·활용 체계 등 구축을 추진하여 미래교육 시스템 기반 마련
- (AI 인재 양성 지원) 대학(원) 대상 AI 융복합(AI+X) 교육과정 확산, 정원 증원 및 산업·기업 수요에 기반한 AI 교육·연구 지원을 통해 AI 인재 양성 지원
 - ※ AI 거점대학 운영, BK21 AI 분야 교육연구단 확대 및 AI 융합형 대학원 도입 추진, AI부트캠프 운영, 산업 수요기반 계약학과정원 확대
- (생애주기별 AI 교육 지원) 성인학습자 대상 온오프라인 AI 재교육 확대 및 사이버대 교육환경 고도화, 전문대를 통한 기초역량 제고 지원
 - ※ 모든 AI/SW 분야 대학(원)생에게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확대
- (글로벌 AI 인재 유치) 정부초청장학생(GKS), 국제 학생교류 프로그램 (CAMPUS Asia 등), 과학기술 분야 비자, 영주·귀화 패스트트랙(K-STAR 트랙) 등을 통해 해외 우수인재 유치 확대
 - 국내외 인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인재지도’를 구축하고, 국가인재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국가인재위원회 설치·운영
 - ※ 우수 외국대학 교원의 국내대학 복수임용 근거 마련, ‘박사후 연구원’의 대학내 법적지위 보장
- (기초학문 및 인문학 교육 확대) 초·중·고 인문학 및 독서 교육을 강화하고 대학 인문사회 우수장학생 지원 확대 및 기초·인문학 교육·연구 활성화

□ 기대효과

- 전 국민의 AI 친숙도와 활용 역량을 높여 국가 AI 역량 및 경쟁력 제고
- 국가책임 AI 인재의 체계적 양성으로 ‘AI 3강’ 도약

100 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 (교육부)

□ 과제목표

-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전인적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학교시민교육, 역사교육, 학교 문화예술 및 체육교육, 생애주기별 경제·금융·노동교육 활성화

□ 주요내용

- (시민·헌법·기후환경·생태전환교육 강화) 교육활동 전반에서 토의·토론, 프로젝트 학습 등을 통해 학생의 자기주도성 및 공동체 역량 강화
 - 전문성·중립성을 갖춘 학교시민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범부처 협업(예. 헌법교육(법제처), 기후환경·생태전환교육(환경부) 등) 활성화
- (역사교육 강화) 민주시민 의식 함양을 위해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역사교육을 강화하고 심화되는 주변국 역사 왜곡에 대해 효과적 대응 방안 추진
 - 학교역사교육 강화, 역사·영토·인권 연구 확대, 역사연구기관 운영의 정상화 추진 등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역사바로세우기 추진
- (문화예술·체육교육 확대) 모든 학생의 예술감수성 함양 및 신체활동 참여 기회 확대
 - 학생예술동아리 및 지역사회 연계 학교예술교육 등을 지원하고, 학교 스포츠클럽 등 내실화, 초등 체육전담교사 지정 확대 및 교원 전문성 강화
- (경제·금융·노동교육 활성화) 초·중·고부터 대학 진학 - 사회 진출 - 출산 - 퇴직 - 시니어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경제·금융·노동교육 활성화
 - 초·중·고 경제·금융 수업모델 확산, 성인 K-MOOC 경제·금융 강좌 보급, 시니어 ‘한글햇살버스’ 등을 통해 전 생애 디지털 경제·금융교육 실시

□ 기대효과

- 올바른 시민 의식, 균형 잡힌 역사 인식, 예술적 감수성 및 신체적 소양, 합리적인 경제관 등 민주시민으로서의 전인적 소양 및 공동체 역량 증대

101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교육부)

□ 과제목표

- 학령인구의 급감 및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 급증하는 추세에 대응하여 기초학력 지원, 특수·통합 교육 여건 개선, 심리·정서 지원 등 복합적 지원 추진
- 정규수업 외 학교와 지자체가 함께 모든 학생·학부모에게 격차 없는 돌봄·교육을 제공하여 아이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

□ 주요내용

- (국가책임 공교육 강화) 기초학력 선도학교 확대, 기초학력 전담교원 확충, 이주배경학생 한국어 교육 등으로 기초학력 보장 강화
 -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조성하여 수준별 교수·학습을 지원하고, 고교학점제 개선 등을 통해 학생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 실현
 - * 지역 내 공공시설 등을 활용, 자기주도학습 공간과 EBS 프로그램을 활용한 학습관리 제공
- (방과후·돌봄체계 구축)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제공으로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프로그램·강사 검증을 강화하여 방과후학교 체제 확립
 - 지자체 중심의 돌봄·교육모델을 마련·확산하고, (가칭)운동네 돌봄·교육 센터를 확충하여 돌봄·교육의 질 제고
-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 0세반부터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3~5세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틈새돌봄 확대 및 수요 맞춤형 교육·방과후 과정 등을 통해 모든 영유아가 건강한 성장과 배움을 보장받는 교육·돌봄체계 구축
- (특수교육 개선) 특수학급 신·증설, 특수학교 20개교 설립, 특수교사 정원 확충, 통합학급 협력교사 배치 확대를 통해 특수교육 여건 개선
- (마음건강 지원) ‘사회정서교육’ 활성화, 선별검사* 내실화, 전문기관** 연계 확대 등 예방-발견-상담-치료 전 단계를 아우르는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강화
 - * (정기) 정서행동특성검사 (수시) 마음EASY검사 / ** Wee센터 정신건강전문가 학교 지원기관 병원 등

□ 기대효과

- 영유아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의 국가 책무성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돌봄·교육 부담을 경감하여 공교육 신뢰도 제고

102 학교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 (교육부)

□ 과제목표

- 교사·학생·학부모가 존중·협력하는 민주적 학교 운영 기반 마련 및 교육 활동 보호,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 등 교원의 교육활동·기본권 보호
-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 안전체계를 구축하고, 국가교육위원회 기능 강화를 통해 교육주체들의 참여와 숙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 추진

□ 주요내용

- (민주적 학교 운영 기반 마련) 교사·학생·학부모가 존중·협력하는 학교 운영기반 마련
 -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한 학부모회 기능·권한 강화,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 추진 및 가정-학교 협력을 위한 학부모 역량 강화 지원
- (교권 보호 및 정치기본권 확대) 교원의 직무 특성과 학교 실정을 반영한 민원 대응 지원 및 교원의 시민으로서의 권리 보장 추진
- (모두가 안전한 학교 조성) 학교 안팎 위기요인을 제거하여 모두의 안전을 확보
 -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위한 교육(지원)청 내 지원 전담 기구 역할 강화 및 관련 법령 제정, 학교급식 위생·영양관리 강화 및 조리환경 개선 등
 - 맞춤형 예방교육 등 학교 내 신종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활동 시간 중 외부인 출입 통제 강화 가이드라인 정비, CCTV 확대 등 추진
- (국가교육위원회의 사회적 합의 기능 강화) 국가교육위원회 확대 및 구성·운영방식을 개선하고,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에 국민 참여 확대
 - 국가교육위원회 내 국민참여위원회의 숙의·공론화 기능 강화 등 역할을 확대하고, 연 1회 이상 대국민 보고회 실시

□ 기대효과

- 교육주체의 실질적 참여에 기반한 교육정책 추진, 교원의 교육활동·기본권 보호 및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등 구성원 모두를 위한 학교 문화 조성

[국정목표④]
기본이 튼튼한 사회

**전략-8. 함께 누리는
창의적 문화국가**

103 K-컬처 시대를 위한 콘텐츠 국가전략산업화 추진 (문체부)

□ 과제목표

- K-콘텐츠 및 뷰티 등 한류 연관 산업 동반 성장으로 K-컬처 300조원 시대 개막
- AI 혁신과 저작권 보호 강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콘텐츠 성장환경 구현

□ 주요내용

- (K-콘텐츠 성장기반 확충) 세계적 콘텐츠 기업 육성을 목표로 ‘콘텐츠 전략펀드(미래전략분야) 확대’* 등 정책금융 10조 원 공급,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연장, 웹툰 등 세제지원 확대
 - * 대·중소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대작 IP 확보, AI 활용 콘텐츠 개발 등에 집중 투자
- (K-콘텐츠 핵심산업 육성) 8대 분야* 중심 장르별 전략적 지원체계 가동
 - * 게임,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출판, 웹툰, 방송영상, OTT콘텐츠
 - 대작·인디게임 지원 확대, 중소·독립영화 제작 지원, 비즈니스 인재양성 및 뮤지션 해외진출 지원, 영상·웹툰·출판 분야 글로벌 IP 콘텐츠 제작·해외진출 지원
- (AI 활용 콘텐츠산업 혁신) AI 시대 콘텐츠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략 수립, AI 기반 창·제작 지원, 한국문화 학습데이터 축적, AI 업계-창작자 협력 모델 마련
- (한류 연관 산업 글로벌 도약) 범부처 ‘한류산업진흥 기본계획’* 마련, 한류 연계 뷰티·식품 등 산업별 맞춤형 지원 및 동반 해외 진출
 - * 민·관 합동 한류정책협의회 운영, 한류 콘텐츠 현지화·공동제작 지원, 연관산업 기업 컨설팅·비즈매칭 지원
-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저작권 보호를 위해 AI 기반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구축, 인터폴·각국 수사기관과 공조 확대, 불법 유통사이트 접속차단 강화
 - * AI·빅데이터 활용 저작권 침해 적발-심의-차단-수사까지 원스톱 지원

□ 기대효과

- K-콘텐츠 핵심·연계 산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으로 글로벌 문화수출* 확대
 - * ('24) 26.6조 원 → ('30) 50조 원
- 콘텐츠·연관 소비재 기업의 동반 성장으로 K-콘텐츠의 파급효과를 산업 전반 확산, 진출지역 다변화로 글로벌 소프트파워 제고

104 전 국민이 누리고 세계인과 소통하는 K-컬처 (문체부)

□ 과제목표

- 국민 문화 향유 확대로 문화예술관람률 70%('30년) 달성('24년 63%)
- 전통문화·언어·예술 등 K-컬처 근간이 되는 한국문화의 해외 확산 및 국가유산 보존·전승

□ 주요내용

- (문화국가 정책인프라 마련) 문화정책·산업 전략 수립, 국제 문화리더십 확대를 위한 위원회 설치, 문화재정 대폭 확대
 - *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설치 추진
- (일상 속 문화향유·참여 확대) 통합문화이용권* 확대, 생애주기 독서 활동 지원 확대, '꿈의 예술단' 등 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 역량 개발
 - * 취약계층의 문화예술·여행·체육활동 지원금 상향
- (문화로 지역 성장)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문화선도산단 선정 및 프로그램 지원 확대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거점형 문화시설 조성
- (전통·유산 보존 및 가치확산) 전통사찰 등 자연재난대응 인프라 확충, 무형유산 전승자 발굴·집중 육성, 국가유산 유네스코 등재 확대
- (글로벌 K-컬처 확산) K-아트·한국어·전통문화 등 해외 진출 지원, 개발도상국 세계유산 조사·보존, 문화예술교육 등 교류 추진, K-컬처 해외 네트워크 고도화*
 - * 세종학당 확대, 해외문화교류 거점 코리아센터 확충

□ 기대효과

- 문화정책 인프라 강화로 일상 속 문화 향유를 통한 삶의 질·국민 만족도 향상
- K-컬처의 세계 확산·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문화역량 강화 및 글로벌 문화강국 위상 제고

105 자유로운 예술 창작 환경 조성 (문체부)

□ 과제목표

- 문화강국의 소프트파워를 키우는 사회적 투자로서 예술 창작지원 및 복지 강화
- 지역 문화예술기관·단체의 성장 지원 및 청년·장애예술인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 확대

□ 주요내용

- (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작환경 조성) 창작공간·인프라* 확대, 창작에 대한 정당한 대가기준 마련 등 계약 관계 개선, 권리침해 조사 강화
*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국립한국문학관, 국립공연예술센터, 정동극장 재건축
- (춤춤한 예술인 복지 제공) 예술인 맞춤형 복지를 위한 복지금고 조성,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지원, 임대주택·자녀돌봄 확충 등 예술인 생활 서비스 강화
- (문화예술 지원체계 개선) 지역 문예회관을 지역예술 창·제작 거점으로 육성, 소액 정부지원 사업 자부담 폐지, 효율적인 예술인 정책지원을 위한 경력정보 통합관리
- (청년·장애예술인 기회 확대) 청년예술인 자산 형성을 위한 적립계좌 지원, 순수예술 분야 청년 창작자 창작활동 지원 확대, 국립청년 예술단 확대 및 국립예술기관 청년 인턴십 강화, 장애예술인 우수작품 지역확산 등 지원

□ 기대효과

- 예술인들의 기본 생계·생활 서비스 여건을 마련하여 누구나 걱정 없이 창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예술인이 마음껏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여, K-컬처의 근간인 기초예술 생태계 강화

106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 (문체부)

□ 과제목표

- 어디서나 운동하기 쉬운 생활체육 환경 조성으로 국민 생활체육참여율 65%, 장애인 생활체육참여율 40% 달성('30년)
- 스포츠 강국 위상에 맞는 체육인 복지 실현 및 국제 스포츠 교류* 확대
 - *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총회('25.9월/서울),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총회('25.12월/부산),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 코리아하우스 운영('26.2월) 등

□ 주요내용

- (전 국민 생활체육 활성화)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맞춤형 스포츠활동* 지원, 전 국민 대상 스포츠 참여 포인트 제공, 모든 지역에 균등한 스포츠 기회 제공을 위한 국민체육센터 확충
 - * 어르신 스포츠 프로그램 신설, 국민체력인증 지원 강화 등
- (전문체육 투자 확대) 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성장 단계별 지원 확대, 체육인 복지 및 일자리 지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스포츠 거버넌스 구축
- (스포츠 인프라 통한 지역 발전) K-POP 공연수요에 부합하는 중·대형 복합 공연장형 아레나 건립 및 지역별 스포츠 거점 조성
- (차별없이 누리는 장애인 체육) 반다비체육센터 및 유·청소년 통합 체육교실 확대, 장애인 전문선수* 발굴·육성 강화
 - * 기관 합동 장애인 선수 발굴단 운영, 훈련·국제대회 참가 지원
- (K-스포츠 위상 강화) 국제대회 참가·유치·개최 지원, e스포츠 국제대회 참가, 가상 태권도 경기규칙 정비 지원

□ 기대효과

- 저출생 고령화 시대 체육활동으로 전 국민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 실현
- 스포츠 인재가 자긍심을 느끼고, 운동에 전념하여 최상의 경기력 달성

107 3천만 세계인이 찾는 관광산업 기반 구축 (문체부)

□ 과제목표

- 매력적인 방한관광시장 조성으로 방한 관광객 3천만 시대 개막('30년)
- 지역 특화자원의 관광 자원화 통한 지역관광 성장동력* 강화
 - * (지역관광발전지수) 지역관광발전지수 1등급 '23년 8개 지역 → '30년 25개 지역 확대

□ 주요내용

- (방한관광 홍보·편의 개선) K-컬처 연계 방한 관광* 홍보, 치유·MICE 등 고부가 관광 육성, 범부처 연계 외래관광객 5대 관광 불편** 전반적 개선
 - * 대규모 글로벌 이벤트 연계 방한마케팅, 대형 한류스타 협업 전방위 K-관광 세일즈
 - ** ①입·출국, ②교통·이동, ③쇼핑·식음, ④숙박, ⑤관광정보 안내
- (특화자원 연계 지역관광 육성) 지역·콘텐츠 중심 광역관광개발, 미식·축제·공연·국가유산 등의 K-관광콘텐츠화, 글로벌 관광특구* 제도 신설
 - * 규제 완화재정 지원 등을 통해 글로벌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지역관광 핵심거점으로 육성
- (관광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AI 활용 관광기업 서비스 혁신, 현장 연계형 전문인력 양성, 호텔업 등급평가 개선 등 규제 합리화
- (누구나 누리는 관광환경 조성) 국민휴가지원 확대·신설*, 장애인 등 관광취약계층 대상 무장애 관광 인프라·프로그램 확충
 - * 근로자 휴가지원 확대, 인구감소지역 관광객 대상 지역사랑 휴가 지원제 신설

□ 기대효과

- 관광기업 경쟁력 확보를 통한 관광산업의 미래 성장동력화
- 지역 콘텐츠의 매력적인 관광자원화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내수 증대 기여

□ 과제목표

- 글로벌 미디어 경쟁력 제고, 상생성장을 위해 법·제도 정비 및 투자 촉진
- 디지털 역기능 대응을 통한 이용자 중심의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 투명하고 공정한 디지털·미디어 경쟁환경 구축

□ 주요내용

- (미디어 법제 정비 및 성장기반 마련) 신·구 미디어를 아우르는 합리적 미디어 법제 마련, 네거티브 광고체계 도입 등 방송광고·편성 등 규제완화
※ 국무총리 직속의 민·관 합동 위원회(가칭)미디어발전위원회) 설치·운영
- (디지털·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 K-플랫폼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불법사이트 차단, 콘텐츠 투자 활성화 및 방송미디어 전과정 AI 도입으로 생태계 혁신
- (디지털·미디어 상생성장 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과 방송광고·유료방송 연계 지원, 공정한 외주제작 거래 환경 조성, 청년·위치정보 스타트업 지원 추진
-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온라인상 정보·콘텐츠 건전성 제고와 AI 역기능(딥페이크 성범죄 등) 대응을 위한 이용자 보호 규제체계 정비 및 이용자 피해구제 지원
 - 디지털 성범죄물 및 마약·도박 등 불법정보의 신속한 삭제·차단을 위한 법·제도 개선, 불법스팸 규제체계 강화, 디지털 유산 승계절차 마련
- (디지털 이용자 권리 보장) 쇼핑·배달·OTT·여행 등 실생활 밀접 플랫폼·앱마켓에서의 이용자(이용사업자 포함) 피해 방지, 유·무선 통신 이용자 선택권 보장 등 권익 보호를 위해 제도 보완 및 조사·제재 강화

□ 기대효과

- 분산된 디지털·미디어 법제 정비를 통해 규제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불필요한 규제 효과와 투자지원을 통한 미디어 미래 성장동력 확보
- 국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온라인 서비스·플랫폼을 활용하고, 이용자가 자유롭게 선택하고 사업자는 공정하게 경쟁하는 디지털 환경 조성

[국정목표⑤]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전략-1. 국민에게
신뢰받는 강군**

109 국방 환경 변화에 대비한 정예 군사력 건설 (국방부)

□ 과제목표

-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대비하여 전방위적 방어 및 억제체계 고도화
- AI 등 첨단과학기술을 도입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예 군사력 건설

□ 주요내용

-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감시·정찰 및 정밀타격능력(Kill Chain), 방어능력(KAMD), 보복능력(KMPR) 고도화
- (국방우주전략 고도화) 우주전력 확충 및 우주전략 고도화 등 국방우주력 발전과 연계하여 중장기적으로 ‘우주전략사령부’ 창설 단계적 실현
- (유무인복합체계 고도화) 전쟁양상 및 기술발전 속도를 고려, 재래식 전력에 무인체계를 접목하는 유무인 복합체계 고도화 및 시험인프라 확보
 - 소부대단위에서 드론, 로봇 등 최신 무인기술을 활용, 대응능력 강화
- (국방AI 첨단기술 활용) AI 신속개발·활용을 위해 국방 데이터 관리·보안 체계를 개선하고, 맞춤형 획득프로세스를 마련하며, 인프라 투자 확대
 - 전장, 운용, 인사관리 등 국방 전분야에서 AI 활용 촉진
- (합동작전능력 향상) 시공간을 초월하여 정보공유 및 작전지휘가 가능하도록 차세대 지휘통제체계 구축
- (사이버 위협대응체계 공고화) 범정부 사이버안보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국방 차원에서 사이버·전자기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

□ 기대효과

- 북한의 재래식 도발 및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독자적 억지력을 확보하고 군을 정예화함으로써 경제발전과 평화를 견인하는 국방태세 확립

110 한미동맹 기반 전방위적 억제능력을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국방부)

□ 과제목표

- 확장억제를 내실화하는 등 한미동맹 기반의 전방위적 억제능력 확보
-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을 보장하여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로 추진

□ 주요내용

- (전방위 억제능력 확보)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고,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효과적 운용을 통해 확장억제 내실화
 -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개념을 작전계획 수준으로 구체화시키고, 도상연습 등 연합 연습·훈련 강화
 - 한·미간 호혜적 관계에 기반하여, 군사, 첨단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수준을 강화하여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
- (전작권 전환) 한국군의 전·평시 연합방위 주도능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서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로 추진
 -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계획'의 이행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고,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을 신속 보장
 - 전작권 전환 이후의 연합방위체제 정립을 위한 전략문서 정비
 - 한국이 연합방위작전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실질적 능력 확보

□ 기대효과

- 북한의 전방위적 위협에 대한 국민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는 책임국방을 실현하고, 한미동맹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안정 확보에 기여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통해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능력 확보

111 강력한 국방개혁으로 전투임무에 집중하는 군체계 확립(국방부)

□ 과제목표

- 인구감소와 국방환경 변화에 따라 군병력 정원감축, 병과 개편, 민간자원 활용, 예비전력 정예화 등 총체전력 차원의 국방개혁 로드맵 구축

□ 주요내용

- (국방개혁 로드맵 마련) 병력감축 상황 및 총체전력 차원에서, 'AI·첨단과학기술 기반 스마트 강군 육성'을 위한 국방개혁 로드맵 마련 및 추진
- (준4군 체제로 해병대 개편) 해병대의 독립성과 독자적인 작전권을 보장하고, 부대구조 증강 및 사령부의 역량·위상을 제고
- (병과체계·인사제도 개혁) 대병과 체제로의 개편, 간부 장기복무 선발률 향상, 병력 모집방식 다양화 등을 통해 전문성·숙련도를 갖춘 군 인력 확보
- (여군 확대 및 복무여건 개선) 여성 초급간부 선발을 확대하고, 여군 인사관리 제도 및 복무여건 개선을 통한 우수인력 확보 추진
- (민간자원 활용) 군수, 시설관리, 교육, 복지, 인사관리 등 군의 비전투 분야 임무를 민간이 수행하도록 하는 '국방분야 민간 전환' 확대
- (예비전력 발전) 인구 감소 시대에 대비하여 예비군 훈련비 현실화, 장비보강 및 동원훈련장 과학화 등 예비전력 발전 종합계획 수립·추진

□ 기대효과

- 군구조 개혁과 부대임무 효율화, 민간자원 활용 등 국방개혁 로드맵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최적의 군체계를 수립하고, 미래 환경변화에 대비한 정예 군사력 육성
- 군 본연의 전투·작전 임무 수행 역량 강화

112 군인 사기진작을 위한 장병 복무여건 개선 (국방부)

□ 과제목표

- 군 복무와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군인·군무원·군가족의 복지를 개선
- 민군상생을 위해 국방분야 규제를 완화하고, 군 점유부지 이전 추진

□ 주요내용

- (군인 복무여건 개선) 군인들의 처우와 복지를 개선하여 사기 진작 및 우수인력 획득 기반 마련
 - 초급간부 급여 현실화 및 전월세 정책자금 지원 확대
 - 장기근속자에 대한 종합 건강검진비 지원
 - 병 대상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 급식 개선
- (군 복무 - 가정 양립 복무체계) 가족 친화적이고 안전한 복무여건 및 군인·군무원에 대한 맞춤형 복지 실현
 - 당직근무비의 인상과 함께 근본적으로 군의 당직시스템을 점검하여 불필요한 당직을 줄이고, 한정적으로만 시행해 온 유연근무 확대
 - 안전사고 예방 및 신속대응, 장병 인권보호 강화 및 성범죄 근절대책 추진
 - 군인·군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가족 대상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 (민군상생 규제완화) 군 공항 이전의 원활한 추진,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 및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민군 상생 여건 마련

□ 기대효과

- 군 구성원의 사기·복무 의지 고양을 통해 국방력 강화에 기여
- 중견간부 이탈 방지 및 장기복무 확대를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숙련된 군인을 오래 활용하고 인재가 계속 유입될 수 있는 기반 마련

113 K-방산육성 및 획득체계 혁신을 통한 방산 4대 강국 진입 (방사청)

□ 과제목표

- 방산수출기업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집중적 지원으로 방산 4대 강국 도약
- AI 등 첨단전략력 획득체계 혁신 및 방산 소재·부품 공급망 안정화

□ 주요내용

- (방산수출) 방산수출에 대해 재정·금융·세제 지원, 산업협력 등 패키지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방산수출 컨트롤타워 구축을 통해 범정부적 총력지원 실시
- (중소·벤처기업 육성) 기업의 성장단계별(진입·성장·확장·고도화) 집중 지원 및 방산 소부장 전방위(All-Round) 지원, 민간 기술이전 등을 통한 ‘글로벌 슈퍼-乙’ 양성
 - * (진입) 국방벤처 인큐베이팅 사업, (성장) 방산혁신기업100 사업, (확장)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위한 GVC30 사업, (고도화) 선도연구기관 및 한국형 빅테크 육성
- (획득체계 혁신) 방위사업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무기도입·R&D 체계 혁신을 통해 군사력 건설의 효율성과 방위산업 경쟁력 제고
- (첨단기술 산업기반 구축) AI, 항공엔진, 반도체, 우주, 드론·로봇 등 첨단 전략분야 R&D 및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여 한국형 빅테크 기업 육성
 - * (가칭)「국방첨단전략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첨단 방산분야 제품 표준·인증, 방산혁신전문기업 육성, 전반적 산업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입법
- (공급망 안정화) 우리 군이 운용 중인 100대 무기체계 소재·부품에 대한 공급망 지도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국제협력, 소재·부품 국산화, 비축 등을 통해 공급망 안정성 및 자립도 강화

□ 기대효과

- 방산 수출기업과 중소·벤처기업 집중 지원을 통해 국가 안보에 기여함과 동시에 방위산업을 국가경제의 주력으로 육성
- 첨단기술 및 첨단산업 기반을 확대하여 지속가능한 방위산업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미래전장환경에 대비

[국정목표⑤]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전략-2. 평화 공존과
번영의 한반도**

114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 및 평화공존 제도화 (통일부)

□ 과제목표

- 통일부 조직·기능 정상화 및 화해·협력·평화공존으로 대북·통일정책 전환
- 남북간 대화 재개, 긴장완화·신뢰구축, 제도화를 통해 평화공존 기반 마련

□ 주요내용

- (통일부 조직 정상화 및 역량 강화) 남북대화·교류협력 전담부서 회복, 사회적 대화 및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기능 확충 등 신속 추진
 -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통일부의 위상·역량 지속 강화
- (남북대화 재개) 남북간 우발적 충돌 방지 및 재난, 인도적 사안 등 해결을 위한 채널 가동 추진, 당국·민간·국제사회 협력을 통한 대화 재개 노력 경주
 - 연락채널 복원시 수준별·분야별 남북대화 재개 및 정례화·제도화 추진, 이를 통해 남북 합의사항의 실효적 이행방안 마련
-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신뢰구축) 남북 상호간 적대적·대결적 행위 청산 및 단계적인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를 통한 실질적·제도적 신뢰 형성
 - 전단, 확장기 관련 남북 상호 중단 조치 및 사후 관리 강화
 - 접경지역 평화, 주민 안전 지원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및 법제 정비 추진
 - 남북 군사당국 간 통신선 및 「9.19 군사합의」 복원,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한 군사적 신뢰 구축 진전
- (남북 평화공존 기반 구축) 국내 대북·통일정책 추진기반을 제도화하고, 남북 합의를 통해 새로운 남북관계를 위한 토대 마련
 - ▲ 평화공존의 대북정책 수립 ▲ 남북 평화공존의 원칙·규범 등을 규정한 「남북기본협정」 체결 ▲ 주요 남북합의의 국회 논의 절차* 마련 등 추진
 - * 국회와 협력하여 남북간 주요 합의의 규범력을 제고하고 초당적 정책 추진 기반 마련
 -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발전안」 마련 및 법치주의·국민주권(참여) 원칙을 반영한 ^(가칭) 「한반도평화통일기본법」 제정 추진

□ 기대효과

- 남북간 긴장 완화 및 화해 협력 복원을 통해 접경지역의 일상의 평화를 회복하고 국민의 안보 불안 해소
- 남북간 평화공존을 제도화하여,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

115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교류협력 추진 (통일부)

□ 과제목표

- 호혜적·안정적 남북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추진체계 정비
- 사회문화, 인도협력, 기후대응 등 다방면에서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 주요내용

- (남북교류협력 추진체계 정비) 민관 남북교류 거버넌스를 재건·강화하고, 민간교류의 제도적·물적 지원체계를 개선
 - 남북교류 관련 민-관 협업체계, 중앙정부-지방정부간 네트워크를 제도화·활성화하고,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의 역할 강화 및 기능 확대
 - 민간 주도의 남북교류를 지원하는 방향에서 ▲교류협력법 ▲협력기금법 등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의 이용자 편의성 제고
- (종교·문화·체육 등 다양한 민간교류 지원) 교류단체·지자체 등과의 협력 하에 주요 국제행사 등 계기를 활용하여 민간교류 재개
 - 체육·종교 등 국제대회와 남북 합동공연 및 전시회 등 문화예술 분야를 접목, 다층적·융합적 교류협력으로 발전
 - 겨레말큰사전 편찬·개성만월대 공동조사 등 기존 중단사업을 재개하고, 민족문화유산 보존·활용 관련 유네스코 협력 확대
- (기후 공동대응과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협력 추진) 인도적 협력은 정치·군사적 고려 없이 일관되게 추진, 남북간 인도적 협력 통로 복원
 - 민간·국제기구 협업 하 영양·백신, 보건, 물·위생, 농축산 등 지원
 - 감염병 및 산림협력 등 기존 합의사항부터 협의 재개,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위기에 대한 남북·다자 공동대응 방안 모색

□ 기대효과

- 민간이 주도적·안정적으로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다방면의 남북교류 재개, 남북간 화해 협력을 증진하고 동질성을 회복

116 분단고통 해소와 인도적 문제 해결 (통일부)

□ 과제목표

-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등 인도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북한주민 인권의 실질적 개선 도모
- 지역협력형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 구축 및 사회통합 강화

□ 주요내용

- (인도적 문제 해결) 남북간 인도적 대화 복원을 통한 이산가족 전면적 생사 확인·화상상봉·고향방문 추진,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방안 협의
 - ‘이산가족의 날’, ‘6·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 법정기념일 행사 계기, 이산가족·납북자 가족 등의 아픔 치유 및 대내외 공감대 확산 추진
- (북한주민 인권의 실질적 증진) 북한주민의 자유권·사회권을 통합 증진하는 방향에서 민간단체 활동 지원, 민간 주도 북한주민 인권 개선 추진
 -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과 남북관계 발전·평화정착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에서 북한인권재단 출범 추진
 - 북한이 고립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북한과 국제사회의 인권 협력 지원
 - * 북한이 참여하는 유엔 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 활용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및 사회통합 강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교육·고용·심리안정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사회 주민과 사회통합 촉진
 - 하나원 기초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선, 지자체와 함께 일자리·교육* 등 거주지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자조·자립 커뮤니티를 통한 취약계층 안전망 구축
 - * 정규·대안학교 지원체계 정비를 통해 차별없는 교육지원 추진

□ 기대효과

- 분단으로 인한 우리 국민의 고통 해소 및 북한주민 삶의 실질적 개선
-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 일원으로 안착·통합될 수 있는 여건 개선

117 국민과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통일정책 추진 (통일부)

□ 과제목표

-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 국내외 평화공존·통일담론 확산을 통해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기반 마련
- 평화·통일·민주주의를 통합한 새로운 통일교육을 추진하고, 북한자료의 대국민 공개를 확대하여 국민의 대북·통일인식 제고 및 정책 참여 역량 강화

□ 주요내용

- (사회적 대화 활성화)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제도화하는 사회적 대화 추진체계 구축·운영
 - ▲ 모든 국민에게 열려있고, 정부·국회·시민사회가 협업하는 기구 구성
 - ▲ 다양한 의제·방식의 대화 추진 ▲ 국민제안 등 정책화 체계 마련
- (평화·통일 담론 확산 및 평화통일 공공외교 추진) 민간이 평화·통일 담론의 생산 및 확산을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체계 구축
 - 국민참여형 평화·통일문화행사, 청년·여성 주도형 소통 창구 확대, 지역별 통일플러스센터 설치·운영, 민간 통일·북한 연구 생태계 강화 지원 등
 - 미국 등 주요국 대상 협력을 내실화하고, 재외동포·국제시민사회 등으로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외연을 확장, 우호적 통일환경 조성
-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추진) 통일교육을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으로 발전
 - ▲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의 개념 정립 및 통합 추진체계 구축 ▲ 교육과정 및 콘텐츠 개발 ▲ 전문강사 양성 ▲ 학교·지역사회·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확산
 - 사회적 대화를 통해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을 위한 K-보이텔스바흐 합의* 추진
 - * 독일이 사회적 합의로 형성한 민주시민교육 원칙(강요금지, 논쟁성, 이해·관심 유도)
- (북한자료 공개 확대) 국민 알권리 보장과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을 고려한 북한자료 공개 법·제도를 마련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이용 시스템 구축

□ 기대효과

- 국민적 합의와 국제적 평화·통일 공감대에 기반한 정책 추진 여건 조성
- 국민의 균형된 통일·북한관 확립 및 평화·통일·민주시민 역량 제고

□ 과제목표

- 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성장의 청사진 마련, 평화경제 이행기반 조성
- 평화경제특구 조성 및 DMZ 국제 생태·평화관광 협력지구 개발 추진
- 관광, 철도·도로, 개성공단 등 주요 경제협력 사업의 발전적 재개 추진

□ 주요내용

- (가칭)「한반도 평화경제 미래비전」 마련)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을 통한 남북 공동성장 및 경제공동체 형성 비전과 이행계획을 수립
 -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 추진방안 구체화 및 이행
- (평화경제특구 조성) 「평화경제특구법」에 따라 평화경제특구를 신속히 지정하고,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25년 기본계획 확정, '26년부터 특구지정 착수)
 - 북 호응시, 평화협력벨트의 교두보로서 인접 북한 지역과의 연계 발전 추진
- (DMZ 국제 생태·평화관광 협력지구 개발) 한반도 DMZ가 갖는 생태적·평화적 가치를 활용하여 세계인들이 찾는 ‘한반도 평화관광’ 명소로 개발
 - DMZ 보전·평화적 이용 법률 제정(법정부 추진체계 및 DMZ 이용 규범 정립), DMZ 이남 접경지역 중점 개발(DMZ 평화올레길 조성 등), 학술·전시·공연 추진
 - 국내외 지지 및 북한 호응을 유도하여 남북 협력지구 개발로 연계·확대
- (경제협력 사업 재개 및 다자협력 추진) 「한반도 평화경제 미래비전」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관광, 철도·도로, 개성공단 등 발전적 정상화 추진
 - 아울러, ▲다자협력을 통해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 촉진 ▲「한반도 평화경제 미래비전」과 미래 기술·산업을 접목한 새로운 경험모델 개발

□ 기대효과

- 「한반도 평화경제 미래비전」 수립, 남북경협 의 중장기 발전 로드맵 마련
- 평화경제특구 조성 및 주요 경제협력 사업 재개를 통해 접경지역을 평화경제 거점으로 전환하고,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촉진

**[국정목표⑤]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전략-3. 세계로 향하는
실용외교**

119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주변 4국 관계 증진 (외교부)

□ 과제목표

-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통해 미·일·중·러 4개국과의 관계 발전을 추구

□ 주요내용

- (한미 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 안보, 통상, 첨단기술 등 분야별 협력을 뛰어넘어 포괄적 틀에서 상호 이익 확대 균형 확보
 - 한미 동맹 현대화 및 우리 안보 역량 강화
 -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 및 국민 권익 보호
 - 한미 동맹을 토대로 국익의 견지에서 한미일 3국 협력 증진
-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 ▲서틀외교 재개 등 고위급 교류 활성화 ▲경제, 문화 등 분야에서의 미래지향적 상생협력 및 미래세대 교류 확대 추진
 - 과거사 등 현안 관련 우리 기본 입장 견지 下 일측 호응 유도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 한일 협력 지속
 - 한일중 3국 협력체제의 제도화, 내실화를 위해 관련국 및 한일중 협력 사무국과 긴밀 협력
- (한중관계를 명실상부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 신성장동력 창출 노력 지속 및 비핵화·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중국의 협조 확보
 - 정상교류 및 전략적 소통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 인적교류 활성화, 문화 콘텐츠 산업 中 시장 진출, 우호정서 제고 등 국민체감형 성과를 실현
 - 서해 등 우리 해양권익 수호 노력 배가
- (한러관계의 안정적 관리 및 발전 추진) 우리 국민·기업 권익 보호 및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러시아와 전략적 소통 지속
 - 양국간 호혜적 협력 관계 복원을 위한 공감대 확대 노력 경주

□ 기대효과

- 한미 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킴으로써 동맹의 전략적 가치와 실효성 강화
-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능동적으로 발전시켜 협력의 폭과 깊이를 심화시켜 나가고 우리의 전략적 공간 확대

120 국제사회 공헌과 참여로 G7+ 외교 강국 실현 (외교부)

□ 과제목표

- 급변하는 국제 정치·경제·안보 환경에서 전략적·경제적 외교 지평을 확장
- 신홍안보, 기후 위기 등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에 책임 있게 기여하며, K-이니셔티브 플랫폼으로서 재외공관 역할 확대 및 국민 공공외교 추진
- G7+ 외교강국에 걸맞은 외교 인프라(조직·인사·교육훈련 제도) 혁신과 외교 인력 전문성 제고 및 재외공관의 역할 강화

□ 주요내용

- (외교다변화) 국제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외교다변화 추진
 - 신남방·신북방 정책의 계승·발전을 위한 파트너십 강화, 유망 글로벌 사우스로의 외교 지평 확대
 - 유럽, 인태지역 유사입장국, 중동과의 실질협력 강화를 통한 전략적 지평 확장
- (글로벌 도전과제 대응) 책임있는 국가로서 국제 평화·안보, 사이버, 신기술, 기후·환경 위기, 인권 등 대응에 적극적 역할 수행
 - ▲국제규범 형성 기여 ▲다자·소다자 협의체 활용 ▲전략적 재정 기여
- (통합적·효과적 ODA) ODA 중장기 전략 수립과 통합적 무상원조 ODA 체계 구축을 통한 가시적이고 효과적인 ODA 수행
 - 전략적 조정 강화, 저성과·부실사업 최소화, 역량 있는 시행기관 중심의 사업 수행, 산출 중심 성과관리체계 도입을 통한 ODA 체질 개선
- (국민 공공외교 및 K-이니셔티브 실현) 국민들의 공공외교 직접 참여 기회·제도 확대, K-이니셔티브 해외 진출을 위한 재외공관의 교두보 역할 강화
 - 지자체·재외동포·전문가그룹·기업 등 다양한 국민들이 주체로 참여하는 공공외교 역량 강화 및 추진 체계 구축, 청년들의 해외 진출 기회 확대
- (외교 인프라 혁신 및 외교 인력 전문성 증진) G7+ 외교강국 실현을 위한 외교 인프라 정비 및 인사·교육훈련 혁신을 통한 전문인력 육성·확보
- (재외공관의 통합·조정 역할 강화) 재외공관 역할 강화를 통한 범정부 차원의 대외 집행 체계 혁신

□ 기대효과

- 우리 외교의 역할 공간을 확대함으로써 국제사회와 협력의 폭과 깊이를 심화시키고 안보·경제·문화 등 다방면에서 실질적 국익 신장에 기여
- 글로벌 현안 대응과 국제규범 형성에서 주도적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다자외교 리더십을 확보하고 외교 강국으로서의 위상 제고

121 경제 안보·통상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외교 역량 강화 (외교부)

□ 과제목표

- 경제안보 조정·통합 기능 강화 및 신흥·첨단기술 분야 과학기술 외교 적극 추진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외부 충격에 대한 효과적 대응 기반 마련
- 다자경제 협의체 의장국 수임을 통해 글로벌 논의를 선도하고 재외공관 수출·수주 지원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국가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

□ 주요내용

- (경제 안보 조정·통합 강화) 글로벌 통상·경제안보 이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경제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경제안보점검회의」 정례화 추진
- (다자경제 협의체 의장국 수임을 통한 글로벌 경제외교 선도) '25년 APEC, '28년(잠정) G20 의장국으로 글로벌 현안에 적극 대응
 - 디지털·AI, 기후, 공급망 등 글로벌 현안 논의를 주도하고 개도국과 선진국 간 교량 역할을 수행하여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 성장에 우호적 여건 조성
- (우리기업의 수출·수주 지원을 위한 재외공관의 전진기지화) 민관 협업 체계를 수립하고, 재외공관의 정보수집·네트워킹·홍보 등 역할 강화
- (신흥·첨단기술 분야 중심의 과학기술외교 강화) 주요국들과 기술-안보 융합형 첨단기술 외교를 강화하고, 국제규범 형성에 적극 참여하는 과학기술외교 전개
 - AI·우주·퀀텀·바이오 등 첨단기술 관련 양·다자 협의체에 적극 참여

□ 기대효과

- 경제안보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민관 소통을 강화하여, 해외발 리스크가 우리 경제·민생에 끼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가 경제의 회복력과 안정성 제고
- 글로벌 경제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를 주도하여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우리기업의 해외진출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유리한 대외 경제환경 조성

122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향한 실질적 진전 추구 (외교부)

□ 과제목표

- 한미협의를 기반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재개 촉진 및 단계적 비핵화 전략 마련·추진
-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구조 구축 프로세스를 유기적·병렬적으로 진행

□ 주요내용

- (한미협의를 한반도 긴장 완화로 북핵 대화 여건 조성) 한반도 긴장 완화 조치와 한미 간 협의를 바탕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북미협상 촉진
 -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기반 위에 중·러 등 주변국의 건설적 역할 견인
- (단계적·실용적 접근을 통한 비핵화 진전 추구) 한미협의를 바탕으로 동결-감축-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비핵화 전략 마련 및 이행 추진
 - 단계적 합의, 동시행동을 통해 합의 이행을 촉진시켜 나가고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 지속 강화
- (비핵화-한반도 평화구조 구축 병행 추구) 남북대화 및 북미협상을 병행 추진하여,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구조 구축 프로세스 이행 여건 조성
 - ▲비핵화-평화체제 ▲남북대화-북미협상 선순환적 발전 추진
 - 중장기적으로 한반도·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4자·6자 협력 틀 가동 추진

□ 기대효과

- 한반도 긴장 완화로 남북, 북미 간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한미간 긴밀한 협의를 기반으로 비핵화 조치 및 상응 조치의 단계적 합의-동시이행을 통해 북핵 위협을 실질적으로 감축하고, 중장기적으로 비핵화 달성 추진
- 남북대화와 북미협상을 선순환적으로 발전시켜 비핵화 협상을 추동하며, 국제사회와 협력해 지속 가능한 평화구조를 구축

123 재외국민 안전과 편의 증진 및 재외동포 지원 강화 (외교부·동포청)

□ 과제목표

- 해외위난 및 사건사고 예방·대응 체계 선진화 및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영사서비스 개선
- 동포사회가 체감할 수 있도록 핵심 민원 해결 등을 통해 재외동포 지원을 강화하고, 동포 역량을 활용한 대한민국의 미래성장 동력 확보

□ 주요내용

- (촉촉한 재외국민 보호망 구축) 선제적 예방 중심의 재외국민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재외국민 보호망 구축
 - ▲ 해외안전여행 정보 플랫폼 및 영사콜센터 상담시스템 고도화 ▲ 제2차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26-‘30) 수립 ▲ 해외재난 유관부처간 협력 및 민관 협력 강화 등
- (국민 편의 증진) 해외출국자 수 3천만 명 시대에 발맞추어 해외 출입국·체류 편의 증진 및 청년 해외진출 강화
 - ▲ 여권사무 대행기관 확대 설치 ▲ 모바일 여권정보 증명서비스 민간 개방 ▲ 사증면제·운전면허 상호인정·워킹홀리데이 협정 대상국 확대 등
- (맞춤형 동포 지원) 동포들의 한인 정체성 함양, 역사적으로 희생·헌신한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 강화
 - ▲ 한글학교 역량 강화 ▲ 복수국적제도 개선 ▲ 재외선거 참정권 보장 확대(재외선거 참여 편의 제고) ▲ 사할린동포 및 입양동포 등 지원 강화 ▲ 재외국민의 국내 온라인 서비스 접근성 제고 등
- (동포 역량 극대화) 동포사회의 민간외교 활동 지원, 국내 체류 동포 지원 강화, 동포 청년인재의 국내 유치·정착 지원, 「한상경제권」 구축
 - ▲ 다양한 동포구성원의 민간외교 활동 지원 강화 ▲ 국내 동포 정착 지원을 위한 지자체·시민단체와의 협업 강화 ▲ 국내청년 해외동포기업 인턴십 확대
 - ▲ 「동포기업-국내기업」 연계를 통한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재외동포와의 소통 플랫폼 구축 등

□ 기대효과

- 동시다발적 해외위난 및 사건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 국민의 해외 출입국·체류 편의 증진 및 청년 해외 진출 확대
- 재외동포의 체감 만족도를 제고하고, 동포사회의 역량을 국가발전에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기반 마련